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

- 1997년 이후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

이주홍

1. 서론

이 연구는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급격한 이혼율 증가의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가족의 형태와 의미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 한국의 가족은 먼저 1970년대 산업화에 의해서 조직형태 면에서 크게 변화하였고, 그 후 부부관계에 대한 평등 이데올로기가 확장되면서 기존 성역할이나 결혼에 대한 관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산업 사회로 변화하면서 서구에서는 약 200년에 걸쳐서 진행된 경제발전이 한국사회에서는 단 25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기존의 사회문화적 규범으로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에게 문화지체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1990년대에는 산업화의 영향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정보사회가 공존하는 특이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대 간 및 남녀 사이에 이질적 문화와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가족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맞추어 변화해가고 있다. 그러

이주홍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사회학). 최근 논문으로는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 - 1997년 이후 구조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2003)이 있음.

나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비교적 느리다. 가족주의가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러한 전통적 가족주의가 산업화나 정보사회에 따르는 변화와 모순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가족 규범이나 행위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과 관습적 가족주의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일정한 정도로 증가해 오던 이혼율이 1997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이혼율은 이제까지는 매년 0.1% 정도로 증가해왔으나, 1998년 이혼율이 갑자기 2.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7년의 이혼율 급증에 관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특히 경제위기라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이혼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이혼 후의 적응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나 상담 혹은 이혼 감소를 위한 개인적,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한편 양적 방법의 연구들은 통계자료가 제시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이혼율 증감의 관계가 부적관계(negative relationship)인지 정적관계(positive relationship)인지만을 기술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이나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이혼율의 증가의 구조적 측면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부 관계에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경험적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의 실직이 가족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감행되면서 1998년부터 실업률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에 따라 남편이 실직한 가정은 크게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실직 이후에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서, 실직 이후의 경제 상태 및 심리적·신체적 상태 등이 부부 갈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승권 외, 1999; 변화순, 2000; 안병철 외, 2001; 임인숙, 2000). 실직한 가장은 생계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긴장 정도가 증가한다. 자발적 실업인 경우보다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에 이러한 상황은 더 악화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강제 감원당한 실업자 가족에서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실직을 하게 되면 배우자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감소한다(조성희, 1999). 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비단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익숙해있던 생활 또는 행동 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수입 감소로 상호교환적인 사회적 의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다른 가족, 친척, 이웃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사회활동이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감소로 유지해오던 대인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상태의 악화는 실질적인 어려움 그 자체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결국 한 사람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 내지 하락은 그 자체의 어려움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직과 소득의 감소로 인한 이러한 상황들은 이혼경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는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한국의 중산층 문화의 특징을 고려할 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중산층 계층의 상당수가 중하층 계급으

로 지위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문숙재 외, 2000). 자신이 중산층으로부터 하향 이동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2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장혜경, 1999) 이들이 경제위기 이전에 누리던 중산층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그것이 가족의 만족도를 낮추는 데 기여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연구는 서구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어, 소득상실은 부부긴장과 정적 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부부관계의 불안정성과도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onger and Elder, 1990; Larson, Wilson and Beley, 1994; Voydanoff, 1990). 가장이 실직한 경우 수입이 감소하면서 생계부양자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줄어들게 되면 부부관계의 질이 낮아진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부부사이의 긴장이 증가함으로써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함으로써 긴장이 극에 달하게 되면 부부관계는 해체되기 쉽다.

한국사회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부부의 내부 관계, 즉 부부사이의 역할의 변화가 더욱 큰데, 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전통의 성역할에 강하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업으로 인해 주요 경제적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남편을 대신하여 배우자가 새로운 경제적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전통적 성역할은 도전받고 재조정된다. 이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역할 전환은 부부관계 적응도와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특히 부부사이의 역할기대가 전통적일수록 결혼생활상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불일치하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진다. 이는 결혼생활상의 역할설정에 탄력성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남편들은 과도하게 생계부양의 책임을 의식하고 있다. 맞벌이이고, 아내의 수입이 남편의 수입보다 적지 않은 부부인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부양자는 남편이라는 것을 아내와 남편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점을 증명해준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실직을 한다는 것은 아내의 취업 여부를 떠나

서 남편의 권위상실감을 유발하고 부부권력관계의 궤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의 성별화는 역할의 서열화로 이어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실직은 자신의 우위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잃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안병철 외, 2001; 한경혜, 1998; 장혜경, 1999). 또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이 실직한 후 배우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부부사이의 역할이나 권력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므로 부부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거나 자녀에 대한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조성희, 1999).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줄 만한 것이 가족스트레스이론(family stress theory)이다. 가족스트레스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가족체계가 기존의 상태로 유지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족이 변화의 압력과 심리적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장혜경, 1999: 50~51). 가족스트레스 연구의 이론적 기초인 ABC-X 모델¹⁾은 전후 사회적인 위기상황이 가족적 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으로서의 가족위기개념을 바탕으로 한다(이수정, 1997). 이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적 위기가 가족적 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을 그려볼 수 있는데 한국사회에서의 외환위기와 가족의 관련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 요인에 대해서 모든 가족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족자원이나 인지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전부터 결속력이 긴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가족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거나 위

1) ABC-X모델이란, 스트레스 유발인자 혹은 생활사건(A), 중재인자인 대처기술이나 자원(B), 스트레스 유발인지에 의해서 부과되는 요구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C), 스트레스·위기·긴장 등의 결과(X)라는 네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가족스트레스가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Hill, 1949).

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위기 이전부터 가족의 의미가 이미 퇴색한 경우에는 위기로 인한 가족해체가 더 빠르고 심각하다. 오래 전부터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되고 상호의존성이나 의사소통정도가 낮은 가족은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응력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때 관계가 해체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Hill, 1949).

가족응집력이 약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부관계에서 실직으로 인한 부부긴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연구는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안병철 외, 2001; 장혜경, 1999). 가족의 생계유지수단이 없어지면 가족성원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정도가 높았던 가족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최일섭 외, 2000). 또한 소득이 감소한 초기에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모아둔 저금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재정난이 장기화되면 가족 내부의 자원이 고갈되고 외부의 사회적 지원 또한 불가능하다면 가족의 불안정도는 매우 커진다(김현주, 1998).

2) 가족생존전략의 변화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가 이혼율 급증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생존전략(family survival strategy)이 시대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은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원과 지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을 사용한다(McCubbin, 1979). 이 대처전략은 가족이 처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위기는 부부관계의 불안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그렇지만 1997년의 경제위기가 유독 이혼율을 높게 상승하는 데 기여한 역할은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다.

한국전쟁부터 시작하여 제1차 오일쇼크, 제2차 오일쇼크,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도 한국사회에는 여러 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이혼율의 증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1997년 이후 이혼율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그 시기가 갖는 특수성과 그것이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 때문일 것이다. 1997년 이후에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전 산업분야에서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최대의 인력이 감원되었다. 그만큼 실직이 가정에 미치는 여파는 클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족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데 각 시기마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가족의 생존전략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것은 물론 남편과 몇 년간 떨어져 살거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가족이 많았지만, 이 당시 이혼율은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낮다(이태영, 1969; 1981). 또한 1, 2차 오일쇼크 때에도 이혼율이 1997년의 경제위기 때만큼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 당시 가족들에게, 특히 부부관계에서 그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대안이나 전략이 이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시기에는 위기로 인해서 가족의 결속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구에서는 전쟁과 가족안정성 사이의 부적관계를 증명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는데(장혜경, 1999) 사례연구를 통해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 남편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그에 따라 가족관계가 훼손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6·25가 가족으로 하여금 외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관이 맞물렸기 때문이라 보인다(이동원 외, 1996). 한편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가장이 실직하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유휴노동력이 가족 안에 존재했다. 예를 들어 부인이 대신 돈을 벌어오거나, 자녀들로 하여금 학업을 그만두고 직업을 구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혼 외의 다른 대안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고 해도 이혼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의 경제위기는 발생시점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전 시

기와 다르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의 성격은 시장경제체제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경제체제의 결함이나 실패는 개인과 가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장혜경, 1999: 50). 중산층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이 계층의 지위가 대규모 하향 이동하였다. 따라서 중산층의 지위에서 중하층 혹은 하층계급으로 떨어진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중산층적인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는 딜레마를 겪게 된다. 중산층이란 궁극적으로 ‘삶의 기회’를 적절히 배분받고 이를 누리고 있는 계층이다. 여기서 삶의 기회란 바로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의식과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체면치레할 만큼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필요한 만큼의 문화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계층을 의미한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이 다양하며 소득은 중상 정도로서 생활에 적극성을 띠고 활동한다. 중산층 중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타일 지향적인 성향이 더 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실용적인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저축이나 자녀교육에 소득의 많은 부분을 분배한다(문숙재 외, 2000: 45~50).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대규모 계층 하향이동하면서 경제적 여건이 본인들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데 미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가활동, 클럽활동, 쇼핑, 스포츠, 오락, 여행, 문화, 취미 등을 이전과 같이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녀교육 또한 질적, 양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게 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층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중산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현실로 인한 가족갈등이 유발된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가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가장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생계를 부양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산층의 정체성과 규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자녀로 하여금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열망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자녀의 경제활동은 유보된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대체노동력에 한계가 있고 가장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족내 갈등이 유발되면, 그것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나 대안이 매우 적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규모가 근대사 중 가장 크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고아원에 맡기거나 영아일시보호소 등에 버리는 사례가 늘었으며, 노숙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 가족동반자살의 건수가 늘어나는 등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한 것을 볼 때 그만큼 현대의 가족들에게 경제위기에 따른 대안의 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장혜경, 1999). 따라서 위기의 대안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 하겠다.

3. 이혼율 증가의 구조적 요인

이 장에서는 1997년말 발생한 경제위기가 1997년 이후 이혼율 급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조건들의 변화 속에 내재된 복합적인 측면들보다는 경제위기라는 변수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사회에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이혼율의 추이를 대략 살펴보겠다.

1) 연도별 이혼율의 변화

이혼율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이혼율²⁾(CDR)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혼율 변화의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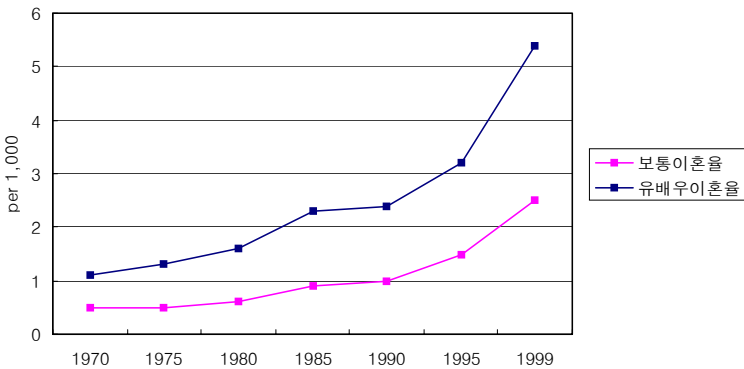
2) 보통이혼율(Crude Divorce Rate, 이하 CDR로 표기)은 전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인구를 분모로 하고, 이혼건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조이혼율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이혼율과 보통이혼율을 비교한다. 아래의 <표 1>과 <그림 1>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5년 간격으로 구한 유배우이혼율과 CDR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연도별 유배우이혼율과 CDR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유배우이혼율	1.1	1.3	1.6	2.3	2.4	3.2	5.4
CDR	0.5	0.5	0.6	0.9	1.0	1.5	2.5

자료: 통계청 경제기획원, 1970~2000,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그림 1> 연도별 CDR과 유배우이혼율 (%)

두 측정치간의 차이점은, CDR은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증가율이 0에 가깝게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유배우이혼율은 같은 시기에 10년간 0.5%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1970년부터 1980년 사이 보통이혼율은 15세 미만의 인구와 15세 이상의 미혼인구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유배우이혼율은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에 0.8% 증가하였는데, CDR은 0.4%만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유배우이혼율로 볼 때에는 이 시기에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CDR로 보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도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CDR이 이혼의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의한 bias를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부터 2000년까지 CDR과 유배우이혼율의 차이는 더 크다. CDR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0.5%, 1995년부터 2000년까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배우이혼율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0.6% 증가하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2.2%까지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에 쓰이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지는 이혼율은 CDR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이혼율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97년 이후에는 CDR도 크게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역시 유배우이혼율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유배우이혼율이 가장 적합한 측정치임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 속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매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2) 1997년 경제위기의 영향

한국사회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짧은 시간 안에 이혼율이 선진국의 수준만큼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등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들이 고이혼율사회의 사회적 조건을 만들고 그러한 풍토를 형성하였다면, 1997년의 특정한 촉진 요인이 단기간에 이혼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97년의 경제위기가 그러한 촉진 요인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겠다. 이러한 가설의 기초가 되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이혼율의 변화

이 논문에서는 경제위기가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경제위기를 나타내는 경험적인 지표들과 이혼율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경제위기를 나타내는 경험적 지표로는 실업률, 월평균가계소득, 실질임금지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한다. 다양

한 미시적, 거시적 경제지표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들만을 사용하였다. 먼저 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로 경기침체와 함께 부도업체가 급증했고, 이 때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이때부터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부도업체의 증가와 구조조정은 당장 해당업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실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그 동안 2~3%에 머물던 실업률이 1998년에 들어서 6.8%로 최고치에 달했다. 경제위기가 외환위기나 금융부문의 부실 때문에 발생한 만큼 구조조정은 이 부문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 전 분야로 확산되어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당하는 근로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8년 말부터는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1999년 초부터 종업원수가 증가하는 업체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가장 큰 사회경제적 변화는 실업의 급증이다. 99년 1/4분기의 실업률은 8.4%로 절정에 달했고, 이는 인력구조조정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박찬용 외, 1999: 30~34).

실업률은 근로자의 실직이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실업을 가리키며, 이는 곧 가정의 실직이나 실업을 의미한다. 가정이 실직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가구의 소득원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족의 경제적 형편은 어려워진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월평균가계소득이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경제위기 이후 감소한 것은 경제위기가 가계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실질임금지수는 실질임금이 기준년도와 비교할 때 얼마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월평균가계소득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997년 이후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경제위기가 근로자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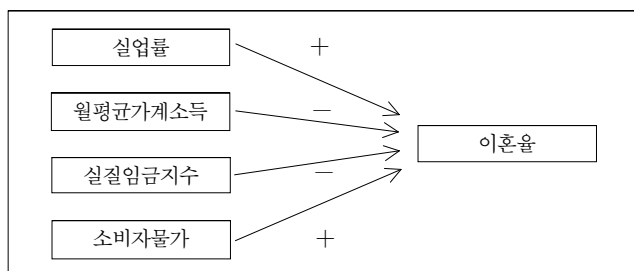
위의 세 가지 수치가 가족의 소득과 관련된 것이라면, 소비자물가는 가계의 소비와 관련된 수치이다. 소비자물가가 증가할수록 가계의 소

비는 위축된다. 또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며 월평균가계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마저 상승한다면 가계의 경제적 여건은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수치들은 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경제위기 이후 얼마만큼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제적 지표들이다. 따라서 이 지표들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특정 시기의 경제구조가 개별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197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는 3차례 시기를 구분하여 시기별 이혼율의 추이를 함께 분석하였다. 첫 번째 경제위기는 1970년대 초반의 시기로, 1960년대 후반의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물가상승, 외채증가 등이 그 원인이었다. 두 번째는 1979년과 1980년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빚어진 경제위기이다. 세 번째 경제위기는 과소비와 투기의 만연으로 인한 1989년과 1990년대 초반의 ‘총체적 난국’이다. 마지막으로 1997년의 구제금융시기를 들 수 있다.³⁾

지금까지 설명한 변수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실업률과 이혼율의 관계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실업률과 CDR의 관계를 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3) 이러한 구분은 한국은행의 분류를 따른 것이다.

<표 2> 1990~1999년 실업률과 CDR (%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실업률	2.4	2.3	2.4	2.8	2.4	2.0	2.0	2.6	6.8	6.3
CDR	1.0	1.1	1.2	1.3	1.4	1.5	1.8	2.0	2.5	2.5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통계, www.seri.org/db/dbStatL.html?s_menu=0109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 하반기에 경제위기가 발생한 후 1998년까지 실업률이 4.2% 증가하였으며, 1999년도에도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는 CDR이 급증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CDR도 0.5%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의 증가는 그만큼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족 안에서 수입이 없어지고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상실함에 따라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넘어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수입감소로 인해서 가족전체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향 이동함에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2) 월평균가계소득과 이혼율의 관계

월평균가계소득은 한 가구의 한 달 평균소득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월평균가계소득과 CDR의 관계를 보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1995~1999년 월평균가계소득과 CDR (천원, %)

	1995	1996	1997	1998	1999
월평균가계소득	1911.1	2151.7	2287.3	2133.1	2224.7
CDR	1.5	1.8	2.0	2.5	2.5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동태통계연보』.

위의 표를 보면 월평균가계소득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약 40만원 증가하였는데, 1997년부터 1998년 한 해 동안 약 20만원 감소하였다. 이는 1997년 말 경제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국가의 경제가 악화된 것이

가계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월평균가계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은 CDR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소득의 감소는 가정의 삶의 질을 훼손시키며 가계를 유지할 물질적 기반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부부 관계의 결속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1997년을 기준으로 월평균가계소득과 CDR의 급격한 변화 사이에 부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실질임금지수와 이혼율의 관계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실질임금지수와 CDR의 관계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1990~1999년 실질임금과 CDR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임금지수	71.0	76.3	82.7	88.6	94.0	100.0	106.7	109.2	99.1	110.1
CDR	1.0	1.1	1.2	1.3	1.4	1.5	1.8	2.0	2.5	2.5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실질임금지수는 기준년도의 실질임금을 분모로 하고 비교연도의 실질임금을 분자로 한 비율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명목임금지수보다 더 적합한 지표이다. 여기서는 1995년을 기준년으로 하여 계산된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즉, 1995년의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실질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실질임금은 99.1인데, 1995년과 비교할 때 0.9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위의 <표 4>를 보면, 실질임금지수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그러나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1998년의 실질임금지수는 1994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 시기 역시 CDR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실질임금지수가 IMF 위기의 발생과 동시에 감소하는 것과 같이, 이혼율의 증가도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소비자물가지수와 이혼율의 관계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와 CDR의 관계를 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1991~2000년 소비자물가지수와 CDR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소비자물가지수	80.9	85.9	90.1	95.7	100.0	104.9	109.6	117.8	118.8	121.5
CDR	1.1	1.2	1.3	1.4	1.5	1.8	2.0	2.5	2.5	2.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www.bok.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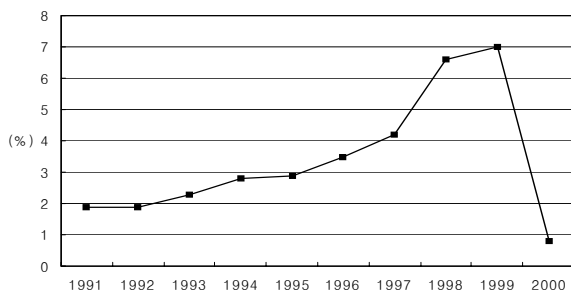
위의 표를 보면 1995년을 기준년으로 할 때,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매해 5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10 포인트가 증가하여 평소의 약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1997년 말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의 경제위기가 개별 가정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가 증가하면 소비는 위축된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과 수입이 감소하는 동시에 물가가 증가하면 경제적 여건에 대한 체감지수는 더욱 악화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와 위의 경제적 지표들을 더불어 살펴볼 때 1997년 이후 개별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계의 재정난은 부부관계의 역할구조 및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등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의 급증은 이혼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경제위기의 일면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겠다.

나. 이혼사유 분석

개별 행위자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데 경제적 요인이 얼마만큼 작용했는가는 이혼사유분석에서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드러난다.

아래 <그림 2> 연도별 이혼사유 분석⁴⁾을 보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경제문제’의 증감은 변화가 거의 없다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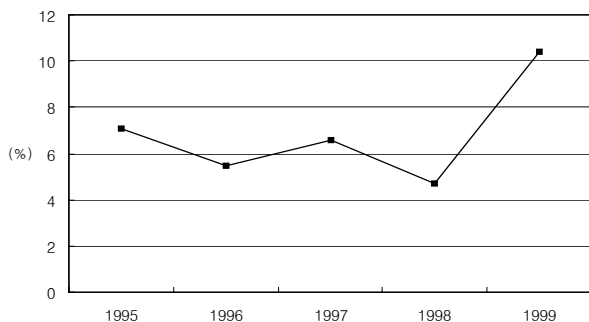
격히 증가하고, 2000년에 이르러서 급감하여 1991년부터 1993년의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림 2> 연도별 '경제적 문제' 이혼사유의 변화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동태통계연보』.

한편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서 집계한 제6호 이혼사유 중 경제관련 항목들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아내의 관점에서 보는 이혼의 사유를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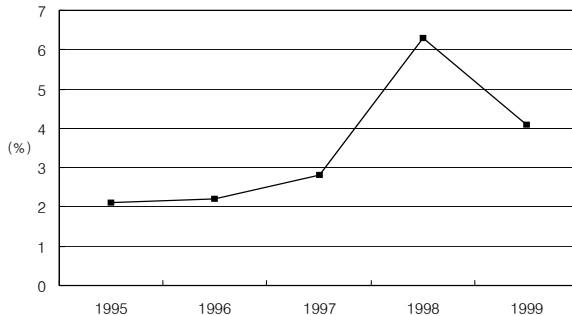


<그림 3> 6호사유 중 '생활무능력' (%)

- 4) 이 그래프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간한 『통계로 본 현대 한국가족의 제 문제』의 통계를 연구자가 다시 정리한 것이다.

여성의 이혼 사유를 집계한 것이므로 ‘생활무능력’이란 남편의 생활 무능력을 의미한다. 가장에게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것을 이혼 사유로 꼽은 비율이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1997년 말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감소 및 실직으로 인해서 가족의 수입원이 없어지거나 감소하여 가장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그래프는 또 다른 예로서 빚으로 인해 이혼한 비율을 보여준다. 이 자료도 위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입장에서 본 이혼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 이후 이 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IMF 구제금융 이후 도산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부도나 보증 등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빚이 크게 증가하였다. 빚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면서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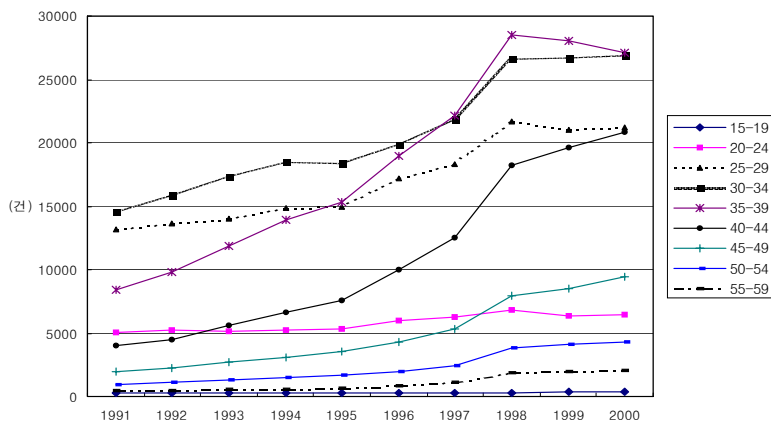
<그림 4> 6호사유 중 '빚'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혼사유와 관련된 통계자료들을 종류별로 검토해보았을 때 경제위기 이후 이혼율이 높아졌으며, 이혼사유에서도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항목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1997년의 경제위기와 이혼율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이혼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온 것은 젊은 여성들

의 이혼의 증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선택하는 장년층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이혼 사유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혼의 사유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진다. 이는 젊은 연령층이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혼율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 참고).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열망, 그를 통해서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반영되어 있었을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혼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사회전반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 즉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개인이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혼율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남편의 실직, 부도 등으로 인해서 결혼생활의 갈등이 높아진 중장년층의 이혼율이 함께 증가하면서 전체 이혼율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다음의 <그림 5>는 연령별 이혼율



<그림 5> 연령별 연도별 이혼건수

자료: 통계청,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

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 이후까지 30세부터 34세 미만, 25세부터 29세 미만이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3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여성들이 이혼율의 상승을 주도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7년 이후 35세부터 44세까지의 연령층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35세 미만 여성들의 이혼율을 넘어서고 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부터 이들 중장년층의 이혼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5세부터 34세까지의 연령층, 세 번째로 45세부터 49세까지의 이혼율이 높다. 특히 45세부터 49세의 여성들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혼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1997년부터 1998년 사이 급상승하여 2000년에는 외환위기 이전의 40대 초중반 여성들의 이혼율과 비슷해졌다. 이를 통해 외환위기가 35세 이상, 45세 이상 연령층의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IMF 경제위기가 중장년층 여성들의 이혼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외부 구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높은 이혼율을 유지하고 있던 젊은 여성층에 이들 45세 이상 여성들의 이혼율이 더불어 증가하면서 1997년 이후 이혼율을 급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회적 위기에서 가족 위기로의 확산

(1) 구조적 긴장의 확대

실직한 가정은 수입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혹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관계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이혼경향성에는 정적요인이 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실업은 실직자의 경제상태,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와는 긴장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실직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실업이 비자발적일수록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조성희, 1999: 27~43). 따라서 실업률의

증가 및 실질임금지수와 월평균가계소득의 감소, 소비자물가의 증가는 1997년 말 이후의 경제적 상황을 잘 나타내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실업은 생계유지비가 감소하는 것 이외에도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호시스템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나 보증으로 인한 주택 박탈의 위기도 있으며, 자녀 양육 및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 줄고 물가가 상승하면 가계는 지출을 줄이게 되어 이전과 같은 생활이나 행동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진다(최일섭 외, 2000: 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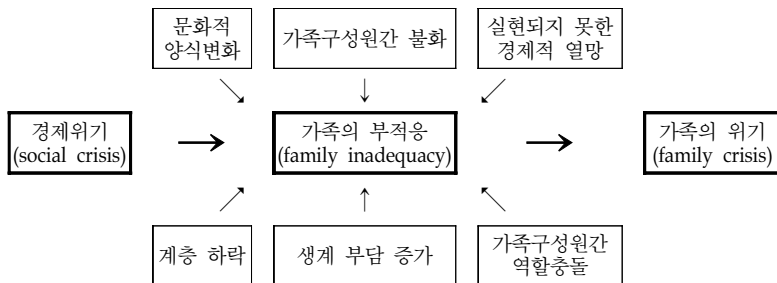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가치와 결혼규범의 점진적인 변화, 유교적 가치와 현대가족체제 사이의 긴장, 그에 따른 아노미의 증대 등의 장기적 요인들과 어우러져 가족제도에 잠재된 불안정성을 확대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2) 촉매제의 성장

스멜서의 가치부가적 과정(value-added process)⁵⁾의 개념에 따르면,

5) 'Precipitating factor'는 스멜서가 집합 행동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면서 설명한 개념 중 하나이다. 스멜서는 집합행동이 유발되는 과정을 가치부가적 과정(value-added process)라는 경제학적 용어를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집합행동을 유발하며, 전 단계가 다음 단계로 진전될 때마다 각 단계의 특정한 가치가 부가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산출(outcome)'이라고 한다면, 선행하는 단계들은 '결정요인'(determinants)라고 할 수 있다. 스멜서는 가장 중요한 여섯 가지 결정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특정한 집합 행동이 유발되는 기반인 구조적 조건, 구조적 긴장, 일반화된 믿음(generalized belief)의 발전, 촉진요인, 집합행동, 사회통제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촉진 요인은 구조적인 긴장이 만연한 상태, 혹은 일반화된 믿음 체계가 널리 퍼져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특정한 집합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요인이다. 다시 말해서 잠재되어 있던 사회적 불만이나 불안정 상태를 외면적인 형태로 표출시키는 요인이다. 촉진 요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결과에 대한 결정요소라고 할 수 없다. 촉진 요인은 다른 결정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될 때만 집합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각각의 결정 요인들은 어느 단계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건이나 상황들이 결정 요인으로서 활성화되는 것(activation of the determinants)이라고 스멜서는 설명한다(Smelser, 1976).

사회적 불만족이나 불안정 요소가 내재되어 있던 사회에서 촉진요인은 그러한 불안정이 가시적으로 표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Smelser, 1976). 이 모델을 바탕으로 1997년의 경제위기가 이혼율이 증가하는데 촉진요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1997년의 고이혼율이 단기간에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관계의 양상이 아니라, 잠재된 결정요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임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위와 아래의 6개의 상자들은 사회적 위기에 대한 가족부적응을 생산해내는 요소들을 가리킨다.



1997년 위기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은 경제위기가 촉진요인의 역할을 할 때까지 천천히 성숙되어 왔다. 여러 잠재된 결정요인들이 1997년이라는 한계점까지 성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혼에 저항하는 전통 또한 약화되었다. 전통은 이제 불만족스러운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써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식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의 유사한 경제적 상황 속에는 왜 1997년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경제적으로 고갈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분열된 상태였던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도 한국사회의 중심인 문화적 가치는 견고했다. 당시의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폭력, 전쟁 중 사망가능성 등이 가족 생존의 위협과 결부되어 가족유대감이 약화되지 않게 하는 강한 동기를 만들어냈다. 한편 1970년대에는 정치적 갈등이 덜했던 반면 군사정권의 상위하

달식 체제가 이혼과 같은 급진적이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향한 힘으로부터 가족을 방어했다. 또 1980년대에는 전반적인 정치적 불안정이 오히려 문화적 가치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 이러한 유대감의 바탕이 되는 힘들이 약화되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은 서구화된 사상과 경험들에 의해서 약화되어왔고, 그에 따라서 가족을 위기로부터 효과적으로 지지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후반의 한국사회에는 중산층 중심의 규범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단기간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실제 자신이 속해있는 계층이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중산층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대안이 매우 적고, 또한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전략이 과거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집단자살이나 남편의 가출, 노숙자의 증가, 이혼, 자녀를 고아원에 보내는 등의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나 1980년대에 발생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하되, 증가의 속도나 폭이 90년대 후반에 발생한 경제위기에 비해서 느리고 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위기 뿐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할 때 가족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안정되고 결속하거나, 혹은 반대로 불안정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런데 1997년의 경제적 상황이 후자의 방향으로 가족들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가족이 이미 정서적으로 해체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대처전략

경제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주된 형태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과, 문제의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조절하도록 기능하는 것, 그리고 개인으로 하여금 긴장이나 갈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반응 등이 있다(장혜경, 1999). 현대로 올수록 위기에 대한 가족내 행위자들의 대안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고쳐나가거나, 개인들이 긴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수준

의 방법보다는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의 가족 부양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족이 불안정해지고 정서적으로 분리되기 쉬우며 결혼 자체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버림으로써 비껴가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이 높은 이혼율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모든 가족이 가족스트레스를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대처전략은 가족이 위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자원에 달려있다. 또한 가족구성원들이 어떻게 위기를 인식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족결속의 자원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족들은 결속과 유대감이 위기 이전부터 강했을 경우에는 위기 이후에도 더욱 강하게 결속하거나 가족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경향을 보인다(Hill, 1949). 반면 유대감이 약하게 연결되어 있던 가족은 외부 변화에 대항하는 적응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족은 엄격한 일방적 사고방식과 의사소통의 오랜 유산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교환하며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직계중심 가부장적 가족은 위기가 닥쳤을 때 집합적 토론과 결정을 통해서 해결책을 간구하는 습관에 익숙하지 않다. 가족구성원들은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그러한 변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속력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열린 대화에 익숙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던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특수한 사회적 맥락, 다시 말해서 중산층의 문화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된 대체 노동력의 부재, 자녀 교육수준의 하락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게 대처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점에서 한국의 가족은 그러한 시도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업률, 실질임금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월평균가계소득의 네 가지 경험적 지표로 살펴본 결과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율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1997년 경제위기가 이혼율을 단시간에 급격히 증가시키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 이후의 이혼율이 1970, 1980년대의 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1990년대 새로이 형성된 가족문화와 경제위기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시기별 가족생존전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혼 증가라는 변화의 방향을 이끄는 힘은 구조보다는 개인에게 있었고, 그 주체가 남성이 아닌 피지배계층으로서의 여성에게 있었다. 사회적 약자가 이끌어가는 사회변화의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고, 그 집단 안에서도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여성들은 남성들만큼 관습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혼이라는 금기시되던 대안이 대중의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말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파산이나 실직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그 동안 이혼을 기피하고 가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중장년층의 이혼율 증가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변화들이 전체적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산업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갈 만한 문화적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그 속에서 가족 이데올로기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전과는 다른 새로운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새로운 노력과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과 전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여성들 사이에 성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의 경제위기는 이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 경제위기가 오히려

려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변화 속에서 가족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해체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현재 이혼의 사회적 맥락은 20세기 후반과는 또 다르다. 한국이 경제위기의 최악의 상황에서 상당 수준 회복한 후에도 이혼율은 여전히 2.5%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혼은 정상적 생애주기에서의 일탈이라고 보는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공의 승인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떻게 이혼율을 줄일 것인가라는 문제보다는 이혼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승권 외(1999), 『실업가정의 생활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주(1998), 「가족체계적 특성과 가족의 정신건강, 가족지원가능성과의 관계: 경제위기상황에서의 함의」, 『가족과 문화』, 제10집 1호.
 노동부(1990~1999),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문숙재 · 최혜경 · 정순희(2000), 『한국 중산층의 생활문화』, 집문당.
 박찬용 외(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화순(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안병철 · 임인숙 · 정기선 · 이장원(2001), 『경제 위기와 가족』, 미래인력 연구센터.
 이동원 · 함인희(1996), 「한국가족사회학 50년의 성과와 반성」, 『가족과 문화』, 창간호.
 이수정(1997), 「맞벌이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이태영(1981), 『한국 이혼율연구 I』,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태영(1969), 『한국이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인숙(2000), 「경제위기가 남편의 권위상실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학』, 제34집 겨울호.
- 장혜경(1999),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조성희(1999), 「실직이후 부부의 이혼가능성」, 『가족과 문화』, 제11집 2호.
- 최일섭·조성희(2000), 『실업과 가족해체 -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접근-』, 집문당.
- 경제기획원(1973),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 경제기획원(1982),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80』,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 통계청(1992),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통계청.
- 통계청(2001), 『2000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통계청.
- 통계청(2000), 『200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 『통계로 본 현대 한국 가족의 제문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경혜(1998), 「중년기 남성의 역할 중요도와 일/가족 갈등」, 『가족과 문화』, 제10집 2호.
- Conger, R. D., and Elder, G. H. Jr.(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s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 Hill, Reuben(1949),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 McCubbin, H. I.(1979), "Interacting Coping Behavior in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1.
- Smelser, Neil J.(1976),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Second edition by.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고령화 사회에서의 세대관계

정경희

1. 들어가는 말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를 지칭하는 세대관계는 출생시부터 시작되어 일생동안 지속되어온 관계라는 ‘지속성’과 더불어 노후에 접어드는 부모에게 사회와의 지속적인 유대와 부양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세대관계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그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 가족변화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복합성을 더하는 것은 20세기 말에 경험한 압축적인 경제발전과 압축적인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문화적인 변화이다(장경섭, 2001; 정경희, 2003).

성인자녀와 맺는 부모의 관계는 다차원적이어서, 일상적인 접촉빈도, 애정정도, 가치관의 일치여부, 도움의 제공,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 거주형태 및 거주거리라고 하는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다. Bengtson & Roberts(1991)에 이러한 세대가 맺고 있는 유대를 6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 관계적 유대(associational solidarity), 감정적 유대(affectual solidarity), 교감적 유대(consensual solidarity), 기능적 유대(functional solidarity), 규범적 유대(normative solidarity), 구조적 유대(structural solidarity)라고 칭하고 있다.¹⁾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세대관계의 복합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팀장, 부연구위원(사회학). 최근 논문으로 「노인수발과 가족정책」(2002), 최근 저서로는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공저(2002) 등이 있음.

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김두섭 외, 2001; 박경숙, 2002). 또한 세대관계의 복합성에 관심을 둔 연구들도 경험적인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세대관계의 다양한 차원 중 일부 차원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험적 자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노인들이 맺고 있는 세대관계의 복합성을 살펴보고, 세계 초유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정서적 핵가족화, 양성평등적 사회의 도래(한경혜, 1998; 함인희, 1993) 등의 맥락에서 세대관계의 각 차원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인구고령화 및 가족변화

1) 인구고령화

우리나라는 총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인 고령화 사회를 이미 넘어서 14%인 고령사회를 향하고 있다. 2003년 현재 노인 인구는 3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731만 4천명으로 급증하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예견된다(통계청, 2001). 이러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가 노년부양비인데, 2003년도에는 노년부양비가 10.1%이지만 2019년도의 경우는 노년부양비가 20.2%가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현재는 8.6명의 생산가능연령층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지만, 2019년에는 4.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가능연령층이 가지는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즉, 생산활동에의 참여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중심적

1) Silverstein & Bengston(1997)은 애착(affinity), 기회구조, 기능적 교환관계를 기본틀로 하여 세대관계를 유형화한 바 있으며, 생애사적 관점에서 세대간의 관계를 분석한 Rossi & Rossi(1990)는 관계적, 기능적, 교감적, 감정적 유대의 4차원으로 살펴보고 있다.

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노인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여, 생산가능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세계 초유의 급격한 출산력의 저하 정도를 보면, 1980년도의 2.8에서 20년 후인 2000년에는 1.5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졌다. 이러한 출산력의 저하는 앞으로 1.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사망력의 증대는 평균수명의 증대로 이어져 노년기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계는 모두 중위추계에 기초한 것이지만 저위추계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출산력이 더 급격하게 낮아진다면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노인인구의 증가도 더 빨라질 것이다.

<표 1> 인구학적 변화

구분	1980	1990	2000 고령화사회	2003	2019 고령사회	2026 초고령사회
합계출산률(명) ^{1)a)}	2.8	1.6	1.5	1.4	1.4 ²⁾	1.4 ²⁾
(저위추계)	2.8	1.6	(1.5)	(1.4)	(1.3)	(1.2)
평균수명 ^{1)b)}						
남자(세)	62.3	67.7	72.1	74.4	77.5	78.0
여자(세)	70.5	75.9	79.5	81.2	84.1	84.5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b)}	3.8	5.1	7.2	8.3	14.4	20.0
노년부양비 ^{b)}	6.1	7.4	10.1	11.6	20.2	29.7

주: 1) 각각 1981, 1991, 2000, 2005, 2020, 2025년 자료임.

2) 장래인구추계시 중위추계 가정.

자료: a) 통계청, 2001, 『2001 한국의 사회지표』.

b)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2) 자녀수의 감소

출산력의 저하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인구고령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현존자녀수의 감소로 나타난다. 연령군별로 현존자녀수를 비교해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는 4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지만, 30~40대는 2명 내외의 자녀를 갖고 있어 출산력의 저하가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라고 하는 인구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현격한 연령층별 자녀수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노인부

양비는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부양부담의 정도를 살펴보는 지표라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녀수는 신체적인 부양과 정서적인 부양을 모두 포함하는 다측면적인 부양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한경혜, 1997). 따라서 자녀수가 적다는 것은 그 만큼 세대관계를 맺을 수 있고 신체적 부양과 정서적인 부양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연령군별 현존자녀수

연령군 ^{a)}	자녀수(명)	연령군 ^{b)}	자녀수(명)
15~24세	0.8	65~69세	4.14
25~29세	1.1	70~74세	4.44
30~34세	1.7	75~79세	4.71
35~39세	2.0	80세 이상	4.39
40~44세	2.1		

자료: a) 김승권 외,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b) 선우덕 외, 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3) 가족주기 확대에 따른 세대간의 기간 증대

가족주기의 변화는²⁾ 자녀출산과 양육기의 단축 및 빈 등지 시기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가족주기의 확대가 가족관계에 갖는 변화중 아직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은 부모로서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맺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 노년기의 후반부를 보내고 있는 세대의 경우 결혼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15.6년인데 비하여 현재 중장년층은 결혼한 자녀 즉 자신의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을 갖고 있는 자녀와 성인 대 성인으로서의 관계를, 또는 3세대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매우 길어져 30년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현 노인세대의 경우 이러한 기간이 전체 가족주기의 약 1/3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중장년층의

2) 최근의 우리나라의 가족주기의 변화의 원인으로는 결혼연령의 상승, 적은 자녀의 출산, 짧은 자녀터울,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경우는 50%를 넘고 있다. 그 만큼 세대간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이 커졌다 하겠다.

<표 3> 가족주기 각 단계별 기간

(단위: 년)

부인의 연령	결혼 코호트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해체기	성인자녀의 부모로서의 기간(A)	전체 기간 (B)	비중 (A/B)× 100
(78~87) ¹⁾	1935~1944	4.1	15.5	9.3	15.5	-5.8	5.9	15.6	44.5	35.1%
(68~77) ¹⁾	1945~1954	3.2	12.6	12.9	12.6	-2.6	7.0	17.0	45.7	37.2%
63 ⁺²⁾	~1959	2.37	10.90	14.80	10.90	9.51	8.56	28.97	57.04	50.8%
53~62 ²⁾	1960~1969	1.71	6.80	19.60	6.80	10.49	12.46	29.75	57.86	51.4%
43~52 ²⁾	1970~1979	1.44	3.95	23.75	3.95	13.56	12.31	29.82	58.96	50.6%
33~42 ²⁾	1980~1989	1.33	3.21	24.49	3.21	14.78	12.81	30.8	59.83	51.5%
23~32 ²⁾	1990~2000	1.22	2.35	25.35	2.35	19.33	12.24	33.92	62.84	54.0%

주: 1) 부인의 현재 연령군은 1959년도 이전 결혼 코호트의 초혼연령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1) 공세권 외, 『한국의 가족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7.

2)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3. 세대간 관계의 다차원성

1) 관계적 유대(associational solidarity)

가장 가시적으로 세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관계적 유대이다. 통상 관계적 유대는 접촉빈도 및 연락빈도를 통하여 파악된다. 노인의 77.3%는 월 1회 이상 별거자녀와 접촉하고 있으며, 49.8%는 주 1회 이상 접촉하고 있다. 또한 연락빈도를 보면 동비율이 각각 94.6%와 74.5%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세대관계는 관계적 유대라는 점에서는 매우 유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별거자녀와의 접촉 및 연락빈도

(단위: %)

빈도	전체	빈도	전체
접촉빈도		연락빈도	
거의 매일	12.3	자주 만나므로 별도의 연락 필요없음	2.0
주 2~3회 정도	12.1	하루 1회 이상	20.6
주 1회 정도	16.4	주 2~3회 정도	30.4
2주에 1회 정도	15.8	주 1회 정도	21.5
월 1회 정도	20.7	2주에 1회 정도	11.3
3개월에 1회 정도	15.7	월 1회 정도	8.8
6개월에 1회 정도	3.5	3개월에 1회 정도	3.0
년 1회 이하	2.3	6개월에 1회 정도	0.6
특별한 경우에만 만남	0.4	년 1회 이하	0.4
전혀 만나지 않음	0.8	특별한 경우에만 연락	0.2
따로 산지 얼마되지 않음	0.0	전혀 연락 없음	1.2
계 (명)	100.0 (2,094)	계 (명)	100.0 (2,094)

자료: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 애정적 유대(affectual solidarity)

세대관계가 항상 돈독한 애정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애정 외에도 의무감도 세대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로 지적되곤 한다.³⁾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애정적인 유대는 딸/아들 여부와 애정의 대상이 아버지인가 아니면 어머니인가에 따라서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si & Rossi, 1990).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자녀와 부모의 애정적 유대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단지 간접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통하여 세대관계에서의 감정적 유대가 다양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있는 성인자녀의 61.0%만이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3) 노부모 수발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Cicirelli(1989)는 자녀가 노부모를 수발하게 되는 동기를 형평(equity)과 의무(obligation), 애착(attachment)에서 설명하고 있다.

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50%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관계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60세 이상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56.9%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사회의 노부모들의 약 절반 정도만이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기초해볼 때 노인의 약 절반만이 그들의 자녀들과 만족스러운 애정적인 유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5>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15세이상 인 구	만 족			보통	불 만		
			매우	약간			약간	매우
부모와의 관계	100.0	61.0	32.7	28.4	34.4	4.6	3.7	0.9
15~19세	100.0	67.8	34.8	33.0	26.9	5.3	4.2	1.1
20~29세	100.0	68.8	39.0	29.8	27.6	3.6	2.9	0.6
30~39세	100.0	63.0	35.1	27.9	33.1	3.9	3.3	0.6
40~49세	100.0	50.7	25.0	25.7	43.5	5.8	4.7	1.1
50~59세	100.0	46.8	21.8	25.0	46.9	6.3	5.0	1.3
60세이상	100.0	47.5	19.9	27.6	47.7	4.8	4.0	0.8
자녀와의 관계	100.0	69.1	39.1	30.0	26.6	4.3	3.6	0.7
15~19세	100.0	100.0	73.4	26.6	-	-	-	-
20~29세	100.0	87.2	69.0	18.2	12.0	0.8	0.6	0.2
30~39세	100.0	82.0	55.5	26.5	16.5	1.5	1.4	0.1
40~49세	100.0	68.8	37.5	31.2	27.1	4.1	3.6	0.5
50~59세	100.0	61.3	29.7	31.6	33.5	5.2	4.5	0.7
60세이상	100.0	56.9	23.1	33.8	35.5	7.6	6.1	1.5

자료: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결과』 보도자료, 2003. 2.

3) 교감적 유대(consensual solidarity)

부모와 자녀가 유사한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세대간의 가치관적 유대가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서구의 경우 정치, 종교, 인생관에 대한 부모-자녀의 가치관의 일치도에 대한 검토(Rossi & Rossi, 1990)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으며 단지 연령군별 가치관의 일치여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노인들이 성인 자녀와 맺고 있는 가치관적 유대의 정도를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부장적 문화로부터 양성평등적 문화로의 전환과 개인주의적 사고로의 변화 등을 경험하고 있어 결혼관 및 성역할에 대한 변화가 크다. 또한, 경험적 자료의 제한도 있어, 여성취업 및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견해,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봄으로써 가치관적 유대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취업과 관련하여 가정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가진 비율이 60세 이상의 경우는 16.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높고, 30~39세군의 경우 동비율이 7.2%에 불과하다. 또한 가사분담에 대해서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0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17.5%인데 비하여 30~39세 군의 경우는 5.8%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지지는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가져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관련 이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Rossi & Rossi, 1990; Bengston et als., 1990) 경향을 보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한편, 결혼과 관련해서는 60세 이상이 삶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하여 30대 이하에서는 선택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혼에 대해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0세 이상의 경우 80.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30대 이하에서는 50% 내외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 노부모세대는 결혼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관계라는 가치관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비하여 자녀세대는 이혼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 세대간의 가치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혼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30대 이후로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족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에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단위 : %)

	15세이상 인구	가정에만 전념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결혼전 까지	첫 자녀 출산전 까지	자녀 성장후	결혼전과 자녀 성장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모르 겠음
전국	100.0	8.1	86.6	5.2	6.8	13.8	25.4	35.4	5.2
15~19세	100.0	3.9	86.4	5.5	7.7	5.6	17.0	50.6	9.7
20~29세	100.0	3.6	91.5	4.5	9.5	7.5	25.3	44.7	4.9
30~39세	100.0	7.2	89.1	3.5	5.6	18.8	30.0	31.3	3.7
40~49세	100.0	7.9	88.7	4.6	4.3	18.5	29.3	31.9	3.4
50~59세	100.0	9.7	86.4	6.9	7.6	14.5	24.8	32.6	3.8
60세이상	100.0	16.7	74.4	8.2	7.2	12.5	18.8	27.7	8.9

자료: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결과』 보도자료, 2003. 2.

<표 7> 가사분담 견해

(단위 : %)

	15세이상 인구	부인이 주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도	남편이 주로,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전 국	100.0	65.9	7.2	58.7	30.7	3.3	2.8	0.5
15~19세	100.0	33.9	1.2	32.7	64.6	1.5	1.3	0.2
20~29세	100.0	50.4	2.0	48.5	47.8	1.8	1.6	0.2
30~39세	100.0	74.2	5.8	68.3	23.2	2.6	2.0	0.6
40~49세	100.0	74.9	7.6	67.3	20.2	4.9	4.0	0.8
50~59세	100.0	73.2	9.2	64.0	21.5	5.3	4.6	0.8
60세이상	100.0	74.1	17.5	56.6	22.0	3.9	3.4	0.5

자료: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결과』 보도자료, 2003. 2.

<표 8>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

	15세 이상 인구	결 혼			이 혼			재 혼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는 안된다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좋다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 야 한다
합 계	100.0	69.1	27.2	2.0	58.4	32.9	6.6	20.7	52.0	16.7
15~19세	100.0	57.6	36.0	1.8	41.7	42.7	9.5	14.1	57.7	11.3
20~29세	100.0	64.7	32.1	1.6	44.2	45.2	8.2	18.8	61.1	9.0
30~39세	100.0	59.9	35.5	3.0	52.5	38.5	7.2	18.0	56.4	14.7
40~49세	100.0	67.0	29.5	2.0	61.2	30.7	6.5	20.9	49.7	19.4
50~59세	100.0	81.2	16.2	1.5	70.8	23.4	4.6	24.7	46.4	20.1
60세이상	100.0	87.6	9.5	1.2	80.1	13.5	3.7	27.5	38.1	26.3

자료: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결과』 보도자료, 2003. 2.

<표 9> 수발자와 수발대상 노인과의 가치관의 일치율

(단위: %)

특성	불일치	일치	계(명) ¹⁾
부모의 의식주 관련 생활비 마련	52.4	47.6	100.0 (658)
29세 이하	66.7	33.3	100.0 (36)
30~39세	64.4	35.6	100.0 (87)
40~49세	57.5	42.5	100.0 (146)
50~59세	52.2	47.8	100.0 (92)
60세 이상	45.2	54.8	100.0 (294)
부모 건강 악화시 자녀 중 노부모 부양책임	59.1	40.9	100.0 (658)
29세 이하	80.6	19.4	100.0 (36)
30~39세	73.9	26.1	100.0 (88)
40~49세	69.9	30.1	100.0 (146)
50~59세	62.0	38.0	100.0 (92)
60세 이상	45.9	54.1	100.0 (294)

자료: 정경희 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2001.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세대를 단위로 하여 가치관을 분석한 유일한 자료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결과(정경희 외, 2001)를 보면, 부모의 의식주 관련 생활비 마련에 대한 의식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가치관의 일치율이 47.6%에 불과하며 부모 건강 악화시 자녀 중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식의 경우도 40.9%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치율은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낮아지고 있다.

1) 기능적 유대(functional solidarity)

성인자녀들과 부모는 조언을 제공하거나 위안을 주는 등과 같은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질병시 수발을 제공하는 신체적 수발, 경제적인 도움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제적 도움, 가사, 수선, 집 관리와 같은 도구적 도움을 주고받는다. 우리의 경우 세대간의 기능적 유대는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도움의 제공 여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부양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인의 약 70%는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녀로부터이다. 자녀와 동거할 경우 경제적인 부양은 필수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77.6%가 부양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중 자녀가 주부양자인 비율을 감안하면, 약 60% 정도가 자녀로부터의 정서적인 측면의 기능적 유대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체적 부양의 경우 수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노인 중 74%가 수발을 받고 있으며 노인부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자녀가 가장 중요한 신체적 수발자이다. 즉,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모두 노부모와 중요한 기능적 연대를 맺고 있다.

<표 10> 부양종류·가구형태별 부양율 및 부양자¹⁾

(단위: %)

특성	대상자 수	부양율	주부양자							계
			배우자	장남 며느리	그 외의 아들 며느리	딸·사위	미혼자녀	친구· 이웃	기타	
경제적 부양 ^{a)}	(2,221)	69.2	-	46.8	20.4	16.4	6.8	-	9.7	100.0
노인독신	(419)	54.9	-	37.1	12.3	21.6	0.6	-	28.4	100.0
노인부부	(637)	45.1	-	52.3	17.8	16.9	2.1	-	10.9	100.0
자녀동거	(1,052)	90.1	-	48.1	23.7	15.2	10.2	-	2.9	100.0
기타	(114)	62.7	-	38.2	13.8	13.8	0.9	-	33.4	100.0
정서적 부양 ^{a)}	(2,219)	77.6	32.9	21.4	7.7	14.1	1.4	16.8	5.7	100.0
노인독신	(419)	67.9	1.9	20.9	5.7	23.5	1.0	34.0	13.0	100.0
노인부부	(639)	84.2	63.1	15.7	2.2	8.1	0.1	8.1	2.7	100.0
자녀동거	(1,058)	77.7	24.2	26.0	11.9	15.1	2.6	15.5	4.7	100.0
기타	(103)	75.4	21.8	15.9	6.6	10.6	0.0	27.2	17.9	100.0
신체적 부양 ^{b)}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기타가족	비혈연	기타	계
신체적 부양 ^{b)}	(2,287)	74.0	31.5 (21.9)	6.7 (9.9)	35.1 (25.2)	13.5 (7.1)	4.8 (4.7)	3.5 (6.1)	4.9 (25.2)	100.0 (100.0)
노인독신	(490)	61.6	0.0 (0.0)	4.3 (5.0)	8.4 (4.5)	32.8 (7.3)	8.3 (2.7)	16.1 (24.8)	30.1 (55.8)	100.0 (100.0)
노인부부	(510)	73.1	90.4 (67.8)	1.8 (1.6)	0.0 (0.8)	5.1 (1.1)	0.0 (0.0)	1.8 (3.6)	0.9 (25.2)	100.0 (100.0)
자녀동거	(1,166)	78.9	14.4 (10.9)	9.0 (15.5)	50.9 (44.2)	15.2 (9.5)	2.7 (4.3)	3.1 (1.2)	4.8 (14.5)	100.0 (100.0)
기타	(120)	80.2	24.6 (21.1)	0.0 (3.1)	8.0 (0.0)	10.8 (5.9)	52.6 (34.4)	4.0 (4.3)	0.0 (31.3)	100.0 (100.0)

주: 1) 부양율은 ADL과 IADL, 간이지능검사에 기초하여 장기요양보호대상으로 파악된 노인을 대상으로 산출된 것이며, 주수발자는 ADL과 IADL상의 제한이 있어 각각의 경우 수발자를 조사한 것임.
IADL 상의 제한이 있을 때의 수발자는 괄호 안에 제시되었음.

자료: a)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8.

b) 선우덕 외,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2001.

또한, 노부모도 그들의 성인자녀들에게 기능적 유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양의 경우 26.5%가, 정서적 부양의 경우 55.6%가 타인에게 부양을 주고 있으며, 주제공자와의 관계를 감안해보면 노인의 약 15% 정도가 자녀에게 기능적 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

<표 11> 부양종류·가구형태별 부양제공률 및 주제공자¹⁾

(단위: %)

특성	대상자 수	부양 율	주제공자								기타	계
			배우 자	장남 며느 리	그외의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미혼 자녀	손자 녀 배우 자	사회 단체 및 불우 이웃			
경제적 부양	(2,221)	26.5	-	30.0	10.1	9.1	8.9	25.1	8.8	8.0	100.0	
노인독신	(419)	21.0	-	35.5	7.2	14.7	5.8	17.3	13.8	5.6	100.0	
노인부부	(637)	30.1	-	50.4	9.6	5.2	3.0	12.0	8.4	11.4	100.0	
자녀동거	(1,051)	24.7	-	16.0	13.2	11.4	15.6	31.2	7.7	5.0	100.0	
기타	(114)	42.4	-	13.6	0.0	1.2	1.3	60.5	7.4	15.9	100.0	
정서적 부양	(2,219)	55.6	31.5	11.2	4.5	9.7	1.2	1.1	33.7	7.0	100.0	
노인독신	(419)	47.4	1.3	10.7	3.0	14.3	2.0	1.0	55.0	12.8	100.0	
노인부부	(636)	65.6	57.1	9.7	2.4	5.6	0.3	0.0	20.5	5.0	100.0	
자녀동거	(1,050)	53.2	23.3	13.4	6.5	11.9	1.7	1.2	35.8	6.1	100.0	
기타	(114)	52.5	31.3	3.2	5.4	2.6	0.0	8.1	34.3	15.3	100.0	

자료: 1)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8.

라서 세대관계의 기능적 유대는 양방향적인 것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도움보다는 자녀가 부모에게 다양한 측면의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2) 규범적 유대

서구의 경우 현대 가족에서 높은 수준의 자녀의 책임(filial responsibility)이 유지되고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Finley, Roberts & Banaham, 1988; Seelbach & Sauer, 1977). 그러나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로부터의 도움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도 보고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자녀가 노부모 부양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약 70%이며, 자녀와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응답이 18.2%로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하여 모든 연령층이 자녀의 노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즉 세대관계에서 성인자녀가 그들의 부모에 대하여 느

<표 12>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15세 이상 인구	스스 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 사회	정부 사회	기타
				장남	아들 들	딸(들)	아들 과 딸들	자식 중 능력 있는 자			
전 국 연 령	100.0	9.6	70.7	15.1	13.9	1.0	19.5	21.2	18.2	1.3	0.2
15~19세	100.0	11.2	67.5	9.4	8.6	2.2	21.1	26.2	19.3	1.8	0.3
20~29세	100.0	9.0	66.5	10.8	11.1	1.4	21.4	21.8	23.0	1.3	0.2
30~39세	100.0	7.9	68.3	12.3	14.2	0.9	20.7	20.2	22.5	1.1	0.1
40~49세	100.0	7.5	74.0	13.4	16.0	0.7	21.2	22.7	17.1	1.2	0.2
50~59세	100.0	11.0	73.7	17.3	15.9	0.5	17.3	22.7	14.0	1.2	0.2
60세이상	100.0	13.6	74.8	28.5	15.5	0.7	13.9	16.1	9.8	1.6	0.2

자료: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결과』 보도자료, 2003. 2

끼는 책임감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양행위로 이어지는 의무감은 많이 약화되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1년도에 실시한 『2001년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에 의하면 현재 수발을 하고 있는 가족수발자가 응답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가족성원이 책임을 지고 수발해야

<표 13> 수발자의 연령별 부모 수발에 대한 의식

(단위: %)

특성	전적으로 가족성원이 책임지고 수발	수발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족이 수발	와상시 노인요양원 입소	수발필요 상태시 노인요양원 입소	계(명)
29세 이하	54.0	24.0	18.0	4.0	100.0 (50)
30~39세	54.4	17.6	24.8	3.2	100.0 (125)
40~49세	57.7	16.2	22.1	4.1	100.0 (222)
50~59세	61.1	10.3	24.0	4.6	100.0 (175)
60세 이상	67.4	10.1	17.6	4.9	100.0 (426)

자료: 정경희 외, 200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이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다는 응답율이 그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수발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 구조적 연대

한편 노인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노인의 50.9%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전형적인 확대가족형태인 기혼자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노인은 35.7%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율은 20년 전인 1980년 자료와 비교해보면 큰 변화이다. 즉 1980년에는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이 61.7%였던 것에 비하여 35.7%로 급감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을 노인의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85세 이상인 경우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70% 내외로 급증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노인들의 연령대별 거주형태(2000년)

(단위: %)

	1980	전체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자녀없이사는 비율	19.5	50.9	56.0	54.7	47.8	37.1	25.6	18.8
1인가구 거주비율	(4.8)	(16.8)	(14.3)	(19.2)	(20.2)	(17.2)	(13.8)	(7.3)
부부가구 거주비율	(10.1)	(29.2)	(36.4)	(30.6)	(23.2)	(16.0)	(7.9)	(5.7)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	61.7	35.7	24.6	34.0	44.3	56.3	67.9	73.4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	18.8	13.4	19.4	11.3	7.9	6.6	6.5	7.9

자료: 김정석, 2002, 「가족과 가구」,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pp. 247~282.

<표 15> 노인의 연령별 자녀의 거주장소

(단위: 천명, %)

	계	자녀의 거주장소						자녀 없음
		같은 집	같은 읍면동	같은 시군구	같은 시도	다른 시도	해 외	
계	3,371	49.0	10.4	12.3	7.4	18.1	0.4	2.4
65~69세	1,376	44.0	10.9	13.9	8.5	20.3	0.4	2.0
70~79세	1,519	48.0	10.9	12.4	7.5	18.2	0.4	2.6
80~89세	433	65.3	7.8	7.3	4.4	12.0	0.3	2.7
90세이상	43	80.5	4.3	3.2	2.7	5.8	0.2	3.2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집계결과(여성·아동, 고령자, 1인가구부문)』, 2002. 7.

자녀가 없는 노인은 24%에 불과하여 절대 다수의 노인들이 자녀와 세대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녀와의 거주장소에 기초하여 노인의 거주형태를 분류해보면 49.0%는 확대가족을 10.4%는 같은 읍면동에 살고 있는 자녀와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주고받는데 적합한 ‘수정확대가족’을 이루고 있고, 40.6%는 핵가족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노인의 거주형태가 전통적인 자녀와의 동거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전 세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개인주의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2년에 실시된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중 53.0%만이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고 24.9%는 자주 만나 식사를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20.1%는 가끔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세대관계에서도 일정한 독립성과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60~64세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6>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단위: %)

	60세이상 인 구	같이살고 싶 다	같이살고 싶지않다	자주만나식사, 이야기 합	가끔 만나 이야기 합	왕래없이 살고싶다	기 타
2002 전 국	100.0	53.0	45.8	24.9	20.1	0.8	1.2
60~64세	100.0	43.5	55.5	31.6	23.3	0.6	1.0
65~69세	100.0	49.7	49.3	27.1	21.2	1.0	1.0
70~79세	100.0	60.3	38.5	19.1	18.4	1.0	1.3
80세이상	100.0	75.9	21.6	11.8	8.8	0.9	2.4

자료: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 보도자료』, 2003.

이러한 세대관계의 제 측면에서 나타난 특징은 높은 수준의 규범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여 관계적 유대와 기능적 유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애정적 유대와 교감적 유대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구조적 유대도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4. 미래의 세대관계 전망

이 절에서는 세대관계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그러한 다차원이 고령화의 진전과 세대관계를 둘러싼 가족환경과 사회적 인 변화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1) 관계적 유대

‘가족쇠퇴론’을 주장하는 Poponoe(1993)는 가족쇠퇴의 한 증거로 핵가족화의 증가를 들면서, 가족의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더 이상 노부모를 가족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게 되었으며 세대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들은 성인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핵가족화라고 하는 가족형태를 보이지만, 그들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ilverstein & Bengtson, 1997; Whitbeck, Hoyt and Huck, 1994). 실제로도 우리사회에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지배적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효규범에 동조하려는(장경섭, 2001) 심리로 인하여 가장 가시적인 효규범의 실천이며 다른 가치관들⁴⁾과 비교적 충돌이 적은 부모와의 접촉 및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애정적 유대

세대관계의 여러 차원중 애정적 유대는 성별 차이가 심한 측면이다. 기존의 세대관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세대간의 애정적인 유대의 정도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어머니인가에 따라서 또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가 딸인가 아들인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가장 애정적인 유대가 강한

4) 장경섭은 한국에 공존하고 있는 가족가치관을 유교적 가치관, 도구적 가족가치관, 서정주의적 가족가치관,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제시하고 있다(장경섭, 2001).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어머니와 딸의 관계의 경우가, 어머니-아들, 아버지-딸, 아버지-아들에 비하여 애정적 유대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ssi & Rossi, 1990). 이는 통상 여성들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역할(Kin-keeping)을 수행해왔고(Rosenthal, 1985)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여성중심의 세대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양극화할 가능성이 많다. 타인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도움을 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력(expressivity) (Rossi & Rossi, 1990)의 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자녀와 긴밀한 애정적 유대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자녀와 애정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아내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경험하게 되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노력을 하는 ‘좋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나쁜 아버지’로 양분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있으며(Furstenberg, 1988), 이러한 현상은 노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이혼한 남성노인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유대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부부관계의 불안정성이 남성의 노후의 세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향후 이혼율이 높아진다면 세대관계의 애정적 유대는 남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애정적 유대 뿐만 아니라 관계적 유대와 기능적 유대에 심각한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3) 교감적 유대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치관을 개별 세대 중심으로 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매우 클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우리사회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를 경험하였고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에서 양성평등적이며 개인주의적 사고로 변화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가족이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개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세대간의 다양한 측면의 가치관에서 차이가 크며, 특히 세대간의 교육수준에서의 큰 차이가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화, 교육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과 같은 정도의 부모와 자녀간의 가치관의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제측성별(예: 계층) 차이가 오히려 부각될 여지가 있다. 즉 가족을 단위로 하여 보면 가족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갖는 가치관의 차이보다는 가족의 제측성별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특정 성향의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즉 개별가족내에서 '세대간 가치관의 전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4) 기능적 유대

성인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도움이 세대간의 기능적 유대는 지속될 것이나 그 내용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형태와는 별도로 상호작용·교환관계의 연계망으로서의 가족은 유지될 것이며(Bengtson, Roseththal and Burton, 1995; Silverstein and Bengtson, 1997), 가족 성원이 실제적인 부양을 필요로 할 때 즉각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잠재적 틀'(latent matrix)이라는 것이다(Riley, 1983; Riley and Riley, 1993). 따라서 세대관계가 갖고 있는 기능적 유대가 잠재된 상태에서 언제 활성화되는가하는 것은 언제 어떠한 도움이 요구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현재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착에 따라서 경제적 부양측면에서의 자녀의 역할은 지금보다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상층 이상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현상은 강화될 것이다. 이는 부모세대의 경제적 능력이 앞으로 계속 향상될 것으

로 예견되고 있으며, 일생동안 지속해왔던 사회적 연계망의 축소 속에서 자녀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자녀와의 관계의 지속을 통하여 정서적인 위안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박경숙, 2002; 정경희, 1995) 자신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관계적 유대의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정경희, 1999). 감정적인 유대는 기능적 유대의 여러 측면중 앞으로 가장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세대관계가 의무적인 관계였다면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서정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선택적인 관계로 바뀌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수발을 제공해왔던 가족의 역할이 약화되어가고 있고 의존적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간주하는 집합주의적 시각의 대두에 따라서 가족과 사회가 어떻게 신체적 부양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 수발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자녀의 절대적인 역할은 감소할 것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가족보호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및 재가보호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려는 탈가족화(de-familisation)라는 방향을 선택하던 아니면 가족을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반자 관계로 파악하고 가족구성원이 제공한 보호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재가족화(re-familization)를 지향하던 간에(석재은, 1999)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수발제공(caring for)의 양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별거자녀에 의한 부양은 대부분 동거 또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하여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 그 가능성이 급감하기 때문에 자녀동거율의 저하는 곧 자녀의 노부모 신체적 부양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수발의 충족도는 자녀동거율의 감소에 따라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발대상자를 염려하는 마음(caring about)은 여전히 자녀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5) 규범적 유대

부모에 대한 의무감의 정도로 측정되는 규범적 유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모두 일정 수준의 부모부양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존세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에게도 수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장경섭, 2001).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유대는 도구적 가족가치관, 서정주의적 가족가치관, 개인주의적 가치관과의 충돌을 통하여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즉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호혜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라도 부모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준 그대로 실제 부양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즉 규범적 유대의 수준과 기능적 유대의 수준이 일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범적 유대를 느끼는 대상도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효’의 개념이 가부장적인 질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미래의 부모에 대한 존경과 부양의식은 아들의 부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딸의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다. 즉 가족관계의 양계화 경향(함인희, 1993)으로 인하여 규범적 유대의 대상도 양계화할 것이다. 지속적인 자녀수의 저하로 인하여 출생순위나 성에 의한 규범적 유대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양계화 경향을 강화할 것이다.

6) 구조적 유대

가장 대표적인 구조적 유대를 나타내는 지표는 거주형태와 거주거리이다. 현재는 노인의 절반 정도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만 자녀세대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하여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고 있어 단독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신체적 독립성만 있다면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동거가 더 이상 효의 표현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서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은 저하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화적인 선호나 인구학적 가용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모두 노인의 자녀별거 현상이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경희, 2002).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기혼취업여성들이 자신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 하에서의 한 생존전략으로 정서적 갈등의 가능성과 사생활의 희생을 각오하고 (시)부모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이현송 외, 199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속도에 따라서 자녀별거의 증가 속도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인 선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거에 대한 선호는 매우 저하될 것이지만 ‘국이 식지 않을 거리’에 거주하는 수정확대가족의 증가가능성은 크다 하겠다. 젊은 세대들이 개인주의적 사고에 의한 사생활 확보 욕구와 동시에 부모에 대한 의무감과 애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정확대가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적 유대는 사회제반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다양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세대관계의 복잡성과 앞으로의 각 차원의 유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았다. 아직 충분한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심층적이며 섬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세대관계는 각 유대의 차원의 변화정도가 다르고 부모와 자녀세대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세대관계의 내용이 상이할 것이므로 ‘하나’의 세대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관계가 출현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박경숙, 2002). 또한, 자녀수의 감소로 인하여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인 경제적·정서적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양계제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수의 자녀가 다수의 부모와 세대관계를 맺는데서 발생하는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소지도 있다.

■ 참고문헌 ■

- 공세권 외(1987), 『한국의 가족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두섭 외(2001),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석(2002), 「가족과 가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247~282면.
- 박경숙(2002),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233~277면.
- 석재은(1999),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공급주체간 역할분담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선우덕 외(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송 외(1996),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경섭(2001),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인식」, 『가족과 문화』, 제13집 1호, 1~30면.
- 정경희(1995),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5권 2호, 52~68면.
- _____(1999), 「노인과 재산상속」, 『노인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09~134면, 사회문화연구소.
- _____(2002),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 68호, 29~40면.
- _____(2003),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 『보건복지 포럼』, 2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4~74면.
-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200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00), 『2000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집계결과(여성·아동·고령자, 1인가구부문)』.
- _____(2001a), 『2001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2001b), 『장래인구추계』.
- _____(2003), 『2002년 사회통계조사 보도자료』.
- 한경혜(1997), 「인구변동과 가족생활」, 『인구변화와 삶의 질』, 한국인구학회(편), 159~194면, 일신사.
- _____(1998),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제18권 1호, 46~58면.
- 함인희(1993),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119~145면.

- Bengtson, V. L., Carolyn, C., and Burton, L.(1990), "Families and Aging: Diversity and Heterogeneity," in R. Binstock and L. Goerge(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3rd Edition), NY: Academic Press, pp. 263~287.
- Bengtson, V. L. and Roberts, E.(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3, pp. 856~870.
- Ciirelli, V.(1989), "Helping Relations in Later Life," in J. A. Mancini(Ed.),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Lexington, M. A.; Lexington, pp. 167~175.
- Furstenberg, F.(1988), "Good Dads-Bad Dads: Two Faces of Fatherhood," Cherlin A. (Ed.),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The Urban Institute Press.
- Finley, N. J., Roberts, M. D. & Banaham, B. F.(1988), "Motivators and inhibitors of attitudes of filial obligation toward aging parents," *Gerontologist*, Vo. 28, No. 1, pp. 73~78.
- Poponoe, D.(1993), "American Family Decline, 1960~1990: A Review and Aprais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ust, pp. 527~555.

- Riley, Matilda W.(1983), "The Family in an Aging Society: A Matrix of Latend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4, pp. 439~54.
- Riley, M. and Riley, J.(1993), "Connection: kin and Cohort," in Bengston, K. L. and Achenbacum W. A. (Ed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NY: A De Gruyter.
- Rosenthal, C.(1985), "Kinkeeping in the Famili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7, No. 4, pp. 965~974.
- Rossi & Rossi(1990), *On Human Bonding*, Aldine de Gruyter, NY:
- Seelbach & Sauer(1977), "Fam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Morales among aged Parents," *Gerontologist*, Vol. 17, No. 6, pp. 492~499.
- Silverstein, M. and V. L. Bengtson(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3, No. 2. Sept. pp. 429~460.
- Whitebek, Les Bl, Danny R. Hoyt and Shirley M. Huck(1994), "Early Family Relationship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Provided to Parents by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13, pp. 234~250.

한국사회 위험(Risk)의 특성과 치유

김원제

1. 문제제기: ‘삶의 질’과 위험의 문제

우리의 의식주 모두가 과학기술로 구성되거나 매개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처리기술, 유전공학기술 등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혁신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술문명이 발전할수록 물질적인 풍요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점점 불안하고 위태롭고 피폐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현대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팜 비행기 사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등 공학적 시설에서의 대형사고,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지하철 안전사고, 식품 및 약품의 위해성, 핵발전소 누출과 화학공장의 폭발위험, 유전공학에 의한 생명조작 등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연환경이 우리 삶에 불안과 위험을 주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은 기술환경이 이를 대체한다. 대형 기술시스템의 대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과학기술의 일상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의 기술사회에

김원제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신문방송학), DMS Lab(www.dmslab.net) 연구실장. 최근 논문으로 「경마의 건전레저스포츠 방안 연구」(2002), 「기업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써 스포츠스폰서십의 효과에 관한 연구」(2003) 등이 있음.

서는, 기술시스템에 포괄된 특정 구성요소의 사소한 문제가 기술시스템 전체의 순간적인 붕괴로 이어지는 대형기술사고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근대화가 초래한 이러한 사회구조의 딜레마에 대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사회’(Risk Society)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그런데, 왜 지금 위험사회를 논해야만 하는가. 이는 우리 사회에 대한 자기반성 차원에서이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하는데 위험사회의 개념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1997년 말의 IMF 위기는 적나라하게 위험사회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위험사회라는 주제가 더 이상 학술적 논의의 정도가 아니라 공론의 장(場)과 정책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야함을 보여준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항상 위험과 관련되는데, 인간이 그 영향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을 예측가능케 할 수 있는 준비상태는 현대사회의 이노베이션 수용, 그리고 효율적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데 이바지한다. 이에 위험이라는 주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가 된다. 아주 상이하고 부분적으로 모순되는 요구들, 즉 인간의 삶의 조건에 대한 정치적 형성성이 함께 해야 한다는 요구, 기술이 인간에게 제공한 엄청난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통제와 안전에 대한 인간의 욕구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송해룡·한스페터 페터스, 2001: 6).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이슈로 삼아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바, 위험과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공론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간 우리사회에서 위험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 위험을 과대하게 혹은 과소하게 인식함으로써 위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사회 전반에서 안전에 대하여 둔감한 현상마저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대사회의 위험요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확하게 진단되거나, 위험에 대한 학제적 평가가 부재하여 위험관련 중요 의사결정이 잘 못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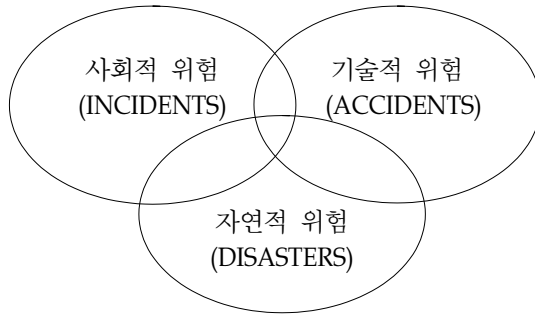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위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치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2. 위험사회론

1) 위험 및 위험사회의 개념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개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위험이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학술적인 용어로 ‘위험’의 개념은 ‘모험’, ‘위기’ 등의 유사용어들과 함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다. 김성재(1993: 41)는 루만(N. Luhmann)의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모험’과 ‘위험’의 의미론적 차이를 원인귀속 경위를 기준으로 밝히고 있다. 즉 피해가 자기원인귀속일 경우에는 모험이고 타자원인귀속일 경우에는 위험이다. 따라서 어떤 피해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원인이 있을 경우는 모험이며, 반대로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원인으로 올 경우는 위험인 것이다.

위험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위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Jones, 1993). 자연적 위험은 인간이나 인위적인 기술과는 무관한 자연현상의 급변, 천재지변, 혹은 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재앙(Disasters)으로 이해된다. 기술적 위험은 건물이나 교량의 붕괴, 공장폭발, 오염 등 인공적 산물이나 기술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사고들(Accidents)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험은 사기, 절도, 방화, 폭력 등 순수하게 인간 행동만으로 인해 비롯되는 사건들(Incidents)과 관련된다.



<그림 1> 위험의 스펙트럼

오늘날 모든 위험은 본질적으로 기술-사회적 성격을 지닌다(Cutter, 1993). 기술적 장치나 시스템의 실패만이 아니라 그런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는 정치, 사회, 경제시스템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나아가 위험사회는 산업사회가 가진 원리와 구조 자체가 이 세계의 파멸적인 재앙의 사회적 근원으로 변화하며, 또 이를 인식하게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를 기회와 위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라 규정한다. 산업사회의 결과로서,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만한 재앙의 위험이 발생하지만, 이 위험의 노출과 인식이 산업사회의 내재적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근대화의 기회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성과 충돌하고 갈등이 부각되는 사회이다.

위험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사회의 부(富) 생산과 새로운 위험생산 사이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산업사회의 개념은 부의 논리의 지배를 제시하며, 그것과 위험분배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반면에 위험사회의 개념은 부의 분배와 위험의 분배는 양립할 수 없으며, 부의 논리와 위험의 논리가 서로 경쟁을 벌인다고 본다.

즉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부는 체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고, 그와 동시에 위험은 부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우연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정점에서 그 동안의 우연적 위험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의 사회적 생산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게 된

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부의 분배 문제 및 갈등은 기술·과학적으로 생산된 위험의 생산, 정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및 갈등과 중첩된다.

결국 위험은 사회구조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사회발전과 변화에 따라 위험의 발생형태와 특성도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위험의 특성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대별 위험의 특성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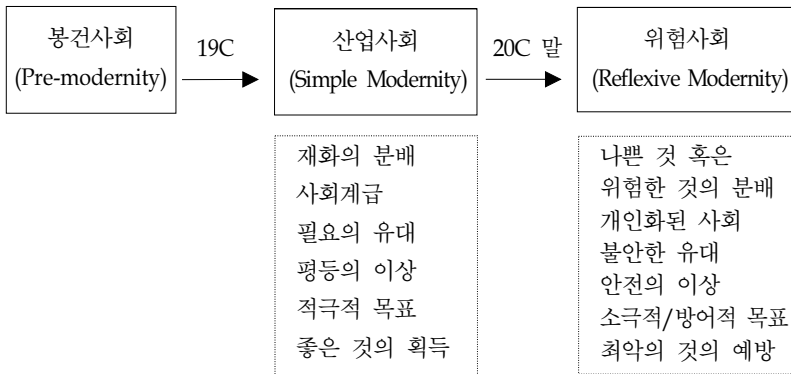
구분	위험의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과의 연관성
전통 사회	신분과 명예가 위험발생의 주요 요인. '자기원인귀속성'이 강함.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등은 불가항력적으로 이해됨	명예와 신분을 원인으로 하는 위험의 감수는 공동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직업윤리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집단소속감을 발생시켜 집단의 범위를 고정
산업 사회	확률적 통계의 도움을 받아 위험 예측이 가능해짐. 위험을 통제관리의 대상으로 인식.	위험의 예측가능성은 위험관리의 학문적 접근을 가능케 하였고, 보험제도를 발생시킴. 한편, 보험제도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동분배하여 신문집단의 동질성을 해체시키고, 직업윤리의 토대를 약화시켰으며, 개인주의를 초래.
현대 사회	기술공학 및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위험은 일상성, 타율성, 피해산정의 불확실성 등을 지니게 됨.	환경오염 등의 새로운 위험은 위험유발자와 피해자간의 상호무관심과 사회적 무력감으로서의 위험불감증을 심화시키나, 집단경계를 초월한 자발적 시민연대를 생성시키기도 함.

2) 위험사회의 태동 및 형성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가 태동하게 된 과정을 3단계 사회변동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변동은 봉건사회로부터 19세기 산업사회를 통해 20세기 말에는 위험사회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산업사회는 '좋은 것'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이 곧 미덕이라는 인식이 지배했다. 그런데 20세기 말에 형성되기 시작한 위험사회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획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나쁜 것의 분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쁜 것에 해당하는 것이 위험이다. 산업사회의 부(富)의 분배논리에서 위험사회의 위험의 분배논리로의 변화는 두 가지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울리

히 벡, 홍성태 역, 1997: 52).

첫째, 산업사회의 생산력의 증대와 복지제도들을 통해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게 되었다. 둘째, 근대화 과정에서 생산력의 증대와 함께 위해와 잠재적인 위협들이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산업사회에서 부의 생산논리가 위험생산의 논리를 압도했던 상황이 위험사회에서는 역전되게 된다. 이처럼 위험이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역사적 변화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점차 나타나는 위험의 성격이 이전 사회의 위험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 2> 사회변동의 단계; 울리히 벡의 관점

자료: 정근모 · 이공래(2001: 39).

결국 위험사회에서 개인과 사회는 불안정과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것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위험을 배태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곧 위험사회이며 위험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고 맹목적인 근대화, 정보화를 반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준다.

3. 한국사회 위험의 특성과 원인

1) 근대적 위험의 유형 및 특성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받은 한국의 근대화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 반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고도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각 부문이 방만하게 팽창했고 커진 몸체를 관리하는 방식은 미숙했다. 이로 인한 위험은 무작위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고도로 구조화된 것이다. 근대화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이다. 위험의 복잡성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위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 및 생태계 문제: 수질오염, 공기오염, 해양오염, 특히 수돗물 오염에 관한 문제이다. 동시에 국토개발과 원자력 발전에 관한 위험의 문제도 폭발력을 갖고 있다.
- 정치·경제 문제: 기업, 금융, 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위험요소와 함께 대량실업으로 인한 총체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사회도처에 만연된 부패로 인해 정치는 물론 사회 모든 부문의 부실화가 촉진되었다.
- 사회·문화 문제: 여성의 입장에서 증가하는 성폭력과 성희롱은 오래된 가부장주의 문화에 착근한 가공할 위험이다. 사회적 신뢰의 붕괴는 우리사회의 정신적 공황을 의미한다. 교육의 부실화로 인해 교육이 위험을 생산해내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 대규모 사고 문제: 도시의 부실건축, 교통사고, 가스사고 등 빈발하는 대규모 안전사고는 위험사회의 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건강과 질병, 식품오염 등에 관한 대중의 불안도 증가일로에 있다.

이상에서 제기된 근대적 위험은 전통적인 위험에서 이해되었던 신분 집단적, 경제적, 직업적인 위험(모험)과 다르고, 확률적인 통계를 통해서 예측될 수 있고, 피해를 피보험자의 연대공동체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사회의 위험과도 비유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이전 사

회의 위험과 구분되는 근대적 위험의 성격은 일상성, 타율성, 익명성과
공평성, 피해자와 유발자의 분화, 확률화와 불가능성, 위험규정의 불확
실성, 문화적 위험불감성, 지식의존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이정춘, 1996).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의 특징들(이재열, 1998: 182~191)을 정리
하면, 먼저 높은 위험추구의 경향이다. 정부나 기업, 일반국민 모두에
게 위험을 무릅쓰는 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안전이 비용
이 많이 드는 대안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위험을 택할 때 단기적으로
는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고위험추구사회에서는 ‘안
전’보다는 ‘속도’를, ‘내실’보다는 ‘외형’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미래에
‘부과될 비용’보다는 현재 시점에서의 ‘비용절약’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삼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회적 조정과 협력의 실패이다. 부실의 원인은 공학적 결함
만이 아니다. 비뚤어진 하도급 관행이나 구조화된 부패 등 사회적 소
통체계의 왜곡이 정상적인 사고(normal accident)의 확률을 높이고 있
다. 대형사고의 이면에는 또한 조직과 시장의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진 하드웨어의 관리 주체와 인력, 노하우는 조각조각 흩
어져 서로 조율되지 못한다. 또한 모험추구사회에서는 체계수준의 합
리성에 대한 성찰보다는 개인적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기회주의적, 투기
적 행태가 만연하여 환경보존이나 재난구제 등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영역의 자정능력을 마비시키는 ‘공유지의 비극’을 가져오기 십상이다.

셋째로 사전예보제와 긴급구조체제의 미비이다. 위험에 대한 사전
예고나 긴급구조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념의 정의상 실패
한 체계는 합당한 긴급구조체계를 제공할 수 없다. 긴급구조는 잘
통합된, 조직들간의 상호조정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자원의 공유와
인적자원의 일관된 통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직화되지 못한 구조
노력은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크게 하였다.

넷째로 관료부패와 법 집행의 불공정성이다. 대형사고는 부패나 관
료적 권력의 사유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적 조직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체계로서의 특성보다는, 조직의 존속 자

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직자들의 조직자원을 사유화하는 경향이 강한 자연체계로서의 특성이 강화된다.

2) '사이버 위험'의 범주 및 특성

인터넷의 확장은 한 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뿐만 아니라 권력변동까지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은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치창출적이며 체제규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Selven, 2000).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사이버공간의 물리적 확산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누구나 자유로운 접근이 용이해져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정신적 여건은 불충분한 양상을 보이며 오히려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순기능적 요인과 더불어 부정적 역기능적 사회현상들이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에 대한 위협, 정보통신 시스템의 집중화와 대규모화에 따른 재해 가능성, 정보의 범죄이용 가능성, 인간성 상실 등을 초래하고 있다(손연기 외, 1999).

인터넷으로 인하여 형성된 일정한 영역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에서 범죄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듯이 사이버세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신종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신종범죄들도 빠르게 확산되어 갈 것이고 그 피해정도도 가히 천문학적일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사이버 범죄가 가지고 있는 빠른 전파성, 시간적·공간적 무제한성, 익명성, 비대면성 등의 특성 때문이다. 주로 언급되는 사이버 범죄의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해킹, 바이러스, ID도용, 사이버테러리즘, 인터넷사기, 스팸메일, 인터넷포르노사이트, 인터넷매춘사이트, 사이버포주,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강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협박, 프로그램불법복제, 음반불법복제, 사이버캐릭터절도, 고객개인정보누설, 산업스파이, 인터넷카지노, 자살사이트, 폭탄제조 사이트 등.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행건수를 보면 1998년에 376건, 1999년에

1,686건, 2000년에 1,992건(경찰백서, 2001)에 이르고, 범행연령은 1999년까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전체 피의자의 90%에 이르다가 지난해부터는 30~40대가 20%이상 차지하고 범행양상으로는 10대와 20대가 자신의 컴퓨터실력을 자랑하거나 호기심에 의한 단순 사이트해킹, 음란물유통에서 사이버범죄로 돈벌이를 하려는 성인범죄로 변질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는 다양한 정보통신 범죄신고가 하루 20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동아일보, 2001년 7월 13일).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이버 범죄의 빠른 속도로의 확산현상을 사회적인 위협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사이버 위협”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컴퓨터를 활용한 범죄의 특성은 행위측면으로는 범행의 영속성, 자동성, 광역성, 발각과 증명의 곤란성 등이다. 즉, 컴퓨터부정조작의 경우 일단 조작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그 조작행위의 빈번한 반복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영속성을 띠게 되고, 행위자가 어떤 다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불법 변경된 자료를 호출하거나 불법한 프로그램을 삽입할 때마다 범죄행위가 유발되므로 자동성을 띠게 되고(김문일, 1998: 57),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지에서의 범행이 가능하게 되므로 광역성을 띠게 되고, 현실상의 증거물보다 컴퓨터 자료는 폐쇄성·불가시성·은닉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발각과 증명의 곤란성(장영민·조영관, 1993: 72)을 갖게 된다. 이러한 컴퓨터범죄의 특성들은 그대로 사이버 범죄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외에 사이버 범죄의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는 성질은 비대면성(非對面性),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한성 내지 동시성 및 국제성, 높은 전파성과 재산피해, 쌍방향성, 전문성 내지 기술성, 즉시성 등이다.

위험은 지식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예컨대 생태계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무지로부터 해방된 측면이 있지만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위험의 원천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에 접근권이 보다 확대된 정보화사회에서 위험의 유형은 그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 한국사회 위험의 특성

가. 위험사회 태동 원인

(1) ‘돌진적’ 근대화 및 정보화

위험은 실재하지만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 위험의 실재성은 충격으로부터 온다. 즉 계속되는 산업적 과학적 생산체제로부터 온다.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인간호르몬체계의 변동 등 과학기술 문명이 만들어내는 위험의 종류는 무수하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에 대한 지식은 개별문화의 역사와 상징 그리고 사회적 지식의 그물망(Grid)으로부터 나온다. 때문에 같은 위험에 대한 정치적 반응이 나라와 문화에 따라 매우 다르다(한상진, 1998: 5).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전통적, 현대적, 탈현대적 위험들이 우리 사회 안에 혼합되어 있다. 이와 관련 이중위험사회(dual-risk society)라는 용어가 제기된다(김대환, 1998). 즉 한국사회의 위험은 서구와 유사한 성격의 것도 있지만, 파행적 근대화로 인한 사회적 합리성의 결여가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위험사회적 특성의 근원은 ‘돌진적 근대화’(Hart-Landsberg, M., 1993)¹⁾에 기인한다. 위험사회는 이러한 돌진적 근대화의 밝은 측면에 가려져 있는 어두운 측면을 겨냥하는 개념이다. 위험은 여기서 우연적 재난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과학기술이 가져온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을 가리킨다. 즉 우리의 위험은 근대화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의 성공이 몰고 온 부작용에 있다. 즉,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른 많은 가치들을 희생시킨 방식의 근대화가 오

1) 돌진적 근대화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국민대중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하고 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일인당 GNP나 수출증가와 같은 가시적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원을 총동원해, 가장 신속하게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전력투구하는 개발전략을 말한다. 정부의 정책목표와 지침에 따라 기업, 은행, 미디어 등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은 30년 이상 이러한 개발전략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룩한 것이라 하겠다.

늘의 위험사회를 가져온 구조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위험사회의 시각은 근대화 그 자체가 자신에게 가하는 상처와 불안을 다루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Giddens, 1994: 79)이다. 따라서 돌진적 근대화의 부산물로 등장한 위험사회의 개념은 한국사회에 잘 들어맞는다. 지난 수십 년간의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위험이 우리사회 안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대화(modernization)라 함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적 측면에서의 상향운동²⁾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돌진적 경제성장이 모든 측면에서의 상향운동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서구가 진행한 전통적 근대화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파행적 근대화에 머물렀다. 파행적 근대화는 한편으로는 근대화에 따른 위험과 동시에 근대화의 불충분성에 기인한 위험도 가져왔다. 이로써 위험은 복합성을 가지게 된다.

한편 한국사회는 근대화 이후 곧바로 정보화라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새로운 위험을 맞이하는 국면을 초래했다. 정부의 정책적인 선도하에 정보화가 진행되었고, 우리 국민 특유의 기술관이 혼합되어 정보화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화로서 확산된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역시 근대화 과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트러스트의 상실

우리사회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이버사회에서 조작 부정적 현상들이 노출되는 것은 사람들간의 신용(trust), 나아가 사회적 신뢰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1996)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트러스트로 보고,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신뢰의 정도가 그 사회의 경제적 특징을 결정짓고 국가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동인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그는 한

2) 경제적인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산업화, 정치적인 수준에서의 참여 확대 및 민주화,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가치체계의 도입 및 확산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국사회를 저신뢰의 사회로 평가한다. 그의 평가가 아니라도 사회적 신뢰가 낮다는 점에 대해 부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사회의 신뢰수준이 낮은 것은 근대화의 부작용에 기인한다. 근대화를 추구해 오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은 허물어졌는데, 새로운 가치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기회주의가 하나의 생활패턴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흥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대개 신흥세력은 기존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거나, 활동재원을 마련하게 되고 또 이것이 그들의 권력기반을 흔들게 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결국 우리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생활향상을 이루었지만, 사회적인 신뢰기반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해 온 것이다.

일견 우리사회가 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가족간에 그리고 조직원들 간에 또 사회의 비공식조직 속에서 끈끈한 정으로 뭉쳐 있고 거기서 서로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은 것이다. 사실 우리사회를 위협하게 한 각종 대형 사건사고 뒤에는 각종 인연으로 얽히고 설킨 이해 당사자들간의 유착이 있었기 때문이다. 혈연끼리 믿는 것, 연고가 있는 사람들끼리 믿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낯선 사람과도 믿음을 나누고 이민족과도 믿음 있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신뢰이다. 보편적인 신뢰가 요구되는 것이다.

(3)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실패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의 위험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태동된 것으로 진단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발달된 과학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끊임없이 위험사회로 연결시키는 의사결정 과정을 원인으로 규정한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우리사회의 위험 의사소통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자들은 사회적 인식에 대해 관심이 약하고, 대중은 과학적 지식에 취약하다. 그로 인해 잦은 정보의 통제나 왜곡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불

신과 저항이 거세져서 자주 갈등이 커지는 양상으로 발전되곤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제공자의 목적을 위한 도구적 접근에 치중하고, 성실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실패가 나타나는 것이다.

과학과 산업기술의 변화는 그것이 나타나는 즉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구현되고 사회에 적용·발전되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영역이므로 일반인들이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기 어렵다. 그에 따라 일반인들은 위험을 인지할 때 위험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이해하고 반응하기보다는 주관적인 경험에 의지하게 된다. 특히 개인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은 주관적 인지(認知), 즉 위험인지과정과 반응양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관적 인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결국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전되어 오면서 객관적 변화와 주관적 인지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커져왔다(김영평 외, 1995: 935).

현대사회의 일반인들은 위험을 인지하는 데 여러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인은 같은 위험에 대해 자신이 당할 가능성보다 다른 사람이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느낀다. 즉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험인지보다 객관화된 위험을 항상 큰 것으로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인들의 판단에 나타나는 차이는 일반인들이 위험에 대한 통계수치를 잘못 인지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언어적인 수용빈도에 의해 위험의 정도가 등급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인들에게 객관적 위험보다 주관적 위험이 높게 평가된 위험은 대체로 환경관련 위험과 원자력 관련 위험이다. 이 위험분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위험의 특성은 대체로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위험들로, 자신이 위험제공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여기며, 위험의 발생도 즉각적이기보다는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다(임재춘, 1998).

결국 일반인들에게 위험이란 전문인들의 경우와 같이 통계적으로 예측되는 피해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이같

이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은 위험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나. 복합적 위험사회의 형성

현대 사회, 특히 정보화사회로 칭해지는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이는 과학이 기술과 관련되어 생산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과학이라는 사상 내지 과학적 방법 등이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외견상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환경파괴와 보건 및 안전위협 등 적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양산함으로써 위험사회를 형성하고 그로 인한 공포와 자기파괴의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내재시킴으로써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볼 때 정보사회에 접어들어 새로운 위험, 즉 사이버 위험이 점차 팽배해지는 와중에 역시 산업사회적 위험이 도처에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1년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 테러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화재나 대형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특히 IMF 이후 돌진적 성장으로 인한 폐해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제는 돌진적 성장이 가능하지도 허용되지도 않겠지만, 그 유혹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최근의 벤처업계 비리는 정보사회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조차도 ‘돌진적 근대화’ 논리가 망령이 아님을 증명해준다.

결국 현재의 시기는 산업사회적 위험과 정보사회적 위험 즉, 사이버 위험이 동시에 혼재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복합적 위험사회’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4. 한국사회 위협에 대한 치유방안

1) 처방 1, 근대화/정보화에 대한 성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인간관계의 구조적 황폐화에 기인한다. 하버마스가 지적했듯이, ‘생활세계의 식민화’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즉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보면 참여민주주의인데,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이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울리히 벡이 제안하듯이 돌진적 근대화가 잉태한 위험사회는 ‘성찰적 근대화’ 개념으로 탈출해야 한다. 돌진적 근대화가 성공과 함께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고 오늘날은 그 부작용의 극복이 보다 중요한 과제이기에, 우리의 미래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성찰적’이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을 외재적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추구했던 발전노선 또는 우리가 만들었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의해 위협이 생산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적 태도를 요구한다.

성찰성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한상진, 1998: 22~23), 첫째는 돌진적 근대화가 불러온 위협을 직시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성찰성은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심각한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식의 효과로 인해 위협에 대한 지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현대적 삶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³⁾ 같은 맥락

3) 예컨대 이혼증가 사례를 보면, 남녀평등의 사상은 억압적 부부관계에 대한 높은 비판의식을 만들어내며 이혼은 여성해방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여성이 주도하는 이혼율의 증가는, 여성해방일지도 모르지만,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문제와 가족의 해체현상은 이 해방이 과연 새로운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혼돈을 낳을지 불확실하다. 위협으로부터의 회피가 또 다른 위협을 낳을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의 위협에 대한 관심은 보다 높은 수준의 성찰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에서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위험’에 대한 치유 역시 ‘성찰적 정보화’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위험의 특성이 복합적이기에 위험사회에서 치유책으로 제시된 성찰적 근대화 역시 보다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성찰적 과제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그 한 방향은 민주화와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파행성을 치유하는 것이고, 다른 한 방향은 급속한 산업화 및 정보화가 가져온 위험을 추방하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의 성찰은 근대화의 결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근대화의 병리현상(정보화의 병리현상까지)을 치유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위험사회는 위험이 모두 극복된 어떤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 위험의 진단과 극복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21세기를 향한 삶의 숙명이기도 한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열린 자기성찰의 태도를 갖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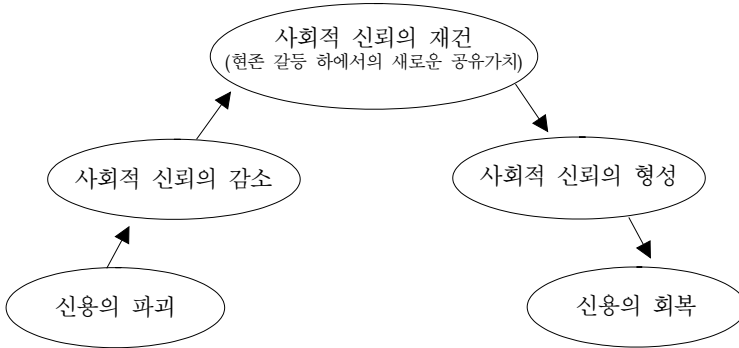
2) 처방 2, 트러스트 회복 및 상호신뢰 패러다임 구축

트러스트 회복방안은 유럽연합이 1995년부터 추진해 온 Trustnet 프로그램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 프로그램이 제안하는 위험사회 치유방안은 사회적 신뢰의 회복에 있다(정근모·이공래, 2001).

사회적 신뢰는 개인과 기존의 또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그룹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신뢰는 개인이 심각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상황에서 형성된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의 인식자원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개인은 스스로 필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시스템과 기관에 의탁해야 한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위험통제가 사회적 신뢰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회의 다

양한 사업의 정당성이 평가되어야 하며,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트러스트의 회복과정

국가적 차원에서 위험통제 시스템은 트러스트, 즉 상호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호신뢰 방식에 의한 위험통제는 위험관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위험활동의 정당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가 관련된 폭넓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위험관리의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위험을 인내해야 할 당위성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다음 도식처럼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영역, 수용 가능한 영역, 널리 수용 가능한 영역 등을 결정해야 한다.

<표 2> 위험수준에 따른 통제범위와 인내범위

통 제 영 역	인 내 범 위
불가능 영역	위험이 정당화 될 수 없음
가능 영역	통제되어야 할 위험영역 - 위험감소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 -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경우 허용 - 시간, 노력,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될 경우 허용
수용가능하지 않는 영역	우려할 만한 위험수준이 아님 - 투입자원이 편익에 비해 과다

상호신뢰 패러다임에서는 위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시민에게 열려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민과 상호작용을 거쳐 위험문제를 해결한다. 전문가들은 위험활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토론을 유도하여 문제를 규명함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알린다. 이해당사자들은 지역수준 및 국가수준의 논의에 참여하여 공동의 선(善)을 이끌어내는데 협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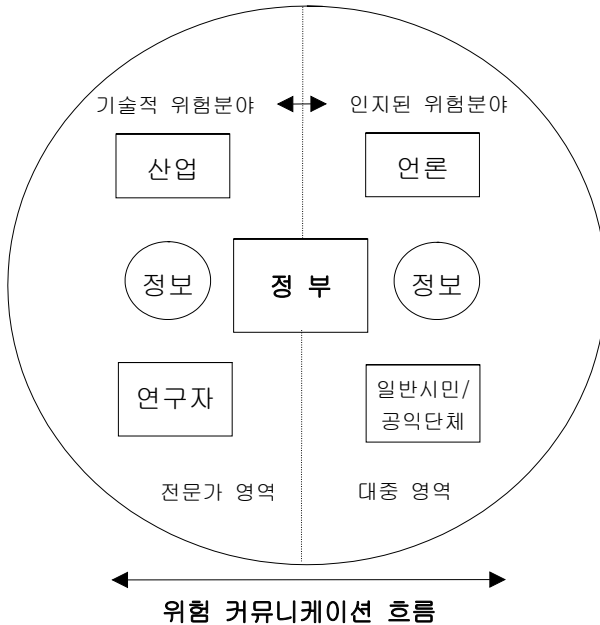
	위험관리: 신용회복과 유지	행위의 정당성 사회적 신뢰구축
상위수준 (일반상황)	의사결정 ↕	의사결정 ↕
하위수준 (특수상황)	의사결정	의사결정

<그림 4> 상호신뢰 패러다임에서의 위험통제

자료: 정근모·이공래(2001), p. 181.

3) 처방 3, 참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위험관리에서 안전을 위한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원활한 위험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접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의 기본적 철학에서도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 보다는 커뮤니케이션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와 관련 Leiss와 Chociolko(1994)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구조를 <그림 5>와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5> 위험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념적 모델

이 모델이 포함하는 몇 가지 특징(소영진, 2000: 33~34)은 위험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원칙을 시사한다.

첫째,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흐름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일어나고 있다. 그 하나는 기술적 위험분야로서 주로 과학기술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실증적·과학적 방법에 의해 평가되고 측정되는 위험을 다루는 분야이다. 다른 하나는 인지된 위험분야로서 주로 일반대중들에 의해 엄밀한 과학적 방법이 아닌 나름대로의 방식에 의해 주관적 가치나 의미, 형평성, 이해관계, 문화적 속성 등이 결합된 형태의 위험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들 분야 각각에서의 정보흐름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분야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두 분야 상호간에도 정보의 흐름이 존재하지만, 이 정보흐름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언어, 합리성을 채택하고 있는 두 개 집단군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는 크게 다섯으로 구분된다. 기술적 위험분야에서는 산업과 연구자(과학자)들이, 인지된 위험분야에서는 언론과 일반시민이 각각 주된 행위자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두 분야의 중간에서 위험의 공급과 규제적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정부가 있어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이들 다섯 주체간의 정보흐름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에는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가 지나가는 통로(채널)가 있다. 언론이나 정보는 행위주체이면서 동시에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두 영역(전문가-대중)사이의 정보흐름은 직접적으로 이루지기보다는 매개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언론이 주요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치유를 위한 의사소통 활성화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이 수반됨으로써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위험 의사소통은 다양한 사회집단간에 위험의 크기와 성격, 의미, 대응방안 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위험커뮤니케이션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 참여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하다.

우선 위험의 공급자(전문가, 정부)가 변화해야 한다. 대중은 위험에 대해 비합리적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그들의 인식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대중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위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파트너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호이해의 기반을 위해 과학자들과 대중이 자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정보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화시대 인터넷은 위험커뮤니케이션의 훌륭한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신뢰 패러다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신뢰의 바탕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그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4) 처방 4, 사이버 윤리의식 강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와 정체성의 도래를 약속했었던 사이버 공간이 이제는 무질서와 비도덕화의 온상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은 결코 규범과 제도, 합리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도삼, 2001: 8).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이 안전한 곳이 되려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두고 자유주의자와 규제주의자간의 대립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인터넷을 현실공간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문제를 풀어 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현실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우리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시켜 주며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 장치이지 그 자체가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의 주체는 아니라는 점이다(Drozdek, A., 1999: 46).

인터넷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는 사용자가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는 가운데 인터넷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통제와 규제의 범위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만 골몰해 왔던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미 현실 공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공간의 개혁은 뒤로 한 채 우선 인터넷만 고쳐 놓고 보자는 식의 다소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여 왔다. 그들은 이제 ‘생활 세계의 내적 식민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세계의 내적 식민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네티

즌으로서 인터넷을 우리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지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윤리적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건전하고 유익한 사이버 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식정보사회는 마땅히 인간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위협함으로써 상당한 도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규범에 바탕을 둔 건전한 지식정보문화를 창출해 갈 수 있는 국민들의 지식정보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정보통신윤리는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규범 체계”라고 할 수 있다(최병목, 2001).

손용기(2001: 12)는 정보사회의 역기능 해결방안의 하나로 기술적 추진력(Technical Push)과 사회적 견인력(Societal Pull)의 조화만이 바람직한 정보사회로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기술과 인간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정보화가 수반되어야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토피아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규제방법이 정부규제나 자율규제냐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사회를 맑고 밝게 하는 것이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때 인터넷에 대한 규제 또한 다양한 사회규범이 조화를 이루는 혼합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용자 및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우선적으로 옹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권의 노력과 인내를 바탕에 두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한 신고처리 체계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민주성·전문성의 보장이 제도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권현영, 2001).

사실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인 개방성 때문에 유해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진국에서도 자살사이트에 대해 그

운영자를 처벌하거나 폐쇄명령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시민부문에서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이버공간을 공유하는 네티즌들의 자율 규제에 맡기는 방법이며, 둘째, 커뮤니티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며, 셋째, 민간기업이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일례로, 인터넷 대청소 캠페인이나 인터넷업계의 자정노력 등이 대안일 수 있겠다.

결국 인터넷을 활용하는 네티즌의 의식전환에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인터넷 활용법만 강조했을 뿐 사이버문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청소년들의 기술활용 수준은 높은 반면 의식은 그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체현상이 발생한다.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사회의 기본가치는 무엇이고, 그러한 가치와 질서,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변화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5. 결론

과학기술의 발전이 위험사회의 원인인가? 서구에 기반을 둔 위험사회론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위험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기에 서구의 이론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논의한대로 위험사회론은 우리사회를 설명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해준다. 특히 위험사회를 근대화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소산으로 보고, 이를 '성찰'로써 치유하고자 한 점은 한국적 상황에도 타당한 모델이 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혁신하는데 비교적 신속한 편이다. 정부나 기업 모두 연구개발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벤처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시민대중은 신기술을 큰 거부감 없이 비교적 빠르게 수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수용성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

으로 작용하지만 신기술이 파생하는 잠재적인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직도 위험은 기술적으로 극복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관리는 과학기술자들이 전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주의적 환상은 깨진 지 오래다. 위험은 기술적 성격과 더불어 사회적 성격을 매우 크게 가지고 있다. 예컨대 위험 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위험한가(기술적 문제)’보다는 ‘정부나 산업을 믿을 수 있는가?(신뢰의 문제)’,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경제적 문제)’, ‘왜 하필이면 내가 위험부담을 져야 하나?(형평성의 문제)’ 등 사회적 문제들이 관심의 초점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의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고 연구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논의주제가 되는 바, 그 핵심적인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인지의 문제이다. 위험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고 위험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어떠한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가? 누가 그 피해를 받게 되는가? 등의 이슈들이 포함된다.

둘째, 위험관리의 문제이다. 누가 위험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등의 이슈가 포함된다.

셋째, 위험행태의 문제이다. 어떻게 국민들로 하여금 위험한 행위를 중단토록 할 수 있는가? 라는 이슈를 포함한다.

넷째, 위험수용의 문제이다. 어떠한 결정행위를 통해 지역주민을 새로운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이슈를 포함한다.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위에서 위험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위험에 관한 결정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value) 지향적인 문제라고 갈파한 베이커

(Betsy Baker)의 지적은 되새길만하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 위험의 근본적인 처방은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에 있다. 물론 그 주체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 어떠한 사회적 기준으로든 차별화되지 않는 - 한국인들이다. 산업사회의 위험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율리히 벡이 제시한 명제는 정보화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버리고 아울러 전통의 풍부함을 간직하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새로운 것들을 진정 새롭게 생각하고,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 참고문헌 ■

- 권현영(2001),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대한 사업자 규제」, 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발표문.
- 김대환(1998 가을), 「돌진적 성장이 낳은 이중 위험사회」, 『계간 사상』, 26~45면.
- 김문일(1998),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컴퓨터범죄와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 김성재(1993 겨울), 「체제이론과 언론연구: 왜곡된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분석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통제」, 『언론과 사회』.
- 김영평 외(1995), 「한국인의 위험인지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29권 3호.
- 라도삼(2001), 『블랙인터넷』, 자우.
- 소영진(2000), 「위험 의사소통의 제도화 방안」, 『사회과학』,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 손연기 외(1999), 『식정보사회의 역기능 해소 및 실천방안 연구』, 한국정보문화센터.
- 손용기(2001. 9), 「정보사회의 역기능 해결방안에 대한 제언」,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송해룡 · 한스페터 페터스(2001), 『위험커뮤니케이션』, 박영률출판사.
- 이재열(1998), 「대형사고와 위험: 일상화된 비정상성」, 『계간사상』, 가을호.
- 이정춘(1996), 「현대사회의 위험과 위험보도의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 임재춘(1998. 7), 「원자력안전과 국민이해 추진방향」, 『국회환경포럼』, 시민참여를 통한 원전안전규제에 대한 토론회 발표문.
- 장영민 · 조영관(1993), 『컴퓨터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근모 · 이공래(2001), 『과학기술 위험과 통제시스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최병목(2001), 「정보사회의 윤리의식 변화와 사회적 대응」, 『초고속 인터넷시대와 정보통신윤리의 방향 세미나 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프랜시스 후쿠야마, 구승희 역(1996), 『트러스트 -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
- 한상진(1998), 「왜 위험사회인가?」, 『계간 사상』, 가을호, 3~25면.
- 경찰청(2001), 『경찰백서』.
- 동아일보, 2001년 7월 13일.

- Cutter(1993), *Living with Risk: The Geography of Technological Hazards*, Edwards arnold.
- Drozdek, A., *Moral dimension of man in the age of computers*, 추병완 · 류지한 공역, 『컴퓨터 시대의 인간』, 서울: 백의.
- Giddens, A.(1994),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Jones, D. K. C.(1993), "Environmaental hazards in the 1960s", *Geography*, Vol. 78(339), pp. 161~165.
- Hart-Landsberg, M.(1993), *The rush-To development: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Struggle in South Kore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Leiss, W., and C. Chociolko(1994), *Risk and Responsibility*,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 Press.

Selven, J.(2000), *Internet and Society*, Polity Press.

U. Beck, 홍성태 역(1997), 《위험사회》, 새물결.

U. Beck(1992), *Risk Society*, London: SAGE.

부산지역 성장정치와 삼성자동차

- 유치 및 매각과정을 중심으로 -

백두주

1. 들어가며

한국의 경우 19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이 진전되면서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변화된 정치적 환경은 과거 중앙집중화된 권력구조 하에서 진행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도시정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수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으로의 소용돌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자기통치’ 및 직접민주주의 확대라는 지방자치의 이상과는 달리 소수 지역의 토착세력이 도시정치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삼성그룹이 자동차사업진출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1993년 6월부터 2000년 9월 1일 르노삼성자동차가 출범하기까지의 부산지역 성장정치를 분석한 글이다. 도시정치 및 성장정치에 관한 서구의 이론들이 국내에 소개된 바는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삼성차 문제는

백두주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사회학), 부산대학교·경남대학교 강의. 최근 논문으로 「지방자치시대의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 명지대교 건설을 둘러싼 부산 지역 성장정치」(2002), 「지방분권의 연구동향, 논의구조 및 쟁점에 관한 검토」(2002) 등이 있음.

도시내부의 성장정치 과정과 함께 지방의 자율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역균열적 중앙정치지형이 지역 성장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성장연합(growth coalition)이라는 개념은 로건과 몰로치의 성장기제론에서 비롯되었으나 도시체제론에서 말하는 성장지향적 도시체제(urban regime) 혹은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과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¹⁾ 성장기제론에 의하면 도시정치는 도시개발과 성장에 도시자원들의 교환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소수의 지역엘리트들에게 장악되고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성장을 추구하려는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성장연합세력들은 지역의 전체적 이익을 위해 도시정치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기보다 특정세력(혹은 계급, 계층)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하며 지역투자나 생산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여건을 ‘성장주의적 분위기’로 이끌어 나간다(Molotch, 1976; Logan · Molotch, 1987; 조명래, 1999). 반면 도시체제론은 “통치 결정을 만들고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 기관들과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비공식적 연합”(Stone, 1989)이라 정의되며 스톤은 ‘사회적 생산모델’(social-production model)을 제시하면서 제한되고 분산된 권한들이 어떻게 행위자들의 제도적 경계를 넘어 통치를 위한 능력을 생산하고 공적으로 중요한 결과들을 발생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춘다.²⁾

성장연합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얻는 가를 결정하는 ‘분배의 정치’보다는 상징적 개혁들을 포함하는 ‘상징적 정치’를 우선시 한다. 둘째, 이들의 의사결정구조는 매우 폐

-
- 1) 성장기제론과 도시체제론은 별개의 이론이라기보다 도시체제론이 다양한 도시체제의 출현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성장기제론의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장 또는 개발’지향적 도시체제에서는 성장기제론의 내용이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도시체제론에서 지적하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통치연합)이란 성장기제론의 성장연합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강명구, 1997; 정근식, 1999; 정병순, 2000).
 - 2) 성장기제론과 관련해서는 Molotch(1976), Logan · Molotch(1987)를 참조하고 도시체제론 및 통치체제와 관련해서는 Stone(1989), Stoker(1998), Pierre(1999) 등을 참조.

왜적이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선택적으로 통합하거나 배제한다. 셋째, 지역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뚜렷하며 ‘체계적 권력’을 통해 도시정치과정을 장악할 만큼 풍부한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성장이데올로기, 개발이데올로기를 일상적으로 유포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문제, 환경문제³⁾ 등은 등한시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회적 불평등이나 재분배에 관심을 두는 사회개혁적 정책안(social reform policy agenda)보다는 경제적 개발과 공적 하부구조의 개발, 사적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친성장정책안(progrowth policy agenda)을 주로 채택한다. 이러한 성장연합의 특성을 바탕으로 삼성차와 관련된 부산지역의 성장정치를 성장연합의 구성, 활동, 교섭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성장연합의 구성은 형성과정, 참여주체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성장연합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활동과정 및 자원동원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장이데올로기의 내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성장연합의 교섭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사소통 및 이해관철 경로를 추적하며 성장연합을 둘러싼 갈등양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성장연합의 구성, 활동, 교섭맥락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성장연합의 활동은 구성과 교섭맥락에 의해 규정되는 경향이 크며, 성장연합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대세력들을 규합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참여주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결국 성장연합의 구성, 활동, 교섭맥락은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정치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

3) 부산지역의 성장정치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을숙도 철새도래지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진행된 바 있다(백두주, 2002).

2. 삼성자동차 부산유치과정과 성장연합

1) 성장연합의 구성

가. 형성과정 및 참여주체

성장연합의 형성계기는 1993년부터 승용차사업진출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던 삼성그룹에 대해 1994년 5월 상공자원부에서 진입불허 결정을 표명함에 따라 기존 추진주체였던 상공회의소, 부산시, 지역정치권은 소극적 대응에 머무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부산유치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면서부터였다. 이후 시민단체 중 ‘부산을 가꾸는 모임’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지역언론의 공격적 보도⁴⁾가 결합되면서 삼성차부산유치문제는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역언론들은 기존 추진주체들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삼성차부산유치를 ‘시민의 정서’로 일치시키고 추락하는 부산경제를 위해서는 삼성차유치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연이어 보도했다. 이 같은 언론의 보도 이후 ‘부산을 가꾸는 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몇몇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유치결의대회와 함께 100만명 서명운동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유기적 공조체제는 성장연합의 형성 및 외연적 확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언론이 범시민적 유치운동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자 부산지역 23개 단체로 구성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부산지역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정사협’)와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지지성명서를 내면서 유치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유치운동의 확산분위기는 결국 산발적으로 흩어진 여론을 집적시키고 강력하게 운동을 추진해나갈 구심체 건설로 이어져 1994년 9월 24일에

4) 지역언론의 공격적 보도는 국제신문이 1994년 8월 5일자 1면 “삼성차 유치 표류”라는 표제를 시작으로 바로 다음날부터 “삼성차 부산에 와야한다”는 기획시리즈를 게재하면서 본격화된다. 주요 내용은 소극적 대응에 머무는 기존 유치주체들에 대한 비판, 진입 불허에 대한 반박논리, 삼성측이 제시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선전, 지역 확대에 근거한 시민정서 자극, 정부의 진입결정과 정치적 결단 촉구 등이다.

‘자동차산업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가 결성된다. 성장연합 형성과정이 이 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삼성차 신규진입 문제에 대해 냉철한 토론과 영향을 바탕으로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생략한 채 언론의 공격적 보도와 일부 시민단체의 ‘일방적 여론동원화 과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보다는 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요 단체의 엘리트들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주체는 크게 여섯 영역의 주요 행위자(집단)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 유치과정을 비공식적으로 진행시켰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지역정치권, 삼성그룹 그리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진입불허 결정을 내린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시민단체들과 지역언론들이다. 이들 중 핵심 집단(core group)은 시민엘리트연합(‘범추위’)과 지역언론을 들 수 있으며 시민엘리트연합 내에서도 ‘부산을 가꾸는 모임’과 ‘목요학술회’⁵⁾, 지역 방송사보다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지방방송사의 경우는 중앙방송사의 계열사 형태를 띠지만 지역신문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지역적 이해관계가 보다 뚜렷하기 때문이다. ‘부산을 가꾸는 모임’을 선두로 하여 결성된 ‘범추위’는 외연적으로는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결성되었다고 선전되었지만 실제 단체 명의로 참여한 숫자는 미비했으며 인물에 의한 직책참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범추위’가 대중적 기반과 참여로

5) 목요학술회는 성장연합의 이론적 토대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한 핵심집단으로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요학술회의 회원구성을 보면 교수(27명), 언론(4명), 관계(3명), 문화계(4명), 실업계(21명), 의료·법조계(9명), 기타(4명) 등이다. 언론계에는 부산일보 사장을 비롯하여 지역신문의 전현직 논설위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관계는 부산지방 국세청 국장과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등이 포함되어있다. 실업계는 대부분 토착자본가들이다. 목요학술회는 지역 시민단체의 인력 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삼성차 빅딜이후 결성된 ‘부산경제가꾸기 시민연대’에 공동의장 1인, 고문 2인, 사무총장 1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을 가꾸는 모임’에는 고문 1인,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3인이 활동하고 있다(2000년 2월 17일, 현재 ‘목요학술회’ 회원명부 참조).

구성된 것이라기보다 몇몇 지역의 시민단체엘리트에 의해 결성이 주도된 ‘엘리트연합’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범추위’에는 중소기업자본가 집단, 이익단체 및 압력단체, 관변단체, 전국적 시민단체의 지역조직, 학계, 기타 다양한 시민단체 등을 포괄하고 있고 임원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한 인물들이다. 또한 외형적으로 ‘범추위’는 시민단체들의 연합체 형태를 띠지만 내부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토착자본가집단 및 경제세력과의 경계가 불명확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문을 맡고 있고 종교계의 참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선전했지만 신도회 회장들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자본가들이다.

나. 이해관계

성장연합을 이루고 있는 주요 행위자들은 (외연적) ‘성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긴 하나 각각의 참여주체들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부산시의 이해관계는 자본·기술중심의 경제구조고도화를 통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60년대 정부의 경공업 주도의 산업정책에서는 ‘선택된 지역’이 되었으나 70년대 들어 정부의 정책이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배제된 지역’으로 전락하였고 그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에 실패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삼성차의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부산지역의 이러한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시켜줄 매력적인 유치산업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부산시는 1990년대 들어 강서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산업인프라 미비, 높은 분양가 산정 등으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골몰하고 있던 차에 삼성차가 입주하게 되면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당시 부산지역의 자본구조는 99.3%가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자본가집단인 상공회의소에게 중소기업의 활성화 문제는 자신들의 존재기반과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상공회의소 경우 주어진 행정구역 내에서만 회원사의 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사

가 감소하면 경제적 이익의 감소, 그리고 곧이어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핵심적 이해관계는 삼성차 부품업체 선정에 부산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차 본사를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연구개발 기능 및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지원이 따를 것으로 기대했었다.⁶⁾

한국의 정치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지역정당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주의를 ‘정치권력 재생산 메커니즘’으로 이용해왔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은 지역 토착엘리트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간의 관계는 토착엘리트들은 선거시기에 지역정치인들을 위해 정치적 자원을 동원해주고 지역정치인들은 토착엘리트들의 이해관계를 일상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상호의존적 교환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95년부터는 민선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됨으로 인해 지역정치인들은 안정적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서라도 삼성차부산유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지방의회의 경우 차기 선거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추구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이해관계이다.⁷⁾

지역신문사의 경우 그 시장이 중앙지와 달리 특정지역에 국한됨으로써 지역의 성장과 관련된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여

6) 지역업체의 삼성차 부품업체 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는 당시 상공회의소 회장의 참여였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유치 후 삼성차진출의 공을 인정받아 협력업체 중 가장 수익성이 좋다는 와이어하네스(전기배선) 독점권을 인정받아 삼성차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또한 삼성차 부산유치 후 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이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소의 부산설립,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삼성차측에 요구했다(상공회의소, 1995: 26).

7) 부산시의회의 제1대 의원구성을 보면 건설업, 상공업, 운수업을 경영하는 토착 자본가 또는 자영업자가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대의 경우도 건설업, 제조업, 수산업, 운수업, 금융,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의원비율이 67%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의 원리보다는 독점의 원리와 정부와의 유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지방정부의 통치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한다(이은진, 1999: 19~23). 예를 들어 제1대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역의 유력 건설업체의 회장으로 수주공사의 약 90%가 관급공사였으며 삼성차가 위치한공단인근인 녹산국가공단 1공구 공사도 맡은 바가 있다.

론형성의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사들은 비교적 풍부한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지대’(political rent)를 토대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거래를 한다(박소라, 2000). 삼성차유치와 관련해서 지역신문사들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는 광고시장의 확충이라 할 수 있다. 수입의 약 70%이상을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삼성차유치는 삼성이라는 대재벌 광고주를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연관 업체들이 새로운 광고주로 떠오르기 때문에 지역신문사들의 경우도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시민엘리트연합의 이해관계는 지역차원의 집단적 정체성 강화, 지역 내 시민단체로서의 위상강화, NGO활동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시민엘리트연합 내의 핵심적 행위자집단인 ‘부산을 가꾸는 모임’과 ‘목요학술회’는 애향심과 향토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단체의 정체성을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집단’으로 표방하면서 ‘문화도시로서의 부산’을 내세우고 있다.⁸⁾ 그러나 이들 단체의 경우 문화적 빈곤을 경제적 빈곤에서 찾음으로써 지역의 외연적 성장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고, 삼성차부산유치운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4년 이후 지역의 전문가 집단이 대거 결합하면서 활성화된 부산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들도 삼성차유치운동 이후 지역 내 위상 및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부산시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⁹⁾ 삼성차부산유치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

8) 한국사회의 지역정체성 형성과정은 행정단위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실제로 인식된 세계에서는 위계적 서열의식”과 “다른 지역에 대한 우월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지역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 내 지방정부나 지배집단이 편찬하는 ‘향토독본’인데 “국민적 통합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이런 ‘향토독본’은 사라지거나 비중이 감소하지만, 지역의 자율적 발전이나 지역간 경쟁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다시 강화된다”(정근식, 1997: 310~311). 성장연합의 핵심행위자인 ‘부산을 가꾸는 모임’의 경우 이러한 ‘향토독본’을 통한 지역정체성을 꾸준히 강조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부산을 가꾸는 모임’에서 출판한 최해균(1990; 1997; 2000)을 참조할 것.

9) 시민엘리트연합의 핵심집단이었던 ‘시민연대’는 삼성차 유치 및 매각과정 이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쟁점이 되는 경제현안에 대해서

내 시민단체들의 지원과도 무관하지 않았다.¹⁰⁾

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 진출이라는 이해관계와 함께 지역 내 성장연합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으며 유치운동 내내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행위자(집단)별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 성장연합의 활동

성장연합 행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자원은 특정한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 힘을 발휘한다. 부산지역 성장연합의 활동과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특정국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중앙정치권력과의 관계, 기존 업체들과의 관계 등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앙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활동과정이 변하기도 하고 성장연합의 지역적 대응방식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기도 한다.

제1시기는 부산시, 상공회의소, 지역정치권이 비공식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던 ‘비공식적 대응기’이다.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은 삼성차문제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역간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식적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고 비공식적 수준에서 접촉하거나 중앙의 눈치를 살피는 정도에 머문다.¹¹⁾ 이러한 활동은 지방정부나 지역정치

는 ‘범시민추진(대책)위원회’라는 지역 내 네트워크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에도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범시민위원회(5개 단체)’, ‘항만사랑시민모임’, ‘개별주식선물 증권거래소 상장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81개 단체), ‘명지대교 직선형 조기 건설 범시민추진위원회’(93개 단체) 등이 있다.

10) 삼성차가 부산에 유치된 이후 삼성은 그룹차원에서 부산지역에 지역본부를 가동하여 부산지역의 환경, 문화, 복지, 민간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부산 국제영화제와 동아시아경기의 후원을 비롯한 주요 문화예술 행사의 후원은 물론이고 각종 학술발표회, 시민운동, 자원봉사활동, 낙동강살리기, 장애인복지 등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활동(NGO)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서세욱, 1998: 179)하였다고 지적되었다.

11) 한 예로 당시 부산지역 출신 강경식 의원의 활동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삼성차공장을 부산에 설립하도록 설득한 것, 둘째, 부산시 관계자들을 만나 저렴한 가격에 부지 제공

권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력에 상대적으로 종속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비해 상공회의소와 삼성측의 활동은 비교적 활발했다. 상공회의소는 회장 선거공약 중 핵심적 추진사업을 삼성차부산유치로 내세우며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 및 설득작업을 활발히 전개한다. 삼성측 역시 언론을 통한 여론조성 작업 및 1994년 4월 일본의 닛산 자동차와 기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승용차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시켰다.

제2시기는 상공자원부의 삼성차진입 불허 결정에 따른 ‘소극적 대응기’이다. 부산시나 지역정치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관망하는 자세에 머문다. 당시 부산시장은 중앙권력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에 자율성을 획득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활동을 하기에는 구조적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외 시민단체들의 개입이 시작되고, 상공회의소의 건의활동 및 여론조성 작업, 시의회의 ‘삼성승용차부산유치건의문’ 채택 등의 활동이 있었으나 지역의 현안으로 부각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비서실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및 대외 로비를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여론조성 작업에 들어갔다.¹²⁾

제3시기는 시민단체들과 지역언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적극적 대응기’이다. 유치운동이 적극적 대응기로 진입한 계기는 지역언론들이 삼성차부산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라고 설명한 것,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한 여론조성 및 삼성차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등이다(강경식 前의원 인터뷰 중, 2000년 1월 9일). 또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과 관련해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활동과 관련해서 삼성측과의 유착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 12) 삼성그룹은 당시 그룹비서실 전무를 사령탑으로 대책팀을 구성하여 전무급 4명의 임직원을 부산지역에 상주시켰고 이들은 지역의 상공인, 정치인들과 접촉하여 청와대와 상공자원부, 기존 업계의 동태를 전하면서 지역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도 그룹내 홍보팀과 정보팀 인력으로 구성된 ‘대외협력단’이라는 비상설 로비조직을 가동하여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사를 공격적으로 내보내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의 유력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부산시와 지방의회, 상공회의소는 간접적 지원정도에 머물면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공동보조를 맞추는데 그친다. 삼성그룹은 ‘정사협’과 ‘부산경실련’이 유치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삼성측에 장기적인 투자청사진을 요구하자 며칠 후 삼성측은 ‘삼성의 부산지역 발전에 대한 사업기본계획(안)’을 즉각적으로 발표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보였다.¹³⁾

이와 같은 활동에 주요 자원이 삼성차와 관련한 성장이데올로기이다. 성장연합은 ‘성장’이라는 의제를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동맹’의 성격을 갖는다.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성장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삼성차 유치=부산지역 경제발전’이라는 등식이다. 보다 구체적인 성장이데올로기는 삼성차부산유치가 가져다 줄 파급효과를 제시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주로 부산지역 대학에 종사하는 학자, 관변 연구소,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담당했다.¹⁴⁾

3) 성장연합의 교섭맥락

가. 의사소통 및 이해관철 경로

성장연합 내 의사소통방식은 특정한 형태로 틀 지워지지 않는다. 공식적인 간담회, 회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토론회, 각 행위자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성명서 또는 건의서, 행사 협조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및 이해관계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

13) 삼성이 발표한 투자계획은 경제침체에 허덕이던 부산지역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1, 2공장에 건설에 10조원, 신항만 건설에 3조 7천억원의 투자를 비롯해 2천억원을 투자해 삼성의료원, 탁아소 등의 사회복지시설 확충, 5백억원을 투자하여 노인촌 건립, 아시안게임부산유치 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참여 등 방대한 투자계획(국제신문, 1994년 8월 25일자)을 담고 있었다.

14) 삼성차 부산유치와 관련된 파급효과 분석사례는 동남개발연구원(1993: 20~27), 하상조(1994: 51~54), 부산상공회의소(1995: 71), 부산광역시(1995: 372), ‘범추위’(1995: 68~69) 등을 참조.

이 지배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 성장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 내 엘리트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원들은 일상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지배블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안에서는 자원들의 결합도가 더욱 높아져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범추위’가 비록 인물중심으로 결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지역의 영향력 있는 단체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언론에 의해 그 외양이 시민들의 보편적 이해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의 연합체로 ‘이미지화’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다. 지역국회의원들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치운동을 삼성차진입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맡았다. ‘범추위’는 지역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으며 이러한 압박은 지역정치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부산에 정치적 기반을 둔 이해관계¹⁵⁾로 인해 삼성의 승용차산업 신규진입 허용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된다. 삼성의 경우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유치노력을 하였다. 여당정치인들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하는 한편 삼성그룹회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신규진입 요청을 하기도 했다. 삼성이 성장연합과 본격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한 것은 공장입지를 부산으로 정하면서부터였고 이는 부산지역의 여론을 정략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였다. 결론적으로 성장연합 내 의사소통과정 및 이해관계 관철 경로는 공식적인 공론장에서 형성되지 않아 매우 폐쇄적인 형태를 띠었다.

15) 삼성자동차 신규진입이 허가될 당시 정부와 집권여당의 핵심적 요직은 거의 모두 부산지역 출신 정치인들 일색이었다. 구체적으로 초기에 삼성차진입 반대 입장을 보이던 청와대경제수석도 94년 10월 4일 개각을 통해 삼성차유치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부산출신의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바뀌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내무부장관, 청와대총무수석, 민자당사무총장이 모두 부산출신의 정치인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들은 삼성차 허용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성장연합을 둘러싼 갈등구조

성장연합을 둘러싼 갈등구조는 삼성차 신규진입에 대한 찬성논리와 반대논리의 대립, 행위자(집단)간의 대립구도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해석에 대한 입장차이가 뚜렷한데, 이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합리화, 정당화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당시 논쟁이 되었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 신규진입에 대한 주요쟁점

	찬 성 논 리	반 대 논 리
기술자립화	첨단기술·모델도입에 의한 기술발전	기술의 대외종속성 강화
부품산업	부품기업의 공용화, 공급물량증가	전문성 와해, 부품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부품업체의 영세화 촉진
시장환경	무한한 세계시장	공급과잉, 과잉투자, 중복투자
인력수급	자체양성	삼성의 인력 스카웃에 의한 교란
규모의 경제	세계시장 점유율 향상을 통한 실현	업체당 평균 생산규모 감소로 저해
이론적 토대	개방경제론	보호육성론
지역·국민경제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도모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국민경제 발전 저해
정부정책	‘신경제’의 자율과 창의	업종전문화 시책
국제경쟁력	경쟁을 통한 체질강화로 향상	경쟁격화와 독자모델개발지연으로 저하

행위자(집단)간 대립구도는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의 갈등이다. 당시 집권여당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지역에 정치적 지지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야당의 경우는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에 절대적인 지지기반을 두고 있었다. 집권여당의원들은 민간의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찬성의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의 경우는 상공자원부의 업종전문화정책이 외부의 간섭으로 처리돼서는 안되며,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신규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치권의 대립과는 달

리 부산지역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단일한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는 지역 내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성장연합과 기존의 완성차 업계, 부품업계간에 발생했던 경제적 차원에서의 갈등이다. 1994년 12월 2일 상공부차관이 삼성차진입 허용방침을 발표하자 기존업계 완성차 업계의 ‘6사 사장단 공동대책위’와 부품업체들은 산업혼란과 출혈경쟁, 그리고 수입부품의 증가로 기술 예측화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허용방침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 각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12월 7일 서둘러 삼성측의 기술도입 신고서를 수리하게 된다.

셋째, 중앙언론과 지방언론간의 갈등이다. 이들의 보도양태는 뚜렷이 구분되는데, 지방언론의 경우 삼성차신규진입은 부산경제회생의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유치운동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반면 중앙언론의 보도양태는 삼성그룹이 부산을 볼모로 신규진입을 시도했으며, 경제논리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정치논리에 따른 ‘정치적 특혜’라는 논조의 보도를 연일 내보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시민단체 안에서의 갈등인데, ‘중앙경실련’은 “전문가의 지혜와 국민의 합의를 모으지 않고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로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성명서(동아일보, 1994년 12월 8일자)를 발표했으나 ‘부산경실련’은 이와 달리 “부산유치운동을 단순히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부산시민은 기존 중앙위주의 정치만능논리와 이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사회발전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지방민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요구가 담겨져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시민단체 내에서도 ‘중앙적 시각’과 ‘지방적 시각’의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었다.

삼성그룹은 삼성차문제가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진출이 확정된 이후 타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에 대규모 투자청사진¹⁶⁾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신규로 자동차산업에

16)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대불공단에 5천억원, 여천공장에 5천억원, 군산·장항에

진출함에 따른 대규모투자가 예상됨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투자청사진은 현실적으로 실행여부가 불투명했을 뿐 아니라 수조원에 달하는 산업투자를 며칠만에 급조해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3. 삼성자동차 빅딜 및 매각과정과 성장연합

1) 성장연합의 구성

가. 성장연합의 재형성 과정

삼성그룹은 1995년 3월에 삼성자동차(주)를 설립하고 그해 5월 부산 신호공단에 자동차공장을 착공하였고 1996년 10월 총 면적 50만평의 부지에 연건평 20만평에 달하는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그룹차원의 자동차사업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에 따라 한국 자동차산업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내수시장은 50%이상 감소하게 되고 수출도 현재의 재고로 둔화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변화된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정책을 실행 하기에 이르렀고 국내자동차산업의 공급과잉 주범으로 몰린 삼성차는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되게 되었다. 국내 정치지형 역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다. 삼성차유치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던 정치세력이 집권함과 동시에 삼성차진입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삼성차는 빅딜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중앙정권과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의 조직적 반발이 가시화되어 갔다. ‘부산을 가꾸는 모임’은 빅딜논의에 대해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결국 1998년 6월에 ‘삼성차살리기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하

2조 5천억원, 목포항에 5천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그 외 광주지역에 연산 4백 50만대 규모의 전자렌지 공장을 신설하며 하남공단 등 호남지역에 반도체 조립공장 신설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한겨레신문, 1994년 12월 7일자).

기에 이른다. 이는 부산지역 4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운동본부’ 결성으로 이어졌고 유치운동에 참여하였던 시민단체들의 재결집을 가져왔다. 1998년에 기아자동차 국제입찰과정에서 삼성차가 3차 입찰에서 실패하자 ‘시민운동본부’는 삼성차의 독자경영을 지지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빅딜논의, 퇴출론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삼성차살리기 범시민비상대책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게 된다. 1998년 12월 정부의 빅딜방침이 발표되자 부산지역은 지방정부, 토착자본가집단, 지역언론, 지역정치권 등을 포괄하는 ‘총력동원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빅딜발표 이후 시민엘리트연합은 ‘부산경제가꾸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로 조직의 성격을 재정립하였으며 삼성차의 독자경영에 큰 비중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1999년 6월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하여 제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부산자동차산업살리기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여 공식적 성장연합을 형성한다.

나. 참여주체

빅딜과정 이후 부산지역 성장연합의 참여주체는 부산시, 상공회의소와 ‘협업업체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로 구성된 토착중소자본가집단, 지방언론, ‘시민연대’로 대표되는 시민엘리트연합, 한나라당부산시지부, 민주당부산시지부(이전 국민회의부산시지부), 자민련부산시지부, 시의회를 포괄하는 지역정치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삼성그룹이 제외된 것 이외에는 외형적으로 유치과정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정치적 변화이다. 유치과정에서는 지역정치세력과 중앙정치세력이 일치되었던 것과는 달리 중앙정치권력의 성격변화는 중앙과 지역간의 권력관계를 변화시켰다. 이는 한국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상황에서 중앙정치의 변동은 지역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만흠, 1998: 175). 또한 1995년부터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시작되었고 1998년 지자체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2000년 4월 총선 등

의 선거국면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정치권은 ‘전통적 지지기반의 방어’와 ‘새로운 정치적 교두보 확보’라는 기치 하에 삼성차문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둘째, ‘생대위’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전면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유치 당시 상공회의소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첨단업종,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의 대기업 부산유치’라는 다소 포괄적인 슬로건 하에 유치운동을 전개했으나 이 시기에는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생존’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셋째, 지역간의 협력이 사안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998년에 있었던 기아·아시아자동차 국제입찰과 관련해서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시민단체들과 협력관계가 이루어졌으며 협력업체들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 경남상공회의소, 김해시, 김해시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었다. 그리고 법정관리 이후에는 삼성차판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상황에서는 경남지역 그리고 대구, 경북의 시민단체와 협력관계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성장연합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로 구체화된 이 조직은 부산시주도로 운영되었다. ‘비대위’에는 부산시를 비롯하여 시의회, 지역국회의원, 유관·언론기관, 상공계, 시민단체, ‘생대위’ 등을 포괄하고 있다. 부산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로 지역총력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성장연합은 상대적으로 많은 협상력을 확보하게 된다.

2) 성장연합의 활동

삼성차가 프랑스 르노사에 매각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삼성차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부산지역 성장연합은 신속하게 재결집하였지만 유치 당시와는 달리 성장연합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는가 하면 활동과정에서도 사안별로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 성장연합의 활동과정은 국면적 상황에 따라 분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시기는 빅딜논의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엘리트연합과 지역언론주도의 ‘방어적 대응기’이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삼성차 신규진출에

반대했던 정치세력이 중앙권력을 장악하면서 삼성차와 관련된 ‘정치적 특혜설’과 함께 조사방침이 나오자 부산지역에서는 시민엘리트연합과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성장연합을 재형성하였다. 시민엘리트연합은 시민여론조사, 각종 세미나, 시민견기대회 및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고, 언론은 이러한 활동을 집중 조명하면서 지역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시켜나갔다. 지역정치권 역시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야당은 부산지역에서 만큼은 ‘여당’을 자임하기 위해, 여당은 새로운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역시 이 시기에는 성장연합과 공동보조를 맞추며 독자생존을 위해 기아·아시아자동차의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이 시기 주목할 점은 부산과 광주지역간 연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기아·아시아자동차 국제입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즉 부산지역은 국제입찰을 통해 삼성차 독자생존의 길을 열고, 광주의 경우에는 지역 내 주민들의 고용승계문제가 걸려있었다.¹⁷⁾ 반면 상공회의소와 부산시의 경우는 소극적인 활동에 국한되었다.¹⁸⁾

제2시기는 1998년 12월 2일 청와대 경제수석의 빅딜발표 이후 시민엘리트연합, 부산시, 지역정치권, 지역언론, 상공회의소, 협력업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인 펼친 ‘공세적 대응기’이다. 부산시와 시의회도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청와대 및 중앙정치권과 직접적 접촉을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시민연대’는 빅딜은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원칙론

17)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삼성차의 기아인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왜냐하면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4개사 중 고용승계를 보장한 기업은 삼성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산과 광주지역의 연대과정에서 겉으로는 ‘영호남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역적 이해’가 상호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대가 가능했다.

18) 상공회의소의 소극적 활동은 유치 당시 공을 인정받아 협력업체로 참여했던 회장의 입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당시 상공회의소 회장은 “삼성차협력업체와 관계있는 입장에서 쓸데없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 최근 부산시민들의 삼성차살리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뉴스플러스, 1999, 제194호, 36).

하에 빅딜백지화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는 시민엘리트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연합의 ‘퇴행적 과잉정치화’ 현상이 표면적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삼성차 빅딜은 정치논리에 따른 부산경제죽이기”로 규정하고 “삼성차의 정상가동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공세적 입장을 견지했다(부산일보, 1999년 6월 24일자; 6월 25일자). 이들의 자원동원방식은 ‘적대적 지역감정’의 자극을 통한 시민여론의 조성이었다.¹⁹⁾ 이는 지역 내 소수엘리트들에 의해 여론형성과정이 독점화되는 한계를 분명히 나타내었다.

제3시기는 삼성차 법정관리 이후 제3자 매각협상을 위해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협상적 대응기’이다.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부산시를 중심으로 각 행위자들은 보다 응집적인 형태를 띤다. 유치당 시와 달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 환경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부산시장이 중앙으로부터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으며 중앙집권세력과 부산시장의 소속정당이 달라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정치적으로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차의 법정관리가 신청되자 ‘비대위’는 제3자 인수안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한편, 공장가동중단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삼성측과의 협상을 통해 한시적 생산에 들어가기에 이른다. 이후 ‘비대위’는 SM5 차종의 판매를 위한 총동원체제를 구축하게 된다.²⁰⁾ 1999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19) 지역감정 자극을 통한 여론동원 사례는 1999년 1월 2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마산집회(‘김대중정권의 국정실패 및 불법사찰 규탄대회’)와 1999년 7월 7일, 시민연대에 의해 개최된 ‘김대중정권 규탄대회 및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마산집회에서 시민연대는 홍보차량, 현수막, 깃발 등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원색적 구호가 난무하였다. 특히 7월 7일 집회에서는 김영삼전대통령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집회참석을 요청하였고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김영삼전대통령은 “삼성차의 청산방침은 전적으로 정치보복이며 부산경제 죽이기”이고 “부산시민들의 자존심과 생활을 파괴하는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부산일보, 1999년 1월 25일자; 7월 5일자; 이코노미스트, 1999년, 제495호 참조).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채권단이 르노사와 매각우선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대위’는 조기타결을 위해 파리의 르노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직업훈련원 등 삼성차 인수에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0년 9월 1일 르노삼성차가 출범하게 된다.

유치 당시와 마찬가지로 성장이데올로기는 성장연합의 활동에 주요한 자원이 되었다. 유치운동 당시 성장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삼성차부산 유치=부산경제발전’이었던 반면 빅딜 및 매각과정에서는 ‘삼성차 빅딜=부산경제죽이기’, ‘삼성차퇴출=지역경제파산’이라는 등식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빅딜에 대한 정치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삼성차퇴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실액 추정으로 현실화되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막연한 수준의 위기감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이러한 성장이데올로기의 주요 생산자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²¹⁾

3) 성장연합의 교섭맥락

가. 의사소통 및 이해관철 경로

유치과정과 빅딜 이후에 나타난 성장연합의 이해관철 경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 핵심적인 요인은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둔 한나라

20) ‘비대위’는 ‘SM5 판매 시민봉사단’을 발족하고 부산시장, 시의회의장, 강서구청장의 관용차를 모두 SM5로 바꿨다. 상공회의소도 7000여 회원업체를 상대로 구입을 독려했고 지역은행인 부산은행도 삼성차구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민연대’도 가두캠페인과 함께 ‘SM5 소비자모임’을 결성하고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부산경제살리기를 위해 구입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르노삼성차가 출범한 이후에도 부산시는 ‘부산자동차사랑 범시민운동’(I Love SM5)을 전개하고 범시민 판매봉사단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르노거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연대’ 역시 ‘르노클럽’(르노삼성차를 사랑하는 모임)의 결성, ‘프랑스 주간’을 정해 프랑스문화원과 함께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펼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21) 이 시기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갑수(1998), 원희연·정방진(1999), 원희연(2000)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Pusan Chamber』, 1999년 8월호; 2000년 5월호; 부산일보, 2000년 5월 25일자를 참조할 것.

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략하고 지역에 정치적 지지기반이 미약한 기존 야당이 여당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현안문제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중개인의 역할을 맡았던 지역 내 정치세력의 변화가 대정부 채널의 상실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이은 선거정국에 따라 여당의 경우는 지역 내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야당의 경우는 안정적 정치지지기반을 유지하게 위해 지역관련 위원회나 대책위를 꾸리고 선거정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중앙정치권의 지형변화와 함께 의사소통 및 이해관철 방식이 유치운동 당시 비공식적 형태와 달리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치과정에서는 지역정치권과 중앙정치권의 성격이 일치되어 긴밀한 정치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중앙정치세력의 교체이후 정치적 친밀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연합과의 개인적 유대관계 형성 또한 미약하여 상호작용방식의 공식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성장연합은 ‘비대위’라는 공식적인 의사결정체를 구성하였고 정부여당인사들이 부산시를 비롯한 성장연합의 행위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갖는 한편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부산을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 등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 채널을 형성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거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거래의 매개는 ‘선거’이다. 삼성차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출마를 앞둔 여당정치인들이 대정부 압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성장연합의 행위자들 역시 지역 내 여론동원을 바탕으로 삼성차 재가동이라는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세력들을 압박하고 활용해 나갔다. 부산지역에서 선거출마를 선언한 소수 여당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에 중앙정부도 직접적인 대응을 보임으로써 유치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함께 부산시관계자, 금융권, 삼성차관계자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협력업체들과도 수시로 접촉하면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부산광역시, 1999). 삼성차 재가동이라는 성장연합의 목표는 경남지역과 그

이해를 같이 했다. 빅딜이 발표되자 부산지역과 경남지역의 관련 단체들은 연합집회를 개최하였고, 경남지역에서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관련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역 내 협력업체 문제해결을 위해 대정부 건의 등 본격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나. 성장연합을 둘러싼 갈등구조

성장연합을 둘러싼 갈등구조는 첫째, 삼성차 청산론과 존속론 간의 대립이다.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 삼성차부산공장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라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경제논리’를 따진 결과라면서 청산론과 존속론으로 입장이 갈리게 된다. 부산공장은 가동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만큼 청산해야된다는 입장의 주요 내용은 KDI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삼성차를 가동할 경우 10년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해 지역정서에 매몰되어 정치논리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순수 경제논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잉중복투자 문제와 정부의 차별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상호지급보증 금지 조치들로 인해 삼성차의 경우 자금동원면에서도 대책이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와 달리 성장연합이 견지했던 존속론의 경우 부산공장이 갱생 가능한 이유를 국내수요의 회복, 최신 공장으로 인해 획기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하며, 제품의 우수성, 삼성그룹 이견회 회장의 사재출연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및 제3자 인수가능성의 증대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삼성차부산공장의 경우 청산가치 보다 기업의 존속가치가 더 많아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²²⁾

둘째, 유치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결집된 모습과는 달리 빅딜 및 매각과정에서는 ‘시민연대’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앙차원의 시민사

22) 박인호(1999)는 삼성차의 청산가치를 1조 1,795억원, 존속가치를 2조 5천억원으로, 법원에 제출된 ‘회사정리절차개시 명령신청서’를 작성한 세종법무법인의 경우 존속가치를 3조 2,299억원, 청산가치를 1조 1,79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자료를 근거로 성장연합은 부산삼성차공장은 존속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회단체들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부산경실련’과 ‘부산참여연합’ 등은 ‘시민연대’가 주도하는 삼성차살리기 운동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부산경실련’은 “한국경제위기를 초래한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과잉증복투자를 시정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삼성자동차도 구조조정에 예외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부산일보, 1998년 6월 25일자). 이어 ‘부산참여연합’의 경우도 집행위원회를 열어 불참을 결정하였지만 공동대표는 다른 단체명의로 삼성차살리기 운동에 계속 참여했다(부산일보, 1998년 6월 28일자). 또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²³⁾ 중앙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성장연합과 반대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맹목적인 삼성차살리기운동과 다른 흐름을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갈등구조에도 불구하고 삼성차 처리과정에서는 ‘시민연대’를 축으로 하는 시민단체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셋째, 부산과 광주지역간의 갈등이다. 지역간 갈등은 삼성그룹이 삼성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산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수원에 위치한 전자부품사업 부산유치 등의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광주지역에서는 더 이상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되며 전자부품사업 부산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²⁴⁾ 이와 같이 ‘시각

23) 시민연대주도의 삼성차살리기운동에 반대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연대의 정치편향화를 지적하면서 “일부시민단체들이 삼성자동차의 독자경영만 주장하면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김영삼 전대통령을 앞장세우려는 등 퇴행적인 방식으로 인해 부산지역사회의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비판하면서 삼성차의 해결방향은 “국가경제의 구조개혁과 재벌개혁 그리고 과잉증복투자 산업의 해소라는 근본적인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999년 7월 13일, 삼성차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참조).

24) 광주지역의 반발은 다음과 같은 광주지역 신문사설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일부라인 부산 이전설이 바로 이같은 대승적 차원의 경제원리를 외면한 치졸한 발상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가까스로 문민정부 당시 낙후된 호남지역 경제 소생방안의 일환으로 유치된 광주 백색가전단지 조성계획이 부산민심 등 정치논리여파로 차질을 빚게 된다면 언어도단이다”(광주일보, 1999년 7월 10일자).

의 범위'를 지역에 한정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동일한 경우는 연대를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간 경쟁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삼성자동차 유치 및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부산지역의 성장연합 특성은 성장연합의 구성, 활동, 교섭맥락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성장연합의 구성에서는 핵심집단을 중심으로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집단)들이 빠르게 규합되어 갔다. 이들이 빠르게 규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합리적인 의사소통과정이나 토론을 거치기보다는 풍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이데올로기적) 자원을 토대로 소수의 지역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결집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평소의 인맥을 통하여 강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속성을 가진다. 참여주체는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토착중소자본가집단, 지방정치권, 시민엘리트연합, 지방언론 등이 상정될 수 있으나 이들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라고 불리는 집단의 내부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수의 토착자본가,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영업자, 관변단체의 대표자 등이 포진되어 있으며 시민단체의 핵심적 인사는 정치권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부산지역의 경우 특정한 정치세력이 장기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정치적인 협력체'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둘째, 성장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시민엘리트세력과 언론이 유기적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관변 연구기관, 토착지식인들이 만들어 낸 성장이데올로기, 즉 삼성차와 관련해서는 삼성차유치가 가져다주는 파급효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해냄으로써 삼성자동차문제와 지역경제활성화문제를 일치시킨다. 외연적 경제성장을 무기로 한 '일방통행적 활동'은 지역공동체의 다른 중

요한 요소들을 압도해 버린다. 이는 성장지상주의를 초래해 특정 지역 개발이 지역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간과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주민들의 참여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지역정책이 소수 지배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되는 ‘파행적인 참여정치지형’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제에 의한 참여정치의 활성화 목표가 일부 토착세력의 합법적인 이해관계 관철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연합의 자원동원방식은 하향식 자원동원의 한계로 지역주의(혹은 지역감정)를 그 핵심기제로 사용하였다. 이는 지방정치과정이 중앙정치과정에 종속된 상황 속에서 중앙정치세력들이 지역주의를 그 존재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정치과정에서도 효과적인 동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성장연합의 교섭맥락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지역정치 한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중앙으로의 소용돌이’ 현상은 지역정치활성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주요 요인이다. 삼성차문제의 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중앙정치권력에 의해 지역의 문제가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장연합의 교섭맥락도 중앙정치권력에 대한 압력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립지형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선거라는 정치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권력은 성장연합과 제한적 타협으로 상호이해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간의 의사소통은 중앙과 지방의 정치세력이 동일한 정치적 협력체일 경우는 주로 비공식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중앙과 지방의 정치세력이 상이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나타나는데 중앙과 지방의 정치세력이 동일했던 유치과정에서는 외형적으로는 100만인 서명운동 등이 이루어지고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인 결정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 중앙과 지방의 정치세력이 상이한 빅딜 이후 매각까지의

과정을 보면 중앙의 집권정치세력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대규모 집회나 저항의 표출방법이 상당부분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삼성차유치 및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부산지역의 성장연합 특성을 살펴보았다. 성장연합의 특성은 각 국가나 지역의 상이한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가 및 지역간 비교연구를 통해 이론적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강명구(1997), 「지방자치와 도시정치: 행위자 중심적 해석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9집 1호.
- 김만흠(1998), 「지방정치론과 한국 지방정치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2집 4호.
- 뉴스플러스(1999), 제194호.
- 동남개발연구원(1993), 「부산지역 자동차산업유치 가능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박소라(2000), 「한국 신문의 경영실태 분석」, 『언론의 왜곡편파 보도실태와 개선방향』, 언론개혁시민연대.
- 백두주(2002), 「지방자치시대의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 명지대교 건설을 둘러싼 부산지역 성장정치」, 『전국 사회학과 대학원 심포지엄』, 한국사회학회.
- 부산광역시(1995), 『부산경제 종합발전 대책 연구』.
- _____ (1999), 「삼성자동차 관련 주요추진상황」(1999년 1월 1일 ~ 12월 31일).
- 부산상공회의소(1995), 『삼성승용차 유치운동 백서』.
- _____ (1999), 『Pusan Chamber』, 8월호.
- _____ (2000), 『Pusan Chamber』, 5월호.

- 서세욱(1998), 『삼성차부산유치 시민운동기』, 부산을 가꾸는 모임.
- 원희연·정방진(1999), 「삼성자동차의 빅딜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산발전포럼』, 1·2월호, 부산발전연구원.
- 원희연(2000), 「삼성자동차 매각협상 이후의 전망과 과제」, 『부산발전포럼』, 5·6월호, 부산발전연구원.
- 이갑수(1998), 「부산경제 활성화와 삼성자동차」, 『빅딜문제에 따른 삼성자동차와 부산경제 회생방안』, 부산경제 살리기 시민심포지엄 자료집.
- 이은진(1999), 「지역정치의 현황: 주민, 토지소유주, 관료의 역학관계」, 『사회연구』, 제12집,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 이코노미스트(1999), 제495호.
- 자동차산업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1995), 『삼성차부산유치 시민운동추진보고서』.
- 정근식(1997), 「지역사회와 사회의식, 지역정체성」,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민음사.
- _____(1999), 「집합적 사회운동, 시민사회, ‘지역발전’: 도시체제론을 위하여」, 『지역사회학』, 지역사회학회 편, 통권 제1호, 한울.
- 정병순(2000), 「현대 지방정치이론의 회고: 통합적 지방정치에 대한 이론적 기여」, 『한국공간환경』, 제1권 제1호.
- 조명래(1999), 「신도시정치(학)의 문제설정과 쟁점」, 『공간과 사회』, 제11호.
- 최해균(1990), 『부산의 맥』, 지평.
- _____(1997), 『부산 7000년, 그 영욕의 발자취』, ①, ②, 부산을 가꾸는 모임.
- _____(2000), 『부산에 살으리랏다』, 부산을 가꾸는 모임.
- 하상조(1994), 「부산자동차 산업유치와 부산지역 부품산업 육성」, 『부산 산업정책과 자동차 산업』, 부산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광주일보, 1999년 7월 10일자.
- 국제신문, 1994년 8월 25일자.
- 동아일보, 1994년 12월 8일자.
- 부산일보, 1998년 6월 25일자.
- _____, 1998년 6월 28일자.
- _____, 1999년 1월 25일자.

_____, 1999년 6월 24일자.

_____, 1999년 6월 25일자.

_____, 1999년 7월 5일자.

_____, 2000년 5월 25일자.

한겨레신문, 1994년 12월 7일자.

Logan, J. R. · Molotch, H.(1987), *Urban Fortune: the Political Economic of Pla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olotch, H.(1976), "The City as a Growth Machine: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Pl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2.

Stoker, G.(1998),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Urban Governance," *Partnership in Urban Governance: European and American Experience*, London: Macmillan Press LTD.

Stone, C. N.(1989), *Regime Politics: Governing Atlanta, 1946~1988*, University Press of Kansas.

Pierre, J.(1999), "Models of Urban Governance: The Institutional Demension of Urban Politics," *Urban Affairs Review*, Vol. 32, No. 3, Sage Publications, Inc.

아시아 5개국 현지 근로자들의 직무가치 성향분석 - G. Hofstede 5차원을 중심으로 -

김서균

1. 서론

동남아시아와 같은 전략적 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이 본격화 될수록 우리기업의 경영체계도 종전의 국내 본사위주의 경영에서 점차 현지국 중심의 경영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해외 현지종업원들에게 적합한 경영관리를 개발, 적용하는 문제는 해외 자회사의 현지화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해외투자기업들이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현지공장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가 현지 인사, 노무관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현지 자회사의 근로자들의 현지문화와 가치관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또 어떠한 점에서 서로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중

김서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경영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화기술연구소 벤처기술평가센터 선임연구원. 최근 논문으로 「한국 벤처기업 현황과 벤처정책에 관한 시사점(Guideline for Policy of Venture Businesses of Government and Status of IT Venture Businesses in Korea)」(2003), 「한국정부의 벤처투자 현황과 투자전략(Investment Strategy and Actual Result of Venture Business of Korean Government)」(2003), 「우수신기술 벤처기업의 현 실태와 성장 및 애로요인 분석」(2003), 「LBS 시장 및 관련업계 동향 분석」(2003) 등이 있음.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자회사의 근로자들의 문화가치성향을 G. Hofstede의 Survey Module에서 사용되었던 가치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 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간 문화모형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G. Hofstede(1983)의 연구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국가별로 과거와 현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로 성별, 나이, 학력, 근무기간 등 개인변수그룹으로 나누어 소위 sub-group 차원에서 문화를 분석함으로써, G. Hofstede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던 국가차원의 평균문화측정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시적인 문화분석은 기업의 경영관리전략에 보다 정확한 대안을 제공해 줄 것이다. 셋째, 이러한 국가별, 개인별 문화분석을 통하여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각국의 문화성향에 적합한 경영관리 스타일을 리더쉽, 동기부여, 조직구조 등의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한국식 경영방식 중 어떠한 경영방식을 현지에 그대로 적용하고, 어떠한 경영방식을 새롭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론 및 표본

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표본기업의 실태를 파악했고, 각국별 문화지수를 통해 기존연구와 이 연구간에 지수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G. Hofstede의 설문항목이 현재의 측정도구로 사용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나 타당도를 검증하지 않고 5가지 차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G. Hofstede의 측정도구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과연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또한 G. Hofstede의 5가지 차원에 따른 국가별 ANOVA를 통해, 차원에 따른 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각국의 성별, 학력, 나이 등의 개인변수가 G. Hofstede문화차원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문도구를 G. Hofstede에 의해 개발된 Value Survey Module(1994)¹⁾을 이용하였다. Value Survey Module을 통해 G. Hofstede는 각 나라의 문화지수²⁾를 산출하여, 이 지수를 통해 5가지(개인주의 對 집단주의, 남성성 對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권력간격, 장기적 지향성)차원으로 분류하였다. G. Hofstede의 Value Survey Module(1994)은 전부 2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한 20개의 항목만 측정하였다. 이러한 20개 항목들은 국가문화의 구성요소로서 5가지 차원으로 지수화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지수를 통해서 과거 G. Hofstede가 나타낸 5개국간의 문화차원과 현재의 5개국간의 문화차원이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5개국 모두 경제발달로 인해 1980년대 G. Hofstede가 제시한 차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존 G. Hofstede의 연구에서는 각국별 문화성향에 대해서만

1) G. Hofstede(1994), "Values Survey Module," Institute for Research on Intercultural Corporation.

2) Value Survey Module은 G. Hofstede의 매뉴얼에 따르면, 각 차원의 점수 산출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주의지수(IDV) = $-50m(01) + 30m(02) + 20m(04) - 25m(08) + 130$
 ② 남성성지수(MAS) = $60m(05) - 20m(07) + 20m(15) - 70m(20) + 100$
 ③ 권력간격지수(PDI) = $-35m(03) + 35m(06) + 25m(14) - 20m(17) - 20$
 ④ 불확실성의 회피지수(UAI) = $25m(13) + 20m(16) - 50m(18) - 15m(19) + 120$
 ⑤ 장기적 지향성지수(LTO) = $45m(09) - 30m(10) - 35m(11) + 15m(12) + 67$
 모든 문항들은 5점척도(1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 5는 가장 중요한 것(가장 동의하는 것))로 측정되었으며, ()는 해당문항을 나타내며, m은 해당항목의 평균점수를 나타낸다.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각국별 문화성향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나이, 성별, 학력, 근무기간 등 개인변수에 따라 G. Hofstede의 차원들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고, 한국기업들이 각 나라들의 차원에 따라 어떤 경영관리방식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G. Hofstede의 논문³⁾에서는 단지 국가만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문화차원을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으로 세분화시켜 개인변수가 각 나라 근로자들의 직무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성별, 나이, 학력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표 1> 각국별 표본 현황

구 분		한 국	중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합 계
성별	남 자	88	72	445	21	54	680
	여 자	142	112	183	21	41	499
	무응답	3	31	61	·	22	117
연령	20대	182	147	497	26	74	926
	30대	42	28	95	16	22	203
	40대이상	2	7	53	·	3	65
	무응답	7	33	44	·	18	102
학력	고졸이하	216	99	536	14	65	930
	초대졸이상	13	79	97	28	17	234
	무응답	4	37	56	·	35	132
근무기간	1년미만	17	87	86	6	45	241
	1년~3년	111	76	216	26	42	471
	3년~5년	34	5	227	6	8	280
	5년이상	65	12	104	3	7	191
	무응답	6	35	56	1	15	113
총 샘플수		233	215	689	42	117	1,296

3) G. Hofstede(1983), "The Cultural Relativity of Organizational Practices and Theo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all.

3. 실증분석의 결과

1) G. Hofstede 5차원에 대한 신뢰도 분석

과거 G. Hofstede가 만든 설문항목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상태에서 동일한 검증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신뢰도 검증하기 위해 각국별, 각 항목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표 2>는 각국별 신뢰도를 비교 분석한 표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표본의 경우 개인주의(IDV)와 권력간격(PDI), 그리고 장기적 지향성(LTO)등 3개의 차원에서만 Alpha 계수가 0.6 이상이 되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주의(MAS), 불확실성 회피(UAI)차원은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장기적 지향성(LTO)만이 Alpha 계수가 0.6 이상이 되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권력간격(PDI)과 장기적 지향성(LTO) 그리고 개인주의(IDV)의 항목에서 Alpha 계수가 0.6 이상이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개인주의(IDV)와 장기적 지향성(LTO)항목에서만 Alpha 계수가 0.6 이상이였다. <표 2>의 신뢰도 분석을 종합해 보면, 개인주의(IDV)차원과 장기적 지향성(LTO)차원만 각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나머지 차원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G. Hofstede의 Value Survey Module에 제시된 항목들이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직무가치를 대변하는데, 5개 차원의 각 항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G. Hofstede는 설문항목을 만들 때 서양인의 인식구조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양인과 서양인의 인식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G. Hofstede는 구성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각 차원의 일치성이나 정확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G. Hofstede의 설문도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표 2> 각 국별 신뢰도 분석

		한 국			중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 트 남		
		평균	표준 편차	샘플 수	평균	표준 편차	샘플 수	평균	표준 편차	샘플 수	평균	표준 편차	샘플 수	평균	표준 편차	샘플 수
변수 (IDV)	X1	4.04	.86	230	3.38	1.21	210	3.88	.82	682	4.29	.79	111	3.74	.91	42
	X2	4.20	.77	230	3.87	1.11	210	4.24	.69	682	4.17	.72	111	3.81	.80	42
	X4	4.04	.83	230	4.35	.94	210	4.38	.73	682	4.43	.71	111	4.26	.83	42
	X8	4.00	.82	230	*	*	*	*	*	*	3.60	.99	111	*	*	*
F(Porb)		4.6877(.0034)			50.8(.0000)			97.9915(.0000)			23.8580(.0000)			6.1119(.0048)		
Alpha		.6475			.5627			.6437			.6039			.6249		
변수 (PDI)	X3	4.00	.86	232	4.19	.90	148	3.91	.80	681	4.07	.77	116	4.47	.67	42
	X6	3.81	.92	232	3.24	1.21	148	3.58	.86	681	3.83	.88	116	3.42	1.01	42
	X14	*	*	*	2.83	1.07	148	*	*	*	*	*	*	*	*	*
F(Porb)		9.1580(.0028)			85.9661(.0000)			94.9022(.0000)			10.3300(.0017)			45.1000(.0000)		
Alpha		.6229			.3651			.6061			.6880			.4737		
변수 (MAS)	X5	4.29	.79	231	4.09	1.03	208	4.22	.72	677	4.56	.69	114	3.60	.99	41
	X7	3.94	.87	231	3.62	1.20	208	3.95	.86	677	4.17	.75	114	4.63	.58	41
	X15	*	*	*	*	*	*	2.93	1.08	677	*	*	*	*	*	*
F(Porb)		32.5657(.0000)			22.1703(.0000)			383.5064(.0000)			24.9166(.0000)			38.2646(.0000)		
Alpha		.5398			.3390			.3316			.5190			.2694		
변수 (UAI)	X16	2.62	1.02	227	2.43	.99	204	*	*	*	2.91	1.04	104	*	*	*
	X18	3.17	1.06	227	*	*	*	2.68	1.06	674	3.03	.93	104	3.54	1.23	42
	X19	3.25	1.03	227	2.01	.99	204	3.40	.90	674	3.53	.93	104	2.85	1.29	42
	X13	*	*	*	*	*	*	*	*	*	*	*	*	2.83	.53	42
F(Porb)		28.1817(.0000)			23.8395(.0000)			229.5341(.0000)			14.3688(.0000)			6.9920(.0025)		
Alpha		.2320			.4000			.3457			.2769			.3892		
변수 (LTO)	X9	4.14	.73	232	*	*	*	*	*	*	4.41	.68	114	3.73	1.02	41
	X10	3.89	.78	232	3.87	.94	203	3.77	.77	671	4.26	.70	114	3.07	1.10	41
	X11	4.28	.69	232	3.96	.98	203	3.95	.78	671	4.38	.71	114	4.07	.81	41
	X12	*	*	*	3.05	1.27	203	3.37	.85	671	4.00	.86	114	3.65	.93	41
F(Porb)		29.5947(.0000)			54.7041(.0000)			130.0739(.0000)			11.9347(.0000)			12.0394(.0000)		
Alpha		.6601			.6656			.6968			.8465			.7009		

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2가지 차원, 즉 개인주의(IDV)와 장기적 지향성(LTO) 차원에 대해서만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2) G. Hofstede 5차원에 대한 요인분석

위의 신뢰도 측정에서 개인주의차원(IDV)과 장기적 지향성 차원(LTO)만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했을 때에도 신뢰도가 높은 2가지 차원만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전체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설 문 문 항 (변 수)	요 인(Factor)					공유치
	F1	F2	F3	F4	F5	
상급자와의 좋은 관계(X3)	.691	.023	.203	.003	-.003	.521
패적인 작업환경(X2)	.645	.146	-.257	.037	-.042	.507
고용의 안전성(X4)	.627	.056	.011	-.076	.082	.409
의사결정 문의(X6)	.578	.212	.142	.194	.037	.438
직무상승의 기회(X7)	.574	.092	.197	.189	-.012	.413
동료와의 협력(X5)	.559	.246	.074	-.052	.092	.391
개인적 여유(X1)	.414	.260	-.264	.164	.221	.384
개인적 꾸준함(X9)	.396	.306	.332	-.078	.081	.373
관리자의 자질(X16)	-.280	.244	.265	.272	.061	.296
절약(X10)	.252	.736	.099	-.030	.035	.409
인내(X11)	.218	.704	.203	.032	-.027	.587
전통의 존중(X12)	.139	.695	-.056	.113	.023	.519
복수상사 구조 회피(X17)	.151	-.137	.562	.300	.162	.473
직무의 다양성(X8)	.432	.103	.549	.055	-.094	.511
타인을 신뢰(X15)	.001	.220	.523	-.067	-.042	.329
종업원간의 경쟁(X18)	.009	.016	.063	.643	.085	.540
회사규칙의 준수(X19)	.068	.253	-.300	.617	-.025	.540
타인의 삶에 대한 인식(X20)	.062	-.057	.112	.547	-.069	.324
상하급자간 의사표현의 자유로움(X14)	.073	-.032	.006	.022	.782	.619
작업 중 불안감(X13)	.012	.068	.015	-.014	.763	.587
고유치(Eigenvalues)	3.024	2.033	1.474	1.397	1.325	
고유치/분량수(Pct of Var)	0.1511	0.1016	0.0737	0.0698	0.0662	

KMO = .833

Bartlett Test of Sphericity = 3116.925, Significance = .000

전체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5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5가지 요인이 G. Hofstede의 5차원 변수에 적절하게 구성되지는 못했다.

Factor 1의 경우, 개인주의 차원(IDV) 변수 3개와 권력간격 차원(PDI) 변수 2개, 남성성 차원(MAS) 변수 2개, 불확실성 회피정도 차원(UAI) 변수 1개, 장기적 지향성(LTO)변수 1개로 고루 섞인 것으로 나타났고, Factor 2의 경우, 장기적 지향성 차원(LTO)의 변수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나머지 Factor 3, 4, 5는 5차원의 변수들이 서로 고루 섞인 것으로 나와, G. Hofstede 차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위의 신뢰도 측정에서 높게 나타난 두 가지 차원, 즉 개인주의 차원(IDV)과 장기적 지향성 차원(LTO)에 대한 요인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표 4>의 개인주의 차원과 장기적 지향성 차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변수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KMO)의 값이 .736로 꽤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선택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상검정치가 1007.858이고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0이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Varimax법을 통해 요인을 회전시켰다. 이렇게 해서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Factor1에서는 장기적 지향성 차원이 이루어졌고, Factor2에서는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차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권력간격,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정도, 장기적 지향성 등 5가지 차원을 모두 분석하기보다는 개인주의 차원(IDV)과 장기적 지향성(LTO) 차원만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국별로 5차원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3가지 차원(개인주의 차원, 장기적 지향성 차원, 불확실성 회피 차원)이, 말레이시아도 3가지 차원(장기적 지향성 차원, 개인주의 차원, 권력간격 차원)이, 베트남에서는 2가지 차원(개인주의 차원, 장기적 지향성 차원)

<표 4> 개인주의 차원과 장기적 지향성 차원 요인분석

설문항목(변수)	요인(Factor)		공유치
	LTO(F1)	IDV(F2)	
절약(X11)	<u>.814</u>	.089	.671
인내(X10)	<u>.780</u>	.181	.641
전통의 존중(X12)	<u>.702</u>	.151	.516
쾌적한 작업환경(X2)	.120	<u>.761</u>	.594
고용의 안전성(X4)	.101	<u>.688</u>	.483
개인적 여유(X1)	.164	<u>.658</u>	.459
고유치(Eigenvalues)	1.816	1.548	
고유치/분량수(Pct of Var)	0.30264	0.25808	
KMO = .736			
Bartlett Test of Sphericity = 1007.858, Significance = .000			

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4가지 차원(권력간격 차원, 남성성 차원, 장기적 지향성 차원, 개인주의 차원)이,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 1가지 차원(장기적 지향성 차원)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5개국 요인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각 국가간 공통적으로 형성되는 차원이 바로 개인주의 차원(IDV)과 장기적 지향성 차원(LTO)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각국별 G. Hofstede 문화차원 지수 비교

기존의 G. Hofstede는 50개국을 가지고 각 차원에 맞는 문화지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개인주의 對 집단주의 차원과 장기적 지향성 차원에 대해서만 각국별로 문화지수를 산출하였다. <표 5>는 G. Hofstede의 문화차원에 대한 지수를 계산⁴⁾

4) Value Survey Module는 Hofstede의 Manual에 따르면, 각 차원의 점수 산출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주의지수(IDV) = -50m(01) + 30m(02) + 20m(04) - 25m(08) + 130

하여 나타낸 것이다.

개인주의 차원에서 기존의 G. Hofstede 연구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표본이 포함되지 않아, 중국과 베트남의 지수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장기적 지향성 차원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지수가 기존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표 5> 각국별 G. Hofstede 문화차원 지수¹⁾

국 가 차 원	한 국		중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 트 남	
	Hofs	김서균	Hofs	김서균	Hofs	김서균	Hofs	김서균	Hofs	김서균
개인주의	18	35.7	·	57.9	14	62.9	26	40.1	·	51
장기적 지향성	75	36.4	118	56.2	·	52	·	44.4	·	53.5
1인당 GNP(1996)	\$ 10,548		\$ 530		\$ 880		\$ 3,520		\$ 190	

* 1인당 GNP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지역정보(1996).

그래서 제시된 지수를 가지고 기존 G. Hofstede의 문화차원지수와 비교해 본 결과, 각국별 문화차원지수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주의 對 집단주의 경우, 5개국 모두가 높게 상향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문화지수가 18에서 35.7로, 인도네시아는 14에서 62.9로, 말레이시아는 26에서 41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 지향성의 경우, 기존 연구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문화지수가 75에서 36.4로, 중국의 경우 118에서 56.2로 하향되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는 기존 연구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존 연구보다 낮아졌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② 장기적 지향성지수(LTO) = 45m(09) - 30m(10) - 35m(11) + 15m(12) + 67
모든 문항들은 5점척도(1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 5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동의하는 것))로 측정되었으며, ()는 해당문항을 나타내며, m은 해당항목의 평균점수를 나타낸다.

가. 기존 연구와의 비교: 개인주의 對 집단주의 분석결과

개인주의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는 개인간의 유대가 느슨한 사회를 말하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직계가족만을 돌보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이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사회를 말한다. 즉,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줄곧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내부집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일생동안 계속해서 집단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게 되어 있는 사회를 말한다.⁵⁾

이 연구에서는 한국(18 → 35.7)과 인도네시아(14 → 62.9), 말레이시아(26 → 41)의 개인주의 성향이 1980년대 Hofstede 최초 연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먼저, 한국의 경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이 과거에는 조직을 위해 가정이나 자신의 희생을 당연시되었지만, 현재는 개인적인 성공, 가족과의 여유 있는 생활, 물질적 부의 축적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역시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 추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 부의 축적, 성공과 같은 개인적인 목표에 보다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집단주의적 사고보다는 개인의 부와 성공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도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개인주의 성향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다섯 나라 중 한국의 개인주의 지수가 35.7로 여전히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존의 G. Hofstede 연구에서는 5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선진국일수록 개인주의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⁶⁾ 그런데 한국과 다른 네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월등

5) 차재호·나은영,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6.

6) Hofstede, Geert(1983), "The Cultural Relativity of Organizational Practices and Theo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all 1983.

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지수가 높게 나타나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오히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비해 낮은 개인주의 문화지수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단일민족이라기보다는 몇 개의 민족들이 혼합된 국가라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단일민족으로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개인주의 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이거나, 서구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집단적인 것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더 팽배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존연구와의 비교: 장기적 지향성에 대한 분석결과

장기적 지향성은 전통을 현대 맥락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절약이나 인내를 개인의 미덕으로 생각하며, 목적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정도를 말한다.⁷⁾

장기적 지향성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 G. Hofstede가 제시한 지수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한국, 75 → 36.4; 중국, 118 → 56.2).

이러한 결과는 80년대에 비해 90년대 들어서 아시아권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각국 모두가 소비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겨,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모두 전통을 중요시하고, 개인적인 희생, 절약이나 인내를 더 이상 미덕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즉, 비용에 구애됨이 없는 사회 및 지위 의무를 존중하고, 빠른 결과를 기대하며, 체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단기지향적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마이클 본드는 유교적 역동성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는 서양사회와는 구별되는 동양의 고유가치라고 밝히고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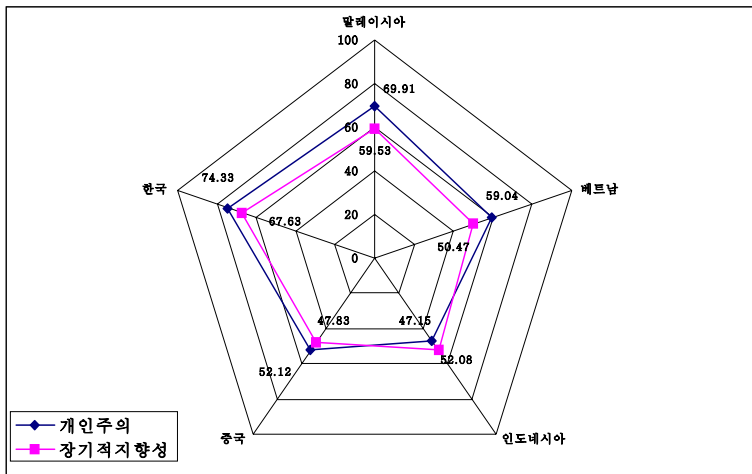
7) 차재호·나은영,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6.

그러나 비록 장기적 지향성이 기존연구에 비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서양국가들의 점수보다는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도 동양에서의 중요한 차원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다. 각국의 개인주의와 장기적 지향성 비교

<그림 1>은 각국의 개인주의지수와 장기적 지향성지수를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와 장기적 지향성을 비교해 보지 않았지만, 각 개별적인 차원에서 비교해 볼 때 개인주의가 높은 나라일수록 장기적 지향성이 낮게 나타나는 반비례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주의가 낮은 국가에서 장기적 지향성 지수도 낮게 나타나는 비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아시아권에서는 개인주의의 경우, 민족구성원의 수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장기적 지향성의 경우 각국의 소비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림 1> 개인주의 차원과 장기적 지향성 차원

- 8) 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1987), "Chinese Values and Search for Culture-Free Dimensions of Culture," Journal of Cross-Culture Psychology, Vol. 18, No. 2, 1987, pp. 143~164.

앞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주의 지수가 가장 낮은 한국이 장기적 지향성 지수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인주의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 지향성 지수도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우,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사고보다는 집단주의적 사고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하여 개인주의 지수가 낮게 나타났고, 장기적 지향성지수 측면에서도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부(富)의 증대로 말미암아 미래를 위한 절약이나 투자보다는 현재의 삶을 중시하고, 소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당 GNP와 개인주의 차원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1인당 GNP와 개인주의차원과는 무관한 것을 나타냈다. 기존 G. Hofstede의 연구에서는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부유한 나라라고 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부(富)와 그 문화의 개인주의의 정도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GNP가 높은 말레이시아나 한국을 대상으로 볼 경우, 개인주의가 낮을수록 1인당 GN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존 G. Hofstede의 연구와는 달리 1인당 GNP와 개인주의 성향과의 관계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4)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차원에 따른 각국별 분산분석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원에 대해 각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던칸의 다중범위검정을 통해 각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하였다.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차원중 고용의 안전성 항목이 전반적으로 각국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고나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각국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섯 개국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중국과 한국과의 유의성에 대해 네 가지 항목 모두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개인적 여유 항목을 제외한 세 가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우에도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외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 對 집단주의 차원을 종합해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고용의 안전성, 쾌적한 작업환경, 개인적인 여유, 직무의 다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차원에 따른 각국별 분산분석

변 수		평균	Duncan Multiple Range Test										F값	F 유의도
종속 변수	독립변수		1-2	1-3	1-4	1-5	2-3	2-4	2-5	3-4	3-5	4-5		
개인적 여유	말레이(2)	4.2759											22.8978	.0000
	한국(5)	4.0259												
	인니(1)	3.8755	*	n.s	*	*	*	*	*	*	n.s	*		
	베트남(3)	3.7381												
	중국(4)	3.3839												
쾌적한 작업 환경	인니(1)	4.2401											12.4893	.0000
	한국(5)	4.2069												
	말레이(2)	4.1810	n.s	*	*	n.s	*	*	n.s	n.s	*	*		
	중국(4)	3.8372												
	베트남(3)	3.8095												
고용의 안전성	말레이(2)	4.4435											9.0936	.0000
	인니(1)	4.3845												
	중국(4)	4.3505	n.s	n.s	n.s	*	n.s	n.s	*	n.s	n.s	*		
	베트남(3)	4.2619												
	한국(5)	4.0435												
직무의 다양성	중국(4)	4.2009											27.1443	.0000
	한국(5)	4.0043												
	베트남(3)	3.6667	n.s	n.s	*	*	n.s	*	*	*	*	*		
	말레이(2)	3.6161												
	인니(1)	3.5300												

*는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n.s는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을 나타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4개국이 중진국이거나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을 하려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고용의 안전을 토대로 한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용의 안전은 선진국보다는 중진국 이하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적 지향성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1인당 GNP가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 지향성보다는 단기적 지향성이 강한 쪽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장기적 지향성 차원에 따른 각국별 분산분석

<표 7>은 장기적 지향성 차원에 대한 각국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개인적 꾸준함과 안정’에 관한 항목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중국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절약’의 항목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각 국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인내’의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각국별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성을 나타내는 평균값에서 각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말레이시아나 한국의 평균값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전통의 존중’의 항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한국, 그리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의 존중의 항목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중국의 경우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교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는 것이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각국별로 보면 절약, 인내, 개인적 꾸준함과 안정, 전통의 존중 등 네 가지 항목 모두에서 말레이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개인적 꾸준함과 안정 그리고 절약의 항목에서 가장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경우, 인내나 전통의 존중의 항목에서 가장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장기적 지향성 차원에 따른 각국별 분산분석

변 수		평균	Duncan Multiple Range Test										F값	F 유의도
종속 변수	독립변수		1-2	1-3	1-4	1-5	2-3	2-4	2-5	3-4	3-5	4-5		
개인적 꾸준함과 안정	말레이(2)	4.3932											9.2586	.0000
	중국(4)	4.3738												
	한국(5)	4.1466	*	*	*	n.s	*	n.s	*	*	*	*		
	인니(1)	4.1393												
	베트남(3)	3.7317												
절약	말레이(2)	4.2414											16.5202	.0000
	한국(5)	3.8966												
	중국(4)	3.8645	*	*	n.s	n.s	*	*	*	*	*	n.s		
	인니(1)	3.7792												
	베트남(3)	3.1190												
인내	말레이(2)	4.3739											13.0913	.0000
	한국(5)	4.2888												
	베트남(3)	4.0714	*	n.s	n.s	*	*	*	n.s	n.s	n.s	*		
	인니(1)	3.9605												
	중국(4)	3.9296												
전통의 존중	말레이(2)	4.0000											19.7344	.0000
	베트남(3)	3.6429												
	인니(1)	3.3765	*	n.s	*	n.s	*	*	*	*	n.s	*		
	한국(5)	3.3192												
	중국(4)	3.0539												

*는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ns는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을 나타냄.

장기적 지향성 차원의 전체항목 중에서 개인적인 꾸준함과 안정이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으로 나타났고, 전통의 존중 항목이 가장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시아권의 국가들에서 장기적 지향성 차원중 개인적 꾸준함 및 안정이 아시아권의 발전과 동양가치에서 중요한 항목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항목이 고용의 안전성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 지향성 차원에서도 개인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나, 아시아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바로 안정인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관리자들은 현지인사, 노무관리에서 보다 철저히 안정과 관련된 일들을 계획하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6) 각국별 개인변수에 대한 분석

가. 성별에 따른 각국별 t-test

기존의 G. Hofstede 연구에서는 국가문화에 대해 평균적으로 측정하여, 어떠한 차원이 형성되었는지 알아보았지만, 각국의 개인변수 즉, 성별, 나이, 근무기간, 학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각국별로 개인변수(성별, 나이, 근무기간, 학력)들에 의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표 8> 성별에 따른 각국별 T-test

국 가	변 수			평 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차원	종속변수	독립변수				
말레이 시아	개인 주의	고용의 안전성(X4)	남성(n=53)	4.5660	.636	1.74	.085
			여성(n=40)	4.3250	.694		
중국	개인 주의	개인적 여유(X1)	남성(n=71)	3.7042	1.101	3.30	.001
			여성(n=112)	3.1161	1.221		
	장기적 지향성	절약(X10)	남성(n=72)	3.9861	.927	1.93	.055
			여성(n=111)	3.7117	.948		
한국	개인 주의	개인적 여유(X1)	남성(n=88)	4.1477	.824	1.74	.083
			여성(n=142)	3.9437	.889		
		고용의 안전성(X4)	남성(n=88)	4.2273	.723	2.75	.007
			여성(n=140)	3.9214	.874		
	장기적 지향성	전통의 존중(X12)	남성(n=75)	3.5467	.810	2.87	.004
			여성(n=136)	3.1985	.859		

먼저 <표 8>은 5개국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도표를 보면, 먼저 5개국 중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등 3개국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별로 종합을 해 보면, 한국과 중국에서는 개인적인 여

유 항목에서 그리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는 고용의 안전성 항목에서 공통적인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국별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국의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개인주의 지향적이고, 장기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학력, 근무기간, 연령에 따른 각국별 t-test

두 번째로 개인변수 중 학력에 따라 각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력별 t-test를 실시해 보았다. 분석결과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별로 종합을 해 보면, 중국의 경우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고졸이하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장기적 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고졸이하의 학력자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에 비해 더 장기 지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과 인도네시아 경우, 개인주의 차원에서는 개인적 여유 항목과 직무의 다양성 항목에서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났고,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장기적 지향성 측면에서는 전통의 존중이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기간에 따른 t-test에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은 근무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근무기간이 길면 길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4개국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각 차원에 대한 국별, 개인변수별 종합분석

<표 9>는 각 차원에 대한 나라별, 개인변수별 종합표를 나타낸 표이다. 개인주의 차원에서 나라별 차이를 보게 되면, 먼저 개인적 여유항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는 말레이시아로 나타났고, 쾌적한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의 안전성 항목에서도 말레이시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무의 다양성 항목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지향성 차원에 대해서는 먼저, 개인적 꾸준함의 항목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절약의 항목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인내의 항목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전통의 존중 항목에서도 말레이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 말레이시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고용의 안전성으로 나타나, 해외 경영에서 현지인 근로자들의 인사, 노무관리 측면에서 고용의 안정과 관련된 인사정책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보면, G. Hofstede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한 나라별 또는 개인변수별 차이는 각 항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경영자들은 현지 인사, 노무관리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현지인들을 관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9> 각 차원에 대한 국별 및 개인변수별 종합표

차원	항 목	말레이	베트남	인니	중국	한국	평균
개인주의	개인적 여유(X1)	4.276	3.738	3.876	3.384	4.026	3.854
	쾌적한 작업환경(X2)	4.181	3.810	4.240	3.837	4.207	4.148
	고용의 안전성(X4)	4.444	4.262	4.385	4.301	4.044	4.320
	직무의 다양성(X8)	3.616	3.667	3.530	4.201	4.004	3.740
장기적 지향성	개인적 꾸준함(X9)	4.393	3.732	4.139	4.374	4.147	4.190
	절약(X10)	4.241	3.119	3.779	3.865	3.897	3.835
	인내(X11)	4.374	4.071	3.961	3.929	4.289	4.055
	전통의 존중(X12)	4.000	3.643	3.377	3.054	3.319	3.380

차 원		성 별			학 력			근무기간			연 령			
		국가	남자	여자	국가	고졸	초 대졸	국가	2년 미만	2년 이상	국가	20대	30대	40대
개 인 주 의	X1	중국	3.704	3.116	중국	3.051	3.671	말레 이	4.156	4.545	베트 남	3.539	4.063	
		한국	4.148	3.944	인니	3.895	3.742	인니	3.934*	3.800*	중국	3.212	3.857	
											인니	3.958	3.558	3.687
	X2							인니	4.300*	4.173*				
	X4	말레 이	4.566	4.325				베트 남	3.933	4.423	한국	3.944	4.272	
		한국	4.227	3.921				한국	3.960*	4.161*	중국	4.295	4.543	
	X8										인니	4.409	4.410	4.154
					중국	4.101	4.430	인니	3.577*	3.455*	베트 남	3.846	3.375	
장 기 적 지 향 성	X9				인니	4.090	4.327	인니	4.246*	4.030*	베트 남	3.480	4.125	
											인니	4.152	4.000	3.808
	X10	중국	3.986	3.712							중국	3.747	4.143	
	X11										중국	3.747	4.143	
											인니	3.927	4.126	3.904
	X12	한국	3.547	3.198	중국	2.938	3.284				베트 남	3.462	3.938	
					베트 남	4.000	3.464	한국	3.960*	4.162*	한국	3.254	3.605	

1. * 는 3년미만, 3년 이상을 의미함.
2. 개인변수별 중요도 차이는 각 국가간 t-test 또는 분산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 나타냄.
3. 개인변수별 란에서는 각국의 개인변수들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 나타냄.

4. 결론

1) 각국 근로자들의 경영관리에 대한 시사점

기업은 효율성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이나 수익률 제고의 극대화를 이루하려고 한다.

이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것은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업이 제공해 줌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對 집단주의 차원은 각국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

먼저 한국 근로자들의 경우를 보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고용의 안전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한국경제가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각 기업들은 비용절감 측면에서 인원감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기업들은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해고시킨다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의 감소로 효율성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력감축에 의한 것보다는 근로자들의 재교육이나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근로자들 역시 고용의 안전성 측면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각국 근로자들이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각국 모두 공통적으로 고용의 안전성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경영관리를 하는데 고용에 대한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이다. 각국별로 고용의 안전성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이다. 이것은 단순히 고용안정 측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쾌적한 환경이나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애사심 고취 등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외국기업들은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의 애사심이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작업환경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 논문의 요약 및 의의

과거 G. Hofstede가 만든 설문항목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상태에서 동일한 검증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기존에 G. Hofstede가 제시한 개인주의 對 집단주의, 권력간격, 불확실성회피, 남성성 對 여성성, 장기적 지향성 등 다섯 가지의 차원에서 개인주의 차원과 장기적 지향성 차원만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목을 대상으로 5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표본에서는 개인주의, 권력간격, 장기적 지향성 차원에서 그리고 중국의 경우, 장기적 지향성만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개인주의, 권력간격, 장기적 지향성에서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우, 개인주의와 장기적 지향성 차원에서만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국별 개인변수에 의한 신뢰도 분석에서도 개인주의 차원과 장기적 지향성 차원만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판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표본으로 한 결과나 한국만을 추출하여 나타난 결과나 그리고 개인변수 중 남자만을 대상으로 요인분석 한 결과나 모두 개인주의 차원과 장기적 지향성 차원만이 각각 한 개의 요인으로 묶여, 이 두 가지 차원만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국별로 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도 과거의 지수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인주의 차원의 경우, 각국 모두 개인주의 지수가 상승된 것을 알 수 있고, 장기적 지향성 지수는 각국 모두 하향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수상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그 순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1인당 GNP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인주의 차원과 1인당 GNP는 대체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적 지향성 차원과 1인당 GNP의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국별로 분산분석과 t-test를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하게 여기

는 항목이 고용의 안전성으로 나타나 한국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이 부문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개인변수들에 의한 결과도 각국별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변수 즉, 성별, 연령, 학력, 근무기간 등을 고려한 인적자원관리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이 논문의 한계점

이 논문의 한계로는 먼저, 표본의 설정에서 한국의 경우, 가전 2사만을 대상으로 했고,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 5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각국의 문화성향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분포의 표본을 통해 전반적인 국가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G. Hofstede의 5가지 문화차원 중 신뢰도나 타당도가 높은 차원이 개인주의 차원과 장기적 지향성 차원만인 것으로 나타나 G. Hofstede의 Value Survey Module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다른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문화차원을 함께 사용하여 G. Hofstede 설문도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같은 국가를 대상으로 시간적 차이를 두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각국별 문화성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면 국가별 문화성향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강정애(1997), 「조직문화적 특성에 따른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26권 제3호.
 _____(1996), 「조직문화유형별 종업원의 직무인지도 차이에 관한 연구」, 인지과학, Vol. 7, No. 1.

- 금경섭(1997),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문화성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석(1998), 「친조직행동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주수 譯(1990), 「경영문화의 국제비교」, 한국생산성본부.
- 김종서(1988), 「직무관련요인들이 조직성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완(1988), 「조직몰입의 선행변수와 조직몰입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형진(1997), 「근로에 대한 가치관의 국제비교」, 대한상공회의소.
- 박기성·김용민(1997),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 축적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이성수(1994), 「조직근거 자기 존중감에 따른 심리적 분위기와 친조직 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섭(1996), 「조직몰입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충영·최이규(1997),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 차재호·나은영(1996),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 삼성경제연구소(1996), 『해외인적자원관리 핸드북: 인도네시아』.
- 삼성인력개발원(1996), 『국제화와 이문화 적응』.
- 이병철(1997), 「노동인력의 세계화 - 문화적응과 기업성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97추계학술대회.
- 이영면(1997), 「노동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대한상공회의소.
- 양종희·유석춘·박길성(1996), 「동남아시아의 사회계층 - 5개국 비교 연구 -」, 고려대학교 출판부.
- 채서일(1995),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학현사.
- 한국수출입은행(1996), 『해외지역정보』.
- 한동훈·최재윤(1997), 「문화가 예산통제 시스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에 관한 연구」, 인사관리학회, 제20호 2권.

- Betty Jane Punnett & Sirinimal Withane, "Hofstede's Value Survey Module: to embrace or abandon?," *International Comparative Management*, Volume 5, pp. 69~89.
- Bochner, Stephen(1994),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he Self Concept- A Test of Hofstede's Individualism/Collectivism Distinc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5, No. 2.
- Bond, M.(1989), "On the empirical identification of Dimensions for Cross-Cultural Comparis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0, No. 2.
- Hofstede, Geert(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Abridged Edition,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_____(1983), "The Cultural Relativity of Organizational Practices and Theo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 _____(1984), "Cultural Dimensions in management and planning,"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 _____(1994), *Values Survey Module*, Institute for Research on Intercultural Corporation.
- Kelly, L., Worthely, R.(1981), "The Role of Culture in Comparative management: A cross-cultural perspective," *Academic of Management Journal*. 24(1).
- Kelly, L., Whatley, A. and Worthely, R.(1988), "Assessing in the effects of culture on managerial attitudes: A three culture tes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20).
- Nancy, J. Ader & John, L. Graham(1989), "Cross-Cultural Interacti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Fallac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all.
- Rokeach, Milton(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 New York, Free Press.
- Ryh-song Yeh(1995), "Individualism and Confucian Dynamis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1987), "Chinese Values and Search for Culture-Free Dimensions of Culture," *Journal of Cross - Culture Psychology*, Vol 18, No2, pp. 143~164.

부록 1.

G. Hofstede 설문지 항목

1. 개인주의 vs 집단주의(IDV)

- 1) 귀하의 개인적인 혹은 가족생활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 **개인적 여유**
- 2) 좋은 물리적 작업환경을 갖는 것(좋은 환기와 조명, 적절한 작업공간 등): **쾌적한 작업환경**
- 4) 고용의 안정성을 갖는 것: **고용의 안전성**
- 8) 직무의 다양성과 도전성을 갖는 것: **직무의 다양성**

2. 권력간격(PDI)

- 3) 귀하의 직속상급자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상급자와 좋은 관계**
- 6) 직속상급자가 의사결정시 귀하에게 문의하는 것: **의사결정 문의**
- 14) 귀하의 경험으로 볼 때, 부하직원이 상급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얼마나 자주 두려워 하는가?: **상하급자 간 의사표현의 자유로움**
- 17) 한 종업원의 두 명의 상사를 갖는 조직구조는 꼭 피해야 한다: **복수상사 구조 회피**

3. 남성주의 vs 여성주의(MAS)

- 5) 협동이 잘 되는 사람과 일하는 것: **동료와의 협력**
- 7) 더 높은 단계의 직무로 상승하는 기회를 갖는 것: **직무상승의 기회**
- 15)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 하다: **타인을 신뢰**
- 20)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은 종종 그들 자신의 잘못이다: **타인의 삶에 대한 인식**

4. 불확실성 회피정도(UAI)

- 13) 귀하는 작업중에 얼마나 자주 초조하거나 긴장감을 느끼니까?: **작업 중 불안감**
- 16) 사람들은 부하들이 그들의 작업에 관하여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해 줄 수 없이도 좋은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관리자 자질**
- 18) 종업원들간의 경쟁은 대개 이익보다 해가 더 많다: **종업원간의 경쟁**
- 19) 회사나 조직의 규칙은 깨지 말아야 한다 - 설사 규칙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종업원이 생각할 지라도 깨서는 안된다: **회사규칙 준수**

5. 장기적 지향성(LTO)

- 9) 개인적인 꾸준함 및 안정: **개인적 꾸준함**
- 10) 절약: **절약**
- 11) 인내(끈기): **인내**
- 12) 전통에 대한 존경: **전통의 존중**

창의성도출과정에 있어 개인특성 및 환경요소의 영향

이화자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성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광고 및 미디어관련 산업에서의 창의성은 산업의 핵심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문학, 심리학 등 우리가 쉽게 파해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많은 분야들조차 과학적 접근을 통해 그 신비감이 파해쳐지고 있고, 이러한 메카니즘의 이해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창의성에 대한 문제만은 신비적 영역으로 남겨놓으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문화비평론자 C. A. van Peursen은 우리가 일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일의 과정에 곧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일임을 지적한 바 있다. 모터를 수리하거나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강영안 역, 1994: 24).

모든 혁신은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프로그램, 신제

이화자 호남대학교 교수(광고홍보학). 최근 논문으로 「한국광고의 창의성 향상에 관한 연구」(공저(2000)), 「일본제품개방에 따른 한국인의 의식 조사 및 광고표현 연구」(2001), 최근 저서로는 『광고, 그리고 창의성』(2002), 『日本大衆文化 と 日韓關係』(공저(2002) 등이 있음.

품, 새로운 서비스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지닌 개인이나 팀,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의 개발여부에 달려 있다. 창의성에 접근하는 데 전통적 심리학적 접근은 창의적 사람의 특성(Barron, 1968; MacKinnon, 1965)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최근의 통합적 접근의 많은 연구들은 창의적 행동수준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회환경을 들고 있다. 개인 및 팀의 창의성은 혁신의 출발점이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성은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즉 개인의 업무환경에 심리적 지각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동기 부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몇 년동안 이러한 창의성의 맥락(Context of Creativity)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창의적 업무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척도의 개발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창의성과 관련한 심리학적 연구, 사회심리학적 연구, 최근의 통합적 분석의 틀을 기본으로 개인특성 및 환경요소-임파워먼트-창의성이라는 연구모형을 도출함으로써 변인과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개인의 환경에 대한 심리적 경험을 의미하는 개념인 임파워먼트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파워먼트적 접근은 구성원의 자율적 행위를 통한 혁신이 기업발전에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면서 자율과 창의의 한 방법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서, 개인특성 및 업무환경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임파워먼트라는 심리적 경험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 접근 방법이다. 창의성에 아무리 호의적인 업무환경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낮은 수준의 임파워먼트를 경험한다면 낮은 수준의 창의적 결과를 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고대행사는 연구개발직과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며,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은 부서명이나 직급명에 크리에이티브 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성은 예술분야에서의 창의성과는 다른 것으로서 예술분야의 결과물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광고 및 미디

어 산업의 경우 조직내에서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통해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유창조 외, 2000; 2001). 따라서 광고인들의 자기지각을 통한 이러한 연구는 광고대행사라는 특수적인 조직상황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창의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떻게 직원들을 임파워먼트 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며, 조직적 노력의 효과성도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가치를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창의성 구성요인 및 이론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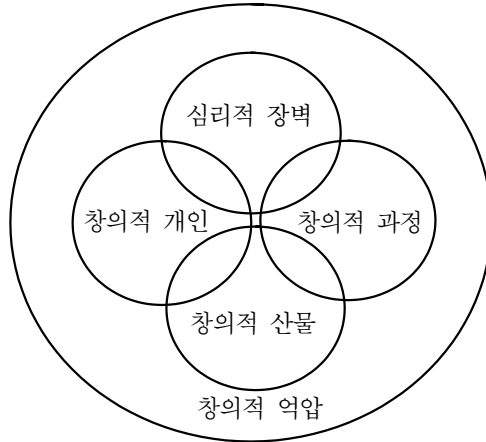
창의성의 여러 가지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대체로 많은 관련 요인 중 한두 요인들간의 관련성만을 취급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간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창의성 요인들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간의 관련성을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모형화하는 종합적 개념모형의 탐색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모형에서 창의성을 구성하는 주요 관련 요인들을 추출하여 주요 관련 요인들의 전반적인 관련정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제안된 대표적인 통합모형으로는 Rhodes(1987)의 창의성 모형, Csikszentmihalyi(1999)의 체계모형, Amabile(1988)의 WEI모형, Woodman & Schoenfeldt(1990)의 상호작용모형 등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기존모델에서 밝혀진 바 있는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Rhodes의 모형

Rhodes(1987)는 창의성은 문제해결과정으로서 특별한 몇몇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간의 대면(interfacing)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장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림 1>의 상호작용모델은 창의성의 본질뿐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한 장벽의 본질을 이

해할 수 있게 해준다. 산출물의 질에 영향을 미치도록 작용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무시한 채 개인의 스타일이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나치게 문제를 협소화하는 오류를 갖게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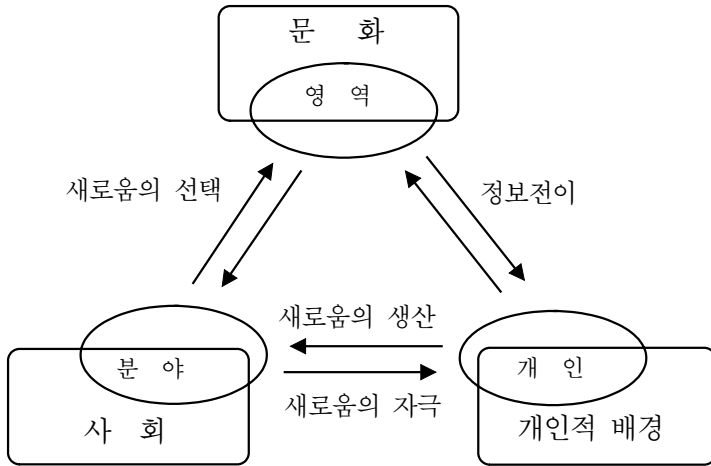


<그림 1>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련성 모형

출처: Les Jones(1993), p. 136.

나. Csikszentmihalyi의 모형

Csikszentmihalyi(1988)도 체계모형(system model)에서 창의성은 머리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회문화적 상황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며, <그림 2>와 같이 영역(domain), 참가자(field), 개인(person)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체계의 상호작용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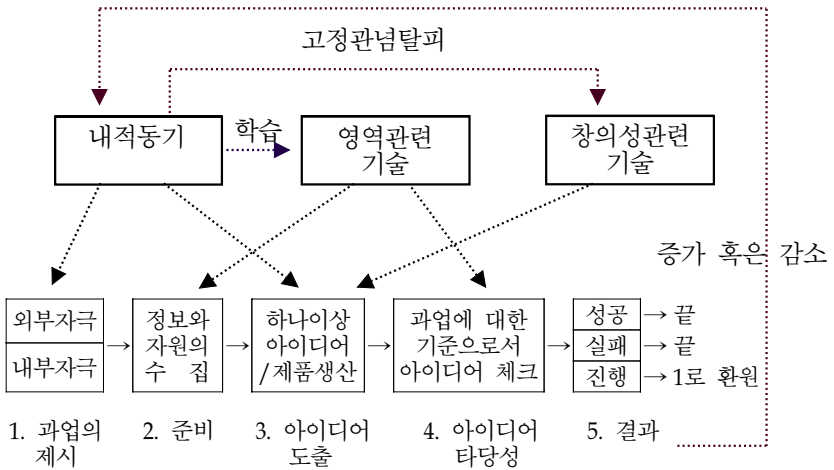
<그림 2> Csikszentmihalyi의 체계모형

출처: Csikszentmihalyi, M(1999), p. 315.

이 이론에 의하면 ① 개인(individual)은 어떤 한 영역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그것을 인지과정, 성격특성, 동기를 통해 변형, 확장한다. ② 분야(domain)는 한 영역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예: 예술비평가나 미술관 소유자, 광고에서는 광고리뷰자, 광고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③ 영역(field)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상징체계로서 창의적인 결과를 다른 개인들과 미래세대에 전달한다.

다. Amabile의 개인 및 소집단 창의성모형

Amabile(1988)은 창의적 문제해결의 요인적 모델에서 창의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하나의 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녀는 <그림 3>에서처럼 개인창의성에 대한 성격 및 환경적 결정요인을 조사하여 이들을 실제 해결단계의 순서에 따라 위치시켰다. 또한 창의성 단계별로 주요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상황(과업동기, 영역관련기능, 창의성관련기능)을 제시하였다.



<그림 3> 개인 또는 소집단의 창의성

출처: Amabile(1988), p. 138.; 개인창의성의 요소모델로서 점선은 특정요인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고, 직선은 과제의 단계별 순서를 나타내며, 직접적이고 주요한 영향력만 표시함.

Amabile은 조직내에서 창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요소를 밝혀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 하고 있다. 그녀는 창의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업무환경요 소들을 보다 표준화되고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설문양식을 “KEYS; Assessing the Climate for Creativity”, 공식적으 로는 “The Work Environmental Inventory”(WEI)라 한다(Amabile, 1990; 1995; Amabile, Burnside & Gyskiewicz, 1995). 그 결과에 의하면 창 의성을 자극하는 환경요인 9가지와 저해하는 환경요인 9가지는 다음과 같다.

▶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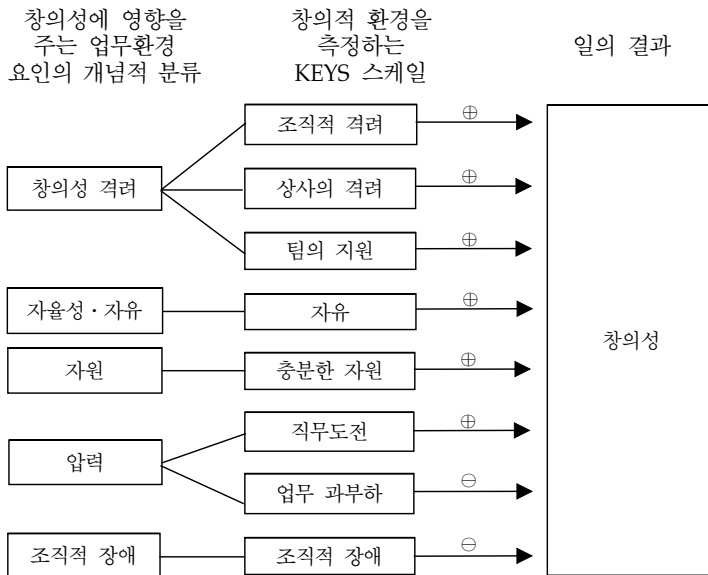
1. 자유: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일과 아이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감각

2. 훌륭한 프로젝트 관리: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관리자(팀장). 열정적이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뛰어나며, 외적인 방해요소나 간섭으로부터 팀원을 방어해주고, 팀원 각자의 개성이나 흥미, 관심사와 일을 적절히 매치시키며,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도 명백한 방향을 설정해주는 관리자의 존재.
3. 충분한 정보(자료원): 정보, 시설, 기자재, 자료, 기금, 사람 등에 대한 접근정도
4. 격려(칭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열정적인 상황 조성, 평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조성.
5. 다양한 조직적 특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심사숙고하는 메커니즘, 상호 협조하는 회사의 분위기, 혁신이 칭찬받고, 실패해도 문제되지 않는 조직의 분위기.
6. 인정: 창의적인 업무 수행에 따른 피드백, 인정, 보상
7. 충분한 시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정해진 접근법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할 시간 여유.
8. 도전: 문제점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는 정도
9. 압력: 외부조직으로부터의 경쟁이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긴장된 느낌

▶ 창의성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 9가지

1. 다양한 조직적 특성: 조직내의 부적절한 보상체계, 과도한 검열, 직종 및 직급간의 협조적인 분위기의 결여, 혁신에 대한 소극성
2. 억압(제약): 무엇을 할 것인가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자유의 결여, 자신의 일이나 아이디어를 통제하는 능력의 결여
3. 조직적 무관심: 조직적지지, 관심, 신뢰의 부족, 수행결과에 대한 냉담
4. 잘못된 프로젝트 관리: 명백한 방향설정을 할 능력이 없는 관리자. 기능적으로나 커뮤니케이션적으로 기술이 부족하며, 지나치게 사람을 조이고, 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마찰을 유발하는 관리자

5. 평가: 부적절한 평가와 보상시스템, 비현실적 기대, 비판과 외부평가에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
6. 불충분한 자료: 적합한 시설, 도구, 재료, 기금, 사람(인원)의 결여
7. 시간적 제약: 불충분한 시간, 주어진 시간에 비해 업무량의 과부화
8. 지위의 지나친 강조: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
9. 경쟁: 자기방어적 태도를 낳게 하는 조직내에서의 개인간, 집단간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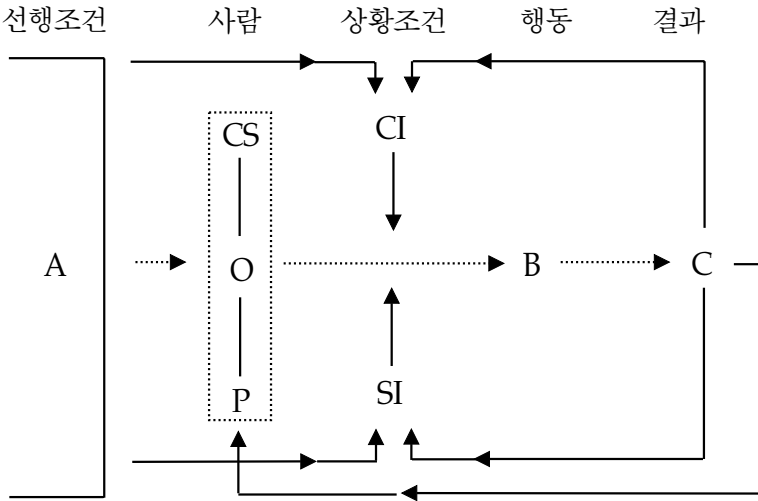
* 출처: Amabile, Conti, Coon, Lazenby, & Herron (1996), p. 1159.; 이 스케일에서 창의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자극요인”으로,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장애요인”으로 예측된다.

<그림 4> 창의적 업무환경지각에 대한 개념적 모델

라. Woodman & Schoenfeldt의 모형

Woodman과 Schoenfeldt(1990)은 개인 수준에서 창의적 행동에 관한 상호주의의 모델(<그림 5> 참조)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창의성의 성격, 인지, 사회심리적 설명 요인들을 통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에

서 창의적 행동이란 사람과 상황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그려져 있다.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조건들은 잠재적으로 매우 오랜 기일에 걸쳐 형성되며, 여기에는 과거의 강화역사(학습), 초기 사회화 경험, 배경특성 등이 포함된다. 사람들내에는 인지적 측면과 비인지적 측면이 창의적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는 상황요인(CI)과 사회적 영향요인(SI)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창의성을 제약하거나 유발하기도 한다.



<그림 5> 창의적 행동의 상호주의적 모델

A = 현 상황의 선행조건, 예; 과거 강화역사, 초기사회화, 성장배경
변인-性, 가족 입지, 출생순서

B = 창의적 행동

C = 결과

O = 유기체(사람) -태도, 가치관, 행동의지, 동기부여 지향성, 개인차

CS = 인지스타일/능력 -예; 인지적 복잡성, 확산적 사고, 구두/아이
디어 도출의 유창성, 문제해결 스타일/접근, 인지적 개방성, 분
야독립성/의존성

P = 성격차원/특성 -예; 통제위치, 도그마티즘, 자율성, 자기존중, 나르시시즘, 직관

CI = 상황적 영향요인 -예; 물리적 환경, 문화, 집단/조직의 문화, 작업과 시간적 제약요인

SI = 사회적 영향요인 -예; 사회적 촉진책, 평가기대, 보상/처벌, 역할모델링

출처: 최종인·김인수(1996), p. 69.

2) 임파워먼트의 개념 및 창의성과의 관계

가. 임파워먼트의 개념

임파워먼트는 개념의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경영이론과 실무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자리잡고 있다. Conger & Kanungo(1988)에 의하면, 경영학적인 의미에서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신념, 즉 과업수행 자신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 정의한다. 또한 Thomas & Velthous(1990)는 임파워의 의미를 “파워를 주는 것”, “개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량”(capacity), “에너지”(energy)라고 하면서, 임파워먼트 개념을 내재적 과업동기부여(Intrinsic Task Motivation)로 확장시켰다. 여기서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과업역할에 대한 의미성, 역량감, 자기결정성, 효과성의 네 가지 인지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개인의 내재적인 과업동기를 증진하도록 파워를 증대시키는 개인의 심리적인 과정으로 정의된다(Thomas & Velthous, 1990).

의미성(meaning)이란 개인자신의 기준이나 이상에 비교해 판단되는 작업목표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것과 신념, 믿음, 행위, 가치와의 적합성을 측정한다(Thomas & Velthouse, 1990). 역량감(competence)이란 과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기술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해 나아갈 능력이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을 말하며, 개인의 숙달, 노력-성과의 기대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이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

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지각을 의미한다 (Deci et al., 1989). 즉 업무행동과 과정의 계속성에 자율성을 반영하는데, 예컨대 작업방법, 속도 및 노력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해당된다 (Bailyn, 1985). 효과성(impact)이란 개인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Ashforth, 1989)로서 개인의 실무적인 결정들이 업무 및 부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나. 임파워먼트와 창의성과의 관계

Amabile(1988)은 임파워먼트된 개인은 자신들은 자율적이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의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파워먼트된 개인은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므로 자신의 업무에 창의적이며,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Conger & Kanungo(1988), Thomas & Velthouse(1990) 또한 조직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임파워먼트의 중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결과는 관리적 효과성과 조직의 혁신이다(Spreizer, 1995). 내재적 동기로서 임파워먼트가 의미하는 기본적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먼트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이 회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강한 사명의식을 갖도록 한다. 즉, 구성원 개인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둘째, 임파워먼트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거나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심리적 자신감이나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둔다.

셋째, 임파워먼트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갖게 하여 통제감을 높임으로써 무기력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강한 업무의욕을 갖게끔 하여 구성원에게 커다란 성취감을 준다.

넷째, 임파워먼트는 구성원들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역량의 형성을 강조한다. 조직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상부의 조언이나 허락없이도 상황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구성원들을 필요로 하는데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해준다.

3.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통합모델적 관점에서 개인특성이 업무환경요인과 결합하여 개인에게 임파워먼트를 주게 되며, 이에 따라 창의적 행동 및 창의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변인, 성격변인, 업무환경변인 중에서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 1-1. 자기결정감에 유의한 영향변인은 무엇인가?
- 1-2. 역량감에 유의한 영향 변인은 무엇인가?
- 1-3. 의미성에 유의한 영향 변인은 무엇인가?
- 1-4.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임파워먼트가 창의적 행동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1. 임파워먼트가 창의적 의견제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2. 임파워먼트가 창의적 업무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3. 임파워먼트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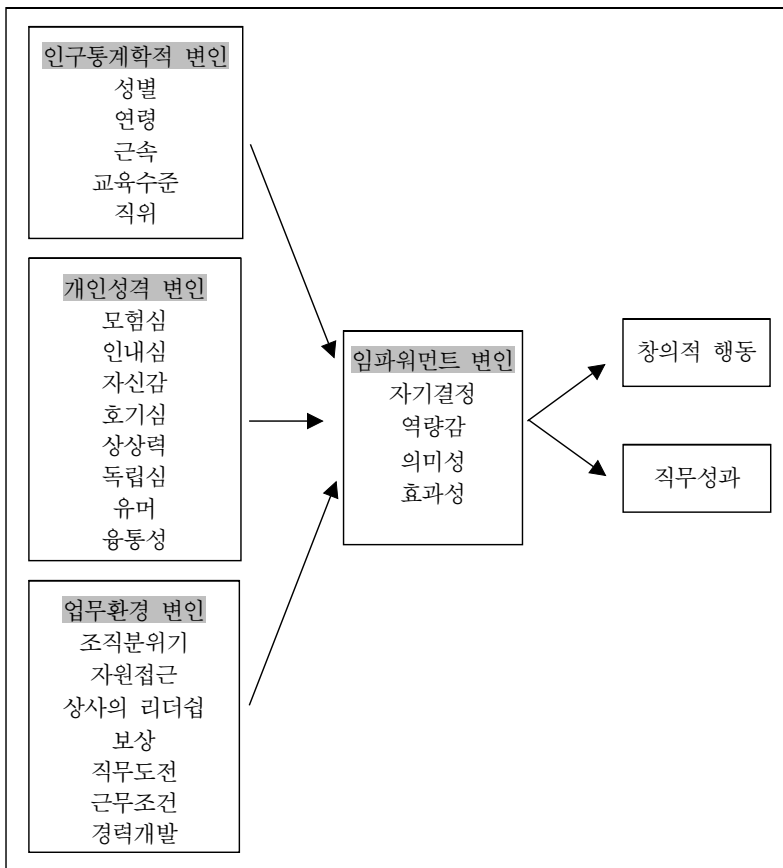
연구문제 3.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격변인, 업무환경변인, 임파워먼트 변인 중에서 우리나라 광고인들의 창의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 1-1. 창의적 의견제시에 유의한 영향 변인은 무엇인가?
- 1-2. 창의적 업무활동에 유의한 영향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격변인, 업무환경변인, 임파워먼트 변인 중에서 우리나라 광고인들의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연구모형

창의적 결과 도출과정을 이루는 변인들간의 연결관계(network of relationship)를 나타내는 이론모델은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그림 6>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6> 연구모형

3) 표본의 선정과 자료의 수집

이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01년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바쁜 광고인들에게 보다 신뢰성있는 응답을 얻기 위해 연구자가 각 연구대상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각사의 임원 및 팀장을 만나 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부원들의 성실한 응답을 부탁했다. 총 300개의 설문지중 회수된 설문지는 총 243개로 설문회수율은 81%였다.

4) 측정변인의 신뢰도 검증

이 연구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5) 분석방법

이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격변인, 업무환경변인, 임파워먼트 변인 등 광고인의 창의적 행동 및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예측변인 그룹들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의 수와 입력순서를 달리한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데 독립 변수들간에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을 찾아내기 위해 회귀방정식에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법중 “단계적 투입”(stepwise)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임파워먼트변인의 경우, 창의적 행동 및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이기도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격변인, 업무환경변인의 종속변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행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파워먼트와 종속변인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1> 각 요인 신뢰도 검정결과

분 류	측정변인(항목)	신뢰도계수	항목제외시 신뢰도계수	제외 항목
개인성격	모험심(A1-5)	.8504	-	-
	인내심(A6-10)	.8205	-	-
	호기심(A11-15)	.8394	.8591	A11
	유머(A16-19)	.8821	.9265	A19
	독립심(A20-24)	.7286	-	-
	융통성(A25-29)	.6477	-	-
	자신감(A30-34)	.7411	-	-
	상상력(A35-39)	.6127	.6411	A37,38,39
업무환경	직무도전(B1-6)	.8535	.8806	B4,6
	경력개발(B7, 8)	.5911	-	-
	주변자원(B11-15)	.8100	-	-
	공식적지원 부족 (B16,17)	.6317	-	-
	상사의리더쉽(C1-7)	.9331	.9353	C1,7
	조직분위기(C8-15)	.8718	-	-
	보상(D1-6)	.8697	.8842	D1
	저해적 근무조건 (E1-5)	.7074	.8595	E3,4,5
임파워먼트	자기결정감(D7-9)	.8634	.8865	D7
	역량감(D10-12)	.8329	-	-
	의미성(D13-15)	.9221	.9252	D13
	효과성(D16-18)	.8430	-	-
창의적 행동	창의적 의견제시 (F1,2,3,5)	.8181	-	-
	창의적 업무활동 (F4,7,8,10,12)	.7388	-	-
직무성과	직무성과(G1-4)	.8552	-	-

4.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격변인, 업무환경변인중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변인은 자기결정감, 역량감, 의미성, 효과성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측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자기결정감 예측변인

<연구문제 1-1>의 분석에서는 세 블록의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이들 세 블록의 독립변인들 가운데 어떠한 독립변인이 자기결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을 구성하는 3의 단계 각각에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출된 R^2 값과 R^2 값의 증가분, 베타계수, t값 그리고 유의도를 요약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회귀분석결과 자기결정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직위, 성격변인중 인내심과 독립심, 업무환경 변인 중 조직분위기와 주변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감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절차의 결정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가와 업무수행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직위의 설명력은 6.6%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위만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회귀방정식이 자기결정감 변량의 6.6%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위는 자기결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인으로서, 직위가 높을수록 자기결정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직위에 이어 성격변인중 어떤 변인이 자기결정감에 설명력을 나타내는 변인인가를 밝히기 위해 두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내심과 독립심이 자기결정감에 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R^2 증가분은 6.9%). 직위, 인내심, 독립심에

<표 2> 자기결정감 영향요인의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들	β	t	p
직위	.257	4.011	.000
1단계후 R^2	.066		
직위	.246	3.936	.000
인내심	.167	2.469	.014
독립심	.149	2.217	.000
2단계후 R^2	.135		
2단계후 R^2 증가분	.069		
직위	.231	4.139	.000
인내심	.131	2.166	.031
독립심	.129	2.142	.033
조직분위기	.276	4.362	.000
주변자원	.225	3.526	.001
3단계후 R^2	.319		
3단계후 R^2 증가분	.184		

이러 업무환경 변인 중에서는 어떤 변인이 자기 결정감에 설명력을 나타내는 변인인가를 밝히기 위해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업무환경 변인 중에서는 조직분위기와 주변자원이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R^2 증가분은 18.4%). 이러한 유의한 영향변인들을 하나의 모형속에 포함시킨 최종 회귀모형에서 5개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결과, 자기결정감에는 조직분위기($\beta=0.276$)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직위($\beta=0.231$), 주변자원($\beta=0.225$), 인내심($\beta=0.131$), 독립심($\beta=0.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직위가 높을수록, 인내심이나 독립심이 높을수록 자기결정감을 더 많이 갖게 되며, 조직차원에서 개인에게 자기결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참여적 조직분위기나 풍부한 주변자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이상적인 조직분위기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율성이 있으며, 권한을 이양시키고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Van Gundy(1987)의 연구결과와도 부합된다. 또한 임파워된 조직은 참여적 의사결정체로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 Vogt & Murell(1990)의 연구결과와도 부합되는 결과라 하겠다.

나. 역량감 예측변인

<연구문제 1-2>의 회귀분석결과, 역량감(competence)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근속년수와 성격변인 중 인내심, 자신감, 모험심, 독립심, 호기심, 상상력, 그리고 업무환경변인 중에서는 조직분위기와 근무조건, 직무도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역량감이란 과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기술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을 말하며, 개인의 숙달, 노력-성과의 기대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역량감은 “나는 나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숙달하고 있다”, “나는 직무수행능력에 자신이 있다”, “과업을 수행하는 나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 등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각 블록의 설명력을 검증해 본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근속)의 설명력은 11.9%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역량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속년수에 이어 성격변인 중 어떤 변인이 역량감에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는가를 밝히기 위해 두 번째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내심, 자신감, 모험심, 독립심, 호기심, 상상력의 설명력이 24.6%로 나타남으로써 역량감에 성격변인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업무환경 변인 중에서는 어떤 변인이 역량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분위기가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외에 저해적 근무조건과 직무도전도 유의한 영향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량감에는 성격변인(R^2 증가분은 24.6%), 인구통계학적 변인(R^2 증가분은 11.9%), 업무환경변인(R^2 증가분은 4.9%)의 순으로 설명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단계에서 유

의한 영향변수로 추출된 독립변인들을 하나의 회귀모형에 포함시킨 최종단계의 회귀분석결과 상상력변인은 뒤에 입력된 변수의 통제로 인해 최종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한 변수에서 제외되었다. 역량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최종모형에서 베타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호기심($\beta = -0.155$)과 저해적 근무조건($\beta = -0.164$)은 역량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속($\beta = 0.235$), 독립심($\beta = 0.212$),

<표 3> 역량감 영향요인의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들	β	t	p
근 속	.345	5.551	.000
1단계후 R^2	.119		
근 속	.260	4.683	.000
인내심	.182	2.722	.007
자신감	.153	2.431	.016
모험심	.205	3.341	.001
독립심	.190	2.899	.004
호기심	-.173	-2.669	.008
상상력	.133	2.119	.035
2단계후 R^2	.365		
2단계후 R^2 증가분	.246		
근 속	.235	4.304	.000
인내심	.191	2.888	.004
자신감	.119	1.918	.056
모험심	.196	3.294	.001
독립심	.212	3.318	.001
호기심	-.155	-2.466	.014
상상력	.077	1.231	.220
조직분위기	.114	2.076	.039
저해적 근무조건	-.164	-2.920	.004
직무도전	.144	2.261	.025
3단계후 R^2	.414		
3단계후 R^2 증가분	.049		

모험심($\beta = 0.196$), 인내심($\beta = 0.191$), 직무도전($\beta = 0.144$), 자신감($\beta = 0.119$), 조직분위기($\beta = 0.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근속년수가 높아질수록, 독립심이나 모험심, 인내심, 자신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역량감이 높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 성격변인 중에서 호기심의 경우는 오히려 역량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업무환경요인 중 저해적 근무조건도 역량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조직차원에서 개인에게 역량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도전할만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과 참여적 조직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다. 의미성 예측변인

<연구문제 1-3>에 제기된 의미성 영향요인의 회귀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는 의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 두 번째 블록인 성격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인내심과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환경 변인 중 어떤 변인들이 의미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 실시결과 직무도전과 보상이 의미성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영향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한 최종 회귀분석에서, 자신감은 뒤에 입력된 직무도전성의 통제영향으로 인해 최종 회귀모형에서 삭제되었다.

최종모형에서 의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세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베타계수를 살펴본 결과, 직무도전($\beta = .549, p = .000$), 보상($\beta = .217, p = .000$), 인내심($\beta = .116, p = .023$)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를 느끼는 데 업무환경면에서 직무도전성과 보상이 높을수록, 개인 성격면에서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의미성을 더 많이 느낀다는 점을 말해준다.

<표 4> 의미성 영향요인의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들	β	t	p
인내심	.300	4.766	.000
자신감	.189	3.010	.003
2단계후 R ²	.153		
인내심	.116	2.296	.023
자신감	.082	1.630	.105
직무도전	.549	10.296	.000
보상	.217	4.417	.000
3단계후 R ²	.507		
3단계후 R ² 증가분	.354		

라. 효과성 예측변인

<연구문제 1-4>를 해결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효과성(impact)이란 개인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서, 개인의 실무적 결정들이 업무 및 부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 직위 및 연령의 설명력이 23.3%로 나타남으로써 성격변인이나 업무환경 변인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도 직위($\beta = .293$, $p = .005$)가 연령($\beta = .211$, $p = .041$)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즉, 직위 및 연령이 높아질수록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직위, 연령에 이어 성격변인 가운데서는 인내심과 상상력이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두 변인 중에서도 인내심($\beta = .185$, $p = .002$)이 상상력($\beta = .177$, $p = .003$)보다 더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성격변인의 설명력 증가분은 8.4%로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업무환경변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위, 연령, 인내심, 상상력에 이어 업무환경변인 중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세 번째 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

본 결과 업무환경변인 중에서는 직무도전($\beta = .260, p = .000$), 상사의 리더쉽($\beta = .163, p = .005$), 조직분위기($\beta = .145, p = .016$), 주변자원($\beta = .134, p = .015$)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식적 지원 부족($\beta = -0.102, p = .036$)은 효과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연구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과 같은 공식적 지원부족은 개인이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통제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인(R^2 증가분은 23.3%), 업무환경변인(R^2 증가분은 21.2%), 성격변인(R^2 증가분은 8.4%)의 순으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수로 추출된 독립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최종 회귀모형에서 연령 및 상상력 변인은 뒤에 입력된 변인의 통제로 인해 최종 회귀모형에서는 삭제되었다. 최종 회귀모형에서 나타난 각 독립변인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결과를 보면, 직위($\beta = .338$), 직무도전($\beta = .260$), 상사의 리더쉽($\beta = .163$), 조직분위기($\beta = .145$), 주변자원($\beta = .134$), 공식적 지원부족($\beta =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업무나 부서에 대한 영향력을 느끼는 데 직위변수가 가장 큰 예측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환경면에서는 직무도전성이 높을수록, 상사의 리더쉽이 변혁적일수록, 조직분위기가 참여적일수록, 주변자원이 풍부할수록 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 준다.

<표 5> 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들	β	t	p
직 위	.293	2.857	.005
연 령	.211	2.059	.041
1단계후 R^2	.233		
직 위	.330	3.381	.001
연 령	.156	1.591	.113
인내심	.185	3.168	.002
상상력	.177	3.056	.003
2단계후 R^2	.317		
2단계후 R^2 증가분	.084		
직 위	.338	4.103	.000
연 령	.118	1.416	.158
인내심	.094	1.821	.070
상상력	.031	.587	.558
직무도전	.260	4.646	.000
조직분위기	.145	2.419	.016
상사의 리더쉽	.163	2.822	.005
주변자원	.134	2.452	.015
공식적 지원부족	-.102	-2.109	.036
3단계후 R^2	.529		
3단계후 R^2 증가분	.212		

2)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는 임파워먼트가 창의적 행동,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임파워먼트변인의 간접효과 및 매개변인으로서의 설명력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표 6>, <표 7>, <표 8>과 같다.

임파워먼트는 창의적 의견 제시에는 27.5%, 창의적 업무활동에는 34.8%, 직무성과에는 42.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세 가지 종속변인 모두에서 자기결정을 제외한 역량감, 의미성, 효과성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창의적 의견제시에서는 역량감($\beta = .319, p = .000$), 효과성($\beta = .256, p = .000$), 의미성($\beta = .131, p = .035$)의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창의적 업무활동에서는 역량감($\beta = .324, p = .000$), 의미성($\beta = .236, p = .000$), 효과성($\beta = .161, p = .0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창의적 행동에 역량감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창의적 의견제시에는 효과성이, 창의적 업무활동에는 의미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무성과에서는 의미성($\beta = .339, p = .000$), 역량감($\beta = .317, p = .000$), 효과성($\beta = .169, p = .009$)의 순으로 의미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파워먼트 하위변인 중 창의적 행동에는 역량감이, 직무성과에는 의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6> 임파워먼트와 창의적 의견제시의 영향관계

독립변인들	β	t	p
자기결정	-.094	-1.391	.166
역량감	.319	4.718	.000
의미성	.131	2.118	.035
효과성	.256	3.532	.000

$R^2 = 0.275, F=22.433, p<0.05$.

<표 7> 임파워먼트와 창의적 업무활동의 영향관계

독립변인들	β	t	p
자기결정	.039	.603	.547
역량감	.324	5.055	.000
의미성	.236	4.026	.000
효과성	.161	2.340	.020

$R^2 = 0.348, F=31.648, p<0.05$.

<표 8> 임파워먼트와 직무성과의 영향관계

독립변인들	β	t	p
자기결정	.010	.162	.871
역량감	.317	5.289	.000
의미성	.339	6.176	.000
효과성	.169	2.625	.009

$R^2 = 0.428$, $F = 44.387$, $p < 0.05$.

3) 연구문제 3의 결과

<연구문제 3>은 광고인의 창의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변인을 찾아내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창의적 행동은 창의적 의견제시와 창의적 업무활동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이의 선행변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격변인, 업무환경 변인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임파워먼트 변인도 포함시켰다. 이들 네 블럭의 변수그룹 중 어떤 변인이 유의한 영향변인인가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창의적 의견제시 예측변인

<연구문제 1-1>에 제기된 창의적 의견제시의 결과를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유의한 영향변인은 성별로 나타났다. 성별은 창의적 의견제시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6.3%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자보다 남자가 창의적 의견제시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성격변인 중 어떤 변인이 창의적 의견제시에 설명력을 나타내는 변인인가를 밝히기 위해 두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상력과 모험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상력이 모험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성별, 상상력, 모험심에 이어 업무환경변인 중에서는 조직분위기와 저해적 근

무조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 변인들의 영향력에 더하여 임파워먼트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네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량감($\beta = .214, p = .001$)과 효과성($\beta = .198, p = .002$)은 창의적 의견제시에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결정감과 의미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창의적 의견제시에 임파워먼트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격변인, 업무환경 변인과 창의적 의견제시와의 관계에 7.0%의 설명력을 나타냄으로써 매개변인으로서 간접효과를 갖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변인별 상대적 영향력 비교결과 상상력, 모험심과 같은 성격 변인이 33.0%의 설명력을 가짐으로써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임이 밝혀졌다. 다음으로는 역량감, 효과성과 같은 임파워먼트 변인의 설명력이 7.0%, 성별요인이 6.3%, 조직분위기나 저해적 근무조건등과 같은 업무환경 변인은 4.4%로 드러나 업무환경 변인이 설명력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요인은 창의적 의견제시와 부적인 영향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으며, 저해적 근무조건은 역량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창의적 의견제시에는 오히려 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의견제시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각 변인그룹에서 유의한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한 최종 회귀분석에서 각 개별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본 결과 상상력($\beta = .391$), 역량감($\beta = .214$), 효과성($\beta = .198$), 조직분위기($\beta = .139$), 모험심($\beta = .129$), 저해적 근무조건($\beta = .125$), 성별($\beta =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성격면에서는 상상력과 모험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한 임파워먼트면에서는 역량감과 효과성을 많이 느낄수록 창의적 의견제시를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창의적 의견제시를 높이려면 업무환경측면에서는 조직분위기와 근무조건이 유의한 영향변인임이 밝혀졌다.

<표 9> 창의적 의견제시 영향요인의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들	β	t	p
성별	-.251	-3.921	.000
1단계후 R^2	.063		
성별	-.208	-3.995	.000
상상력	.498	9.536	.000
모험심	.233	4.422	.000
2단계후 R^2	.401		
2단계후 R^2 증가분	.330		
성별	-.173	-3.381	.001
상상력	.454	8.805	.000
모험심	.223	4.348	.000
조직분위기	.183	3.585	.000
저해적 근무조건	.105	2.047	.042
3단계후 R^2	.445		
3단계후 R^2 증가분	.044		
성별	-.123	-2.495	.013
상상력	.391	7.752	.000
모험심	.129	2.467	.014
조직분위기	.139	2.483	.014
저해적 근무조건	.125	2.511	.013
역량감	.214	3.487	.001
효과성	.198	3.170	.002
4단계후 R^2	.515		
4단계후 R^2 증가분	.070		

나. 창의적 업무활동 예측변인

<연구문제 1-2>를 검증하기 위해 계층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창의적 업무활동에 유의한 영향변인은 근속년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즉,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창의적 업무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근속년수에 이어 성격변인 중 창의적 업무활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인내심, 상상력, 자신감, 모험심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6.3%로서 창의적 업무활동에서도 창의적 의견제시와 마찬가지로 성격변인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또한 창의적 의견제시와 비교해볼 때, 상상력과 모험심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이 검증되었으며, 그 외에 창의적 업무활동에서는 인내심과 자신감도 매우 중요한 예측변인임이 밝혀진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업무환경변인 중에서는 주변자원과 직무도전이 창의적 업무활동을 설명하는 변인임이 밝혀졌으며, 주변자원이 직무도전보다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더 높았다. 이러한 선행변인에 이어 임파워먼트가 창의적 업무활동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네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파워먼트 변인 중에서는 역량감($\beta = .243, p = .000$)과 의미성($\beta = .140, p = .046$)이 유의하였으며, 역량감이 의미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의적 의견제시에는 임파워먼트 요인 중 역량감과 효과성이, 창의적 업무활동에는 역량감과 의미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임파워먼트 요인의 설명력이 6.9%로서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성격변인, 업무환경 변인과 창의적 업무활동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간접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단계에서 도출된 유의한 9개의 영향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한 최종 통합 회귀모형에서 창의적 업무활동에 유의한 영향변수로 검증된 것은 인내심, 주변자원, 역량감, 의미성으로 나타났다. 각 개별변인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 창의적 업무활동에서는 역량감($\beta = .243$), 인내심($\beta = .198$), 주변자원($\beta = .196$), 의미성($\beta = .140$)순으로 예측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역량감과 의미성을 느낄수록 창의적 업무활동이 많아진다는 점을 말해주며, 개인성격면에서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업무환경면에서는 주변자원이 풍부할수록 창의적 업무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해준다.

<표 10> 창의적 업무활동 영향요인의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들	β	t	p
근 속	.242	3.770	.000
1단계후 R^2	.059		
근 속	.163	2.874	.004
인내심	.280	4.331	.000
상상력	.171	2.774	.006
자신감	.156	2.559	.011
모험심	.135	2.159	.032
2단계후 R^2	.322		
2단계후 R^2 증가분	.263		
근 속	.123	2.260	.025
인내심	.261	4.237	.000
상상력	.084	1.383	.168
자신감	.108	1.865	.063
모험심	.091	1.526	.129
주변자원	.247	4.507	.000
직무도전	.161	2.675	.008
3단계후 R^2	.407		
3단계후 R^2 증가분	.085		
근속	.042	.734	.463
인내심	.198	3.288	.001
상상력	.070	1.218	.225
자신감	.068	1.200	.232
모험심	.042	.739	.461
주변자원	.196	3.421	.001
직무도전	.012	.164	.870
역량감	.243	3.714	.000
의미성	.140	2.010	.046
4단계후 R^2	.472		
4단계후 R^2 증가분	.065		

4) 연구문제 4의 결과

<연구문제 4>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격변인, 업무환경변인, 임파워먼트 변인 중 광고인의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이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표 11> 참조).

첫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는 근속년수가 5.9%의 설명력을 가진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 회귀분석결과, 성격변인 중에서는 모험심, 인내심, 자신감이 유의한 변인으로 드러났으며 10.3%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 회귀분석 결과 업무환경변인 중에서는 직무도전성만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3.4%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적 행동에는 성격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직무성과에서는 업무환경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네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임파워먼트 변인의 설명력을 검증해 본 결과, 창의적 업무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역량감과 의미성이 유의한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계별 회귀분석에서 직무성과에 유의한 변인으로 도출된 7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최종 회귀모형에서는 근속, 인내심, 자신감등의 변수가 뒤에 입력된 변수의 통제영향을 받아 유의한 변수군에서 삭제되었다. 최종회귀모형에서 유의한 변수로 살아남은 모험심, 직무도전, 역량감, 의미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베타계수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역량감($\beta = .245$), 직무도전($\beta = .215$), 의미성($\beta = .175$), 모험심($\beta =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무성과에서 임파워먼트 변인 중에서는 역량감과 의미성이, 성격면에서는 모험심이, 업무환경면에서는 직무도전성이 가장 결정적인 예측변수임을 말해준다.

<표 11> 직무성과 영향요인의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들	β	t	p
근 속	.243	3.775	.000
1단계후 R^2	.059		
근 속	.159	2.684	.008
인내심	.216	3.282	.001
모험심	.223	3.414	.001
자신감	.191	3.213	.002
2단계후 R^2	.262		
2단계후 R^2 증가분	.103		
근 속	.100	1.837	.068
인내심	.126	2.063	.040
모험심	.188	3.171	.002
자신감	.093	1.682	.094
직무도전	.409	7.051	.000
3단계후 R^2	.396		
3단계후 R^2 증가분	.134		
근 속	.012	.213	.831
인내심	.053	.902	.368
모험심	.129	2.280	.024
자신감	.043	.810	.419
직무도전	.215	3.054	.003
역량감	.245	3.089	.000
의미성	.175	2.590	.010
4단계후 R^2	.481		
4단계후 R^2 증가분	.085		

5.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와 요약 및 논의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광고인들은 당연히 창의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들이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광고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다른 예술분야와는 달리 광고는 개인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조직환경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창의적 행동 및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을 크게 인구통계학적 변인그룹, 개인성격 변인그룹, 업무환경 변인그룹, 임파워먼트그룹으로 나누어 계층적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변인으로서의 설명력, 유의성,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이론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선행변인들 중에서 광고인의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검증되었다. 즉, 1) 업무 및 부서에 대한 재량권을 말하는 자기결정감에 광고인들은 직위가 높을수록 자기결정감이 높아지며, 성격차원에서는 인내심과 독립심이 자기결정감을 갖게 하는데 유의한 영향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조직차원에서 개인에게 자기결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조직분위기의 조성과 주변자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과업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역량감에서는 근속년수가 높아질수록 역량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내심, 자신감, 모험심, 독립심, 호기심 등 다양한 성격요인이 역량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또한 조직차원에서 참여적 조직분위기와 직무도전성이 중요한 영향변인이며, 저해적 근무조건은 역량감에 부적인 영향변인임이 밝혀졌다. 3)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를 말하는 의미성에서는 인내심이 강할수록 의미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직차원에서는 직무도전성과 보상이 유의한 변인임이 검증되었

다. 4) 부서 및 업무에 대한 영향력이나 통제정도를 말하는 효과성에서는 직위가 높을수록, 인내심이 높을수록 효과성이 높아짐이 검증되었다. 조직차원에서는 도전할만한 직무일수록, 참여적 조직분위기일수록, 상사의 리더쉽이 변혁적일수록, 주변자원이 풍부할수록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회사의 자금이나 인력지원 등 공식적 지원의 부족은 효과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둘째, 창의적 행동 및 직무성과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독립적인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임파워먼트는 직무성과를 가장 잘 설명해주며, 창의적 업무활동, 창의적 의견제시의 순으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nnis(1984)에 의하면, 임파워된 사람은 과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직무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과 원만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 광고인의 경우 이러한 임파워먼트를 통한 직무충실화는 창의적 행동과 직무성과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유승동(1998)과 배고은(1999)등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임파워먼트 변인은 선행변인과 종속변인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 이 연구결과에서도 임파워먼트 요인이 창의적 행동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단독 영향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통합모형에서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창의적 업무활동과의 영향관계에 역량감, 의미성 외에 효과성도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층적 회귀분석에서 임파워먼트요인의 설명력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에 비해 단독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설명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임파워먼트가 창의적 행동 및 직무성과에 대해 다른 변인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격변인, 업무환경변인, 임파워먼트 변인 중에서 광고인의 창의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변인이 밝혀졌다. 즉 1) 창의적 의견제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창의적 의견제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면에서 상상력과 모험심이, 업무환경변인 중에서 참여적 조직분위기와 저해적 근무조건이 유의한 영향변인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저해

적 근무조건의 경우 역량감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창의적 의견제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량감과 효과성이 높을수록 창의적 의견제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자기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부서에 대한 통제권이 높을수록 창의적 의견제시가 많음을 말해준다. 이와 비교하여 2) 창의적 업무활동에 유의한 영향변인은 인내심, 주변자원, 역량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내심이 강하고 역량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공동작업 및 개선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직차원에서는 주변자원이 창의적 업무활동에 유의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또한 임파워먼트요인중 역량감은 창의적 의견제시 및 창의적 업무활동 모두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변인이었으며, 역량감 다음으로 창의적 의견제시에는 효과성이, 창의적 업무활동에는 의미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변인임이 밝혀졌다.

넷째, 광고인의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변인이 검증되었다.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변인으로서는 역량감, 직무도전, 의미성, 모험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역량감과 직무도전성이 다른 요인보다도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임파워먼트 요인 중에서는 창의적 업무활동과 마찬가지로 역량감과 의미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상 모험심이 많고,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직무성과가 높을 수 있으며, 조직은 구성원에게 적절히 도전할만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이 연구는 지금까지 창의성과 관련한 심리학적 연구들과, 사회심리학적 연구들로부터 통합적 연구의 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선행요인들과 임파워먼트, 창의적 행동 및 직무성과간의 영향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조망을 통해 광고창의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해졌으며, 또 조직차원에서 창의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준거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설문응답의 효과성과 분석의 제한점으로 인해 창의성과 관련된 수많은 변인들 중에서 한정된 변인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구성요소들간의 인과관계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창의적 행동 및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데 주관적 평가에만 의존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창의성이 도출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즉, 개인특성이 조직환경과 결합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개인수준의 창의성이 집단 및 조직수준의 창의성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에서 단계별로 요구되는 변인도 달라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간적 흐름 및 문제해결과정 단계에 따른 통합적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창의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에 앞서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도구의 과학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영안 역(1994),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서광사, 24면.
- 배고은(1999), 「심리적인 임파워먼트가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승동(1998), 「변혁적 리더십, 임파워먼트, 창의성간의 상관관계 모델의 탐색」, 『경영논집』, 237~287면.
- 유창조·김광수·김철민·신강균·이화자(2000), 「한국광고의 창의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학회.
- 유창조·김광수·신강균·김철민·이화자(2001), 「광고창의성의 구성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제12권 3호.
- 최종인·김인수(1996), 「개인창의성 연구의 개념적 고찰」, 『경영연구』, 제30권 제1호, 69면.

- Amabile, T. M.(1988), “A Mode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 Behavior*, 10: pp. 123~167.
- _____ (1990), *The work environment inventory*, version 4. Greensboro. N. C.;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 _____ (1995), *KEYS; Assessing the climate for creativity*. Instrument published by the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Greensboro, NC.
- Amabile, T. M., Burnside, R. & Gryskiewicz, N.(1995), User’s guide for KEYS; Assessing the climate for creativity, Greensboro. N.C.;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 Amabile, T. M., Conti, R., Coon, H. Lazenby, J. & Herron, M.(1996), Assessing the work environment for creativ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 pp. 1154~1184.
- Ashforth, B. E.(1989), The Experience of powerlessness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43: pp. 207~242.
- Bailyn, L.(1985), Autonomy in the Industrial R&D, *Human Resource Management*, 24: pp. 129~146.
- Barron, F.(1968), *Creativity and personal freedom*. New York: Van Nostrand.
- Bennis, W. G.(1984), “Goal Managers and Good Leaders,” *Across the Board*, 2: pp. 7~11.
- Conger, J. A. & Kanungo, R. N.(1988), “The empowerment proces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pp. 471~482.
- Csikszentmihalyi, M.(1999), “Implications of a Systems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Creativity”, In Robert J. Sternberg(Ed.), *Handbook of Creativity*, (pp. 313~335), Cambridge; MA: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ci, E. L., Connell, J. P. & Ryan, R. M.(1989), Self-determination in a Work Organiz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 pp. 580~590.

- Les Jones(1993), "Barriers to creativity and their relationship to individual, group, and oganizational behavior", *Nurturing and developing creativity; The emergence of a discipline*, pp. 136.
- MacKinnon, D. W.(1965), Personality and the realization of creative potential. *American Psychologist*, 20: pp. 273~281.
- Rhodes, M.(1987), An Analysis of Creativity. In S. G. Isaksen(Ed.), *Frontiers of creaitivity research; Beyond the basics*(pp. 216~222), uffalo, NY: Bearly Limited.
- Spreizer, G. M.(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 pp. 1442~1465.
- Thomas, K. W. & Velthouse, B. A.(1990),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 pp. 666~681.
- Van Gundy, A. B.(1987), Organizational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S. G. Isaksen(Ed.), *Frontiers of creativity research; Beyond the basics*(pp. 358~379), Buffalo, NY: Bearly Limited.
- Vogt, J. F. & Murell, K. L.(1990), Empowerment in Organization; How to spark Exceptional Performance(Sandiego, CA: University Associate, Inc.).
- Woodman, R. W. & Schoenfeldt, L. F.(1990), An interactionist model of creative behavior,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4: pp. 279~290.